

인권정보자료실  
R1.1.9

# 인권하루소식

합본9호  
(97년 하반기)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합본9호 (97년 하반기)

인  
기  
인권정보자료실  
R1.1.9  
사  
랑  
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 인권하루소식

97년 11월

(제998호 - 제1018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 일(토)

제 9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삼척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삼척특수강 노동자 44명이 지난 16일부터 16일째 집단단식을 벌이고 있다.

올 2월 창원특수강(포항제철 자회사)의 삼척특수강 인수과정에서 일터를 잃게 된 이들은 '위장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3월 24일부터 7개월간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창원특수강 공장 앞에서 단식에 돌입하면서 장기기증까지 결의하는 등 사실상 포철측에 최후통첩장을 보냈다.

또한 지난 9월 18일부터 관계당국과 포철 경영진, 삼척특수강 노조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온 민변 등 20여 개 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를 '사실상의 위장정리해고'로 결론내리면서 "포철은 정상적인 영업인수 과정을 다시 밟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성실히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촉구

진상조사단(공동위원장 박형규 목사)은 31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포철의 행위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정리해고를 탈법적이고 기만적인 자산 매매계약 방식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포철의 행위를 방지할 경우, 모든 사기업들이 포철식의 위장정리해고 방식을 모방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 노동자들은 "포철과 경영진의 계약이 사실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도 포괄고용승계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포철측의 거부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천9백78명에 대한 채용 약속부터 지켜 2백여 명을 조건없이

우선 채용하고, 고용승계의 논란은 그 후 법적으로 다투자"고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포철측은 "계약상 근로자 승계를 양기로 명문화하는 등 '영업양도'가 아니라 '자산매매계약'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포철은 인수계약에 앞서 삼척특수강 2천3백42명의 노동자 가운데 1천9백78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구두합의한 바 있으나, 실제 신규채용된 인원은 1천7백62명에 불과해, 5백80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은 상황이다(본지 5월 23일자 참조).

"창원지방세무서 '사실상 영업양도' 현 사태와 관련한 관계당국의 판단은 아직 제각각이다. 노동부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재정경제원은 포철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창원지방세무서 측은 "사실상 포괄적 영업양도이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공민배 창원시장과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10월 25일과 28일 각각 단식 농성을 방문했으며, 김 지사는 "김만제 포철회장과 대화창구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31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 사회단체들도 앞으로 각계인사 2천명 가량의 서명을 받고, 국회·청와대·대선후보 등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로 하는 등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 한국후꼬꾸 노조 재정사업

명동성당 농성이 10월 31일 현재 1백7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후꼬꾸 노조(노조위원장 윤동만)에서는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재정사업을 벌인다. 후꼬꾸 노조는 현재 전국 순회투쟁과 폭력근절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11월말경 일본 원정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정사업을 위해 양말(1박스 6컬레, 1만원)을 판매한다.

문의: 02-776-2124, 017-623-3852

### 대합변협 노조 창립

31일 대한변호사협회노동조합(노조위원장 강길민)은 지난 10월21일 노조를 설립, 본격적인 노조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노조는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체이다.

### 11월 5일, 여러분을 모십니다

“지령 1천호, <인권하루소식>이 만난 사람들”

오는 11월 5일 <인권하루소식>이 지령 1천호를 맞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령 1천호를 맞아 문민정권의 인권피해자들, 인권의 이정표 하나하나를 세웠던 승리자들, <인권하루소식>에 떼파 지해, 박수를 보태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인권하루소식>과 함께하는 '인권의 밤'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 때: 11월 5일(수) 오후 6시 ■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 <인권하루소식> 97년 10월분 총목차 (976-997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976	10/1	1	시민폭행지사 경찰 실행신고, 민병일 씨 유족 "사인규명 미흡"/동아대간첩단사건 조작의혹, "진술 뿐 증거없다"/주요 공판 안내
		2-3	9월 총목차(976-997호)/사랑방 만평
호외5	10/1	1	제2회 인권영화제 긴급속보-1일 새벽 1시45분 흥익대 침탈, 인권운동사랑방 압수수색 예상
977	10/2	1	탄압 뚫고 곳곳이 상영... 경찰, 서준식 위원장 출두 요구/인권·사회단체, 공동대응 움직임
		2	한국후교구 농성 78일, 박순덕 비대위 54일째 명성농성 중/전국연합, 경제인 특별사면 반대/국민승리21, 전노사면지지 특별위 설치/인권영화제 '장애인' 영화 <시그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호외6	10/2	1	제2회 인권영화제 속보(밤 10시 현재) "흥익대가 위협합니다"
978	10/4	1	양심수 소식 '교회'에 악영향, 재소자 알 권리 보장돼야/사랑방 만평
		2	인권영화제 기자제 첫 압수...국제엠네스티, 영화제 탄압 항의/불교인권위 서래스님 항소준비에 도 움을/한 권의 책 <국제엠네스티> (9/10월호)
979	10/7	1	당국, 인권영화제 필사지지...항의·연장·지방순회 상영으로 맞서
		2	하혈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재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주간인권흐름 (9월29일-10월5일까지)
		3	<인권시평> 10월 단상(이석태 변호사)
980	10/8	1	철거현황 폭력·성추행 되풀이, 속옷차림에 집단구타/군사독재하 한국인권의 전달자' 소마 노부오 주교 별세
		2	민주택시연맹 최도근 위원장 분신, 민주노총 "분신책임은 정부당국"/여연, 여성문화한마당/국민승리21, 전노사면 반대 캠페인
981	10/9	1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치료는 본인부담"/서준식 씨, 경찰 출두조사/민주택시연맹, 건교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예정
		2	행당 1-2 지구 폭력·성폭행 현장 증언 "우릴 발가벗겨 거리로 내모는가!"/사랑방 만평
982	10/10	1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노건연, 산업안전활동가 강좌
		2	민가협 목요집회, 조작간첩 폭로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민언련, 방승3사 사과 촉구 "극우토론회 방영배경 밝혀라"/민가협 기금마련 장터/국정감사 자료 (내무위) 문민정부 철거현황
983	10/11	1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도서열독권 침해 반발에 구타/공안당국 "토론회도 안돼"...학생운동 혁신토론회 불발 위기
		2	<인터뷰> 김삼석 (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984	10/14	1	통신연대 설문조사, 통신인 61.6% '자기검열', 외부제재 경험도 30.4%/고 박순덕·김준배 폭력살인 규탄대회
		2	김준배 유가족 탄원서 제출 "진상규명·특진제 등 폐지"/주간인권흐름 (10월6일부터 12일까지)
985	10/15	1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가족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 열사 명예회복 공약화 촉구/사랑방 만평
		2	광주교도소 양심수 대량징계 "4일 동안 포승에 묶여 밥도 못먹어"/<독자기고>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기사에 대한 의견
986	10/16	1	국제엠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인권정책 공약 당부 공개서한/부산국제영화제 참석자, 영화탄압·검열 항의/성폭력상담소 토론회, 남고생 90% 음란물 경험있어
		2	담당 변호사, 대한변협 정식보고 예정·재소자 구타 광주교도소 고발기로/2천만 여성이 대선에서 바라는 12가지 희망

### <인권하루소식> 97년 10월분 총목차 (976-997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987	10/17	1	안기부, 다시 물고문 ... 범민련 나창순 씨 7일간 항의단식 투쟁/사랑방 만평
		2	<나창순 씨 모두진술서> "열십자로 눕혀놓고 물을 얼굴에다 폭포처럼 쏟아 부었습니다"/청년 1만 인 선언운동 "전노 사면·정략적 개헌 반대"/김준배 씨 장례 18일 예정
988	10/18	1	법무부 국정감사 조흥규 의원,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광주교도소장 고발, 독직폭행·직권남용 혐의/폐업출판사 사장 등 3명 국보법 구속
		2	한국후교구, 명동성당 농성 93일째 "일본 가서 답관 짓겠다"/전자주민카드반대공대위 성명,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컴퓨터 통신인 18일 집회 "구속자 석방·통신자유" 촉구/<국감자료> 97년도 대학가 서점 압수수색 현황
989	10/21	1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20-30일 "고용안정, 해고자 복직" 촉구/김준배 씨 33일만에 장례, 전국연합 "한총련 탄압 중단" 촉구
		2	<인권시평> 욕망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3	아마가타 영화제를 다녀와서 (김태일 푸른영상 사무국장)/주간인권흐름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990	10/22	1	안기부, 공중전화 수심 곳 감청 ...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구속/사랑방 만평
		2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인권영화제 10개 지역상영 10월23일-11월30일/<국감자료> (내무위) -집시법 관련 검거현황 및 집행금지 권수와 금지사유
991	10/23	1	민병일 씨 사망 '국가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행당동 철거민 항의 잇따라, 적준용역 사장등 구속촉구/삼미특수강 43명 목숨건 단식투쟁/<국감자료> (내무위)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2	일본 요시마쓰 목사 등 강제출국, 제일동포 양심수 지원활동 이유/울산연합 정대연 씨 '간첩' 만나,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검거촉구/ '한국사회의 이해', 10차 공판 1년9개월만에 재개
992	10/24	1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감시단 주거권 보장 요구/사랑방 만평
		2	인천 인권영화제 탄압 뚫고 성황리 개막...당국 <레드헌트> 이적성 운운' 압수영장 발부/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이번주 드러나/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손민영 씨 만기출소
993	10/25	1	'인권영화제 죽이기' 극한, 인천 집행위원 3명 긴급체포/기아사태 관련 시위등중 노동자 2명 중상/전국연합, 안기부 불법행위 규탄/성폭력예방 거리문화제/북녘어린이 참상담은 자료집 출간
		2	여성의 전화, 매트는 여성 위한 쉼터 10주년 및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출간/전교조, 교총에 면담 제안 "교육개혁 힘 모으자"/<국감자료> (내무위) 전국교도소 재소자 현황 및 처우
994	10/28	1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창립 4주년, 백서발간·희생자 추모제/서정협 의장 연행
		2	'탄압'에 잘려나간 인권영화, 인천 인권영화제 이틀만에 조기중단/주간인권흐름 (10월20-26일)
995	10/29	1	한타 합의 안한만 못해, 노조민주화운동 사실상 공중분해/사랑방 만평
		2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국제엠네스티, 인권영화제 탄압 비난/과거청산위, 사면주장 비난/<국감자료> (외무통일위) 미군인 범죄 발생현황 등
996	10/30	1	대학교재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대학가 서점 4곳 대표 연행·압수수색/장기수 왕연안 씨 별세/59개 대학 경제·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발표, 삼성그룹 변칙·위법 세습 비난
		2	제1회 인권문화제 대성황, 전노사면 등 현안에 목소리 내기/각계인사 24명, 덕성여대 관선이사 파견 요청/서정협, 전상봉 의장 석방 촉구
997	10/31	1	안팎에서 몰아치는 학생운동 탄압, 경기대 언론사 기자 6명 단식투쟁/광주교도소 "인권위 조사 거부"/사랑방 만평
		2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언론출판 자유 보장하라"/29일 사회과학서점서 압수된 주요도서 목록/이웃출판사 대표등 국보법 위반 기소/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대학생 검거과정서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경찰 위협적 검거 여전, 대학생 상대 도로위 총격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김대중 총재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양심수 논란에 대해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이번 논쟁을 계기로 양심수 석방과 약법개폐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일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전국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은 각각 성명 또는 논평을 통해 "치졸하고 유치한 논쟁" "구태의연한 여론몰이" "전·노 석방과 정치흥정을 벌이는 작태" "저질 사상시비"라며 정치권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정부와 정치권이 그릇된 기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전국연합도 "양심수 문제를 사상시비로 몰고가는 것은 정략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고 수많은 양심수들을 능멸하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21세기를 불과 2년여 남겨두고 있는 지금,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50년대의 냉전구도에서 벌여졌던 매카시즘풍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탄을 금치 않았다.

"공산주의자도 양심수다"

이번 논란에서 보수우익진영은 "공산주의자나 폭력행위자는 절대 양심수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현격한

### .....오늘의 주요 공판

▶11월 4일(화)  
김량남/이선정/정석인(국보법 등) 오전 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민경우/나장순(국보법 등, 범민련)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1997년 11월 4일(화)

제 9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일 현재 민가협이 집계한 양심수는 무려 8백59명에 달하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까지 나서 양심수 석방운동을 전개했던 천주교측에선 "이 땅에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면 우리 천주교회가 있지도 않은 일을 우겨대고 있는 것이냐"고 반발하면서, "박노해 시인의 신작출판기념회 때 신한국당 이수성 고문, 자민련 김종필 총재,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등 여야의 핵심 정치인들이 박 씨의 석방과 건승을 비는 축전을 보낸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양심수 구명운동도 정부측 주장을 무색케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성만(구미유학생 간첩단), 박노해(사노맹), 황서영(방북), 손유형(제일동포 간첩) 씨 등의 석방운동을 전개중이며, 유엔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 역시 황대권(구미유학생 간첩단), 안재구(구국전위) 씨 등의 석방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의회연맹(IPU)은 지난 7월 간첩혐의로 수감중인 서경원 전 국회의원의 석방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인권개혁조치 진지하게 논의하자"

3일 각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충고와 제안의 말을 던졌다.

"반세기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분열의 질곡으로 몰아갔던 이른바 비뚤어진 사상의 잣대를 제발 좀 거두기를 바란다."(전국연합) "이번 기회에 양심수 석방을 비롯해 약법개폐 문제 등 제반 인권개혁조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민가협)

느닷없이 전개되고 있는 양심수 논란 속에서 '인권'과 '반인권' 세력간의 첨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1월 5일,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기념 '인권의 밤'

■ 때: 11월 5일(수) 오후 6시 ■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성명서>

## 진흙탕싸움을 걷어치워라

"공산주의자를 제외한다"이라는 조심스러운 단서를 달고 양심수의 개념을 축소한 '양심수 사면론'은 그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즉각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신 공격과 색깔 시비의 용단폭격을 받았으며, 그 결과 당초의 '양심수 사면론'은 다시 위축되어 비겁하고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 이하의 '양심수 논쟁'의 정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추악한 진흙탕 싸움외의 아무 것도 아니며, 그것은 양심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이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양심수를 사면한다"는 김대중 총재의 발상은 결국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는 구태의연한 주장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세력이 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기만 하면 바로 공산주의자가 만들어진 어제의 어두웠던 현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김 총재의 발상은 반인권적이다. 한 인간의 내심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근대 법치국가의 중요한 인권원칙으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오랜 세월 눈부신 인권활동 속에서 확립한 '양심수'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법치국가의 인권원칙 위에 세워진 개념인 것이다. 한 정치인이 이런 개념을 함부로 변용·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또한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공안기관의 총공세를 눈앞에 보면서 국민과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그 뻔뻔스러움에 어안이 병병할 뿐이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인사들이 살아들이면서도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고 강변했던 과거의 공안세력은 인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한발짝도 청산되지 않은 채 오늘도 옛모습 그대로 우리 사회의 공안세력으로 남아 있다. 그 공안세력이 "이번에 잡아들인 공안사범들만큼은 진짜로 양심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할들 도대체 누가 그 말을 끝이 들겠는가?

아울러 우리는 "양심수가 있다면 정치인 사면 등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이회창 총재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 '양심수'는 구금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든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그 자체로서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양심수'는 권력형 인권범죄의 주범인 '정치인'과 동열에 놓고 맞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정치인들은 양심수들로부터 희망을 얻아가는 추악한 진흙탕싸움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은 이제 우리의 인권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약속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스스로가 받아들인 인권기준을 국내에서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그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법률을 개폐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1997년 11월 3일

인권운동사랑방

## 주/간/인/권/호/름

(97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월27일(월)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지난 9월 4일 발생한 '목포경찰서의 폭력배 동원 학생검거 사건'과 관련, 고발장 접수/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남영동 대공본실로 연행

◆10월28일(화)

97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기독교회관 강당서 열려/제1회 인권문화제 인천 인하대에서 성황리 개최/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의 제2회 인권영화제 탄압 비난하며 항의에 동참할 것 전세계에 호소

◆10월29일(수)

<오늘의 책> 등 대학가 서점 4곳 암수수색 벌이고, 서점주인 4명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로 연행/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내사 벌여/전국 59개 대학 경제·경영학 전공교수 3백37명, 삼성그룹의 편법 재산승계 중지 촉구성명/영광 원전 1호기 한때 가동중단

◆10월30일(목)

한보철강, 노사간 합의를 통해 3백42명의 퇴직 신청을 받고 8백명 정리해고해 모두 1천1백42명 해고/덕성여대 직원노조, 관선이사 파견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경찰청, 15대 대선 앞두고 PC통신망의 게시관이나 토론방에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여 명에 대해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도서출판 '청년문예' 대표 이민재 씨와 도서출판 '이웃' 전 대표 정우창 씨 등 출판사 대표 3명 구속 기소/경기대(수원캠퍼스) 학보사·영자신문사 기자들 6명 학교측의 기사검열과 인사권 개입 중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광주교도소측,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재소자 점진요청 거부

◆10월31일(금)

정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덕성여대 학생과 교수 등 1천여 명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달락 취소' 촉구/삼미특수강 노동자 44명 16일부터 집단 단식투쟁을 벌이는 한편 민변 등 2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위장정리해고'로 결론지어

◆11월2일(일)

전교조, 종묘공원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열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학교 교육 정상화와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화할 것" 촉구/영광 원자력발전소 2호기 가동 중단/한국노총 여의도에서 '생존권 시수 및 정책연합 실현을 위한 97전국노동자대회' 개최/〈마이니치 신문〉 보도, 12일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총회에서 인간의 유전정보 총체인 인간게놈의 매매와 복제인간의 제조를 금지하는 세계선언 채택 예정/AP AFP 연합),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1일 하바드대 강연에서 89년 천안문사태 당시 잘못이 있었음을 간접 시인했다고 보도

인권  
시평

#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장 호 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세계화”와 “정보화”는 김영삼 정권이 제작해서 보수언론이 유포했던 정치구호 중, 가장 잘 팔린 것들이었다. “세계화”는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그 뜻도 정확히 모른 채 사용되던 정치구호였다. 그래서인지 “세계화”는 찬바람 불자 사라진 파리떼들처럼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비해 “정보화” 구호는 아직도 잘 나가고 있다. 정보화는 비교적 확실하게 그 윤곽이 잡히는 구호였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사는 세상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 구호가 아직도 잘 팔리는 것은 단지 그것이 세계화에 비해 실체가 분명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보화는 한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역사발전의 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보화는 인간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구조를 바꾸어주는 커다란 변혁이다. 즉 산업사회의 지배구조도 정보화사회에서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정보화사회의 지배계급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계층들이다. 그래서 정보화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쟁탈전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간파한 현 정권과 보수언론도 정보화 이데올로기를 적극 전파하면서 자신들이 정보화사회에서도 지배세력으로 군림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가장 강력한 정부 부처로 부상했고, 신문마다 방송마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 대고 있다. 실제로 컴퓨터 통신을 사용하는 숫자는 전인구의 10 퍼센트도 안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더욱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일 신문지면과 방송화면에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당연히 대다수 국민들은 주눅이 들 수 밖에 없다. 정보화에 대한 무지와 불안 속에서 그들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보수언론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정보화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지배도구였던 미디어가 더 이상 소수의 집권계층이나 자본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 보수언론은 조선총독부, 미군정청, 이승만 정권, 군부독재정권과 돈독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론을 독점해 왔고, 이 과정에서 진보와 변화를 갈구하는 여론들을 외면하고 차단해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미디어 독점이 불가능해진다. 컴퓨터 통신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보수 기득권층에 의해 조작되는 여론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도 생겼다.



따라서 정부와 보수언론은 정보화 사회를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로 부상시키면서도, 컴퓨터 통신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와 고삐를 죄는 이중성을 보여왔다. 물론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은폐되었다. 이를 위해 컴퓨터 통신이 가져온 사소한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음란하고 불순한 내용들이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유통됨에 따라 미풍양속과 사회질서가 위협받기 때문에 선량한 청소년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컴퓨터 통신을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제빨리 만들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해 협박을 했다. 물론 보수언론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행위를 적극 권장하고 독려했다. 컴퓨터 통신 사용자들은 표현의 자유

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들은 특히 컴퓨터 통신은 그 특성이 다른 매체와 다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미디어가 의견교환이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공론장인 반면, 컴퓨터 통신공간은 누구나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공론장이라는 이유였다. 컴퓨터 통신은 진실과 오류에 대한 비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논리였다. 따라서 관대력이 부족한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미디어의 내용을 통제하던 기존의 권위주의적 규제방법이 통신공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정부나 보수언론이 받아들일 리 없다. 현정권과 보수언론은 바로 그러한 이유, 즉 국민들이 진실과 오류를 구별하는 것이 두려워 컴퓨터 통신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예를 들면서 컴퓨터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우이독경이 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법부가 위헌관결을 내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념적, 계급적 갈등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의 규제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컴퓨터 통신공간의 규제는 자신들의 집권을 연장하려는 수구세력들의 필사적인 시도이다. 보수언론과 정부는 컴퓨터통신이 그들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완강하게 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의 자유를 쟁취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변화와 개혁,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통신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민주화를 앞당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5일(수)

제 10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감추인 진실을 밝히며 4년을 달려온 인권하루소식 1천호

### “양심수는 있다”

####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체포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50) 씨가 전격 체포됐다.

서 씨는 4일 오후 5시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서울시경 보안수사2대 소속 형사들에게 체포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서부지원(판사 김문관)은 서준식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서 씨에게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위반과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당초 서 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홍익대에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이날 체포시엔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 국보법·보안관찰법 혐의 추가

경찰은 또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비디오 등 인권영화제 관련 물품과 서 씨 개인물품 및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등 30여 종을 압수했으며, 이어 저녁 6시부터는 서 씨의 응암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날 서 씨의 체포는 일단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 씨에게 적용된 공연법 위반 혐의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는 홍익대에서 인권영화제 개최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며, 당국이 제주도 4·3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레드헌트>의 상영을 국

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비걸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레드헌트> 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날 체포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권영화제 지방상영을 앞두고 전개된 점은 지방상영을 원천봉쇄하려는 당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레드헌트>의 제작자인 하니영상에 대해선 현재까지 공안당국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더구나 <레드헌트>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된 작품이라는 점과 서 씨를 집결한 조광희 변호사가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 외에 보안관찰법 위반 여부도 조사중”이라고 전한 부분은 서 씨 체포에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준식 씨가 공안당국의 한총련 탄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점과 이

번 수사에 보안수사대가 나선 점 등으로 미루어, 당국이 인권영화제 개최를 표면적인 이유로 서 씨를 체포한 뒤,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 관련 부분을 집중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국내외 “서준식 씨 석방 촉구”

한편, 서 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논란이 되어온 ‘사전심의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온전한 인권단체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그 대표를 국제적으로 지탄받아온 법률의 이름으로 연행한 것은 우리 인권현실의 암담함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국민승리21(권영길 후보 선거운동본부)과 한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 이창수)도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서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엠네스티도 “한국정부는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멀리 볼 필요없이 서준식 씨를 보라”며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 기획연재 ‘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를 맞아 문민정부 4년을 돌아봅니다. 김영삼 정부의 두드러진 인권경향을 주제별로 분류, 총13회에 걸쳐 평가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시리즈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 |               |            |               |
|---------------|------------|---------------|
| 1. 삶의 질       | 2. 대형참사    | 3. 철거용역과      |
| 4. 노동권        | 5. 외국인노동자  | 6. 미군범죄       |
| 7. 성희롱 및 여성인권 | 8. 신매카시즘   | 9. 컴퓨터통신검열    |
| 10. 사법개혁      | 11. 국제인권조약 | 12. 배신당한 과거청산 |
| 13. 기획좌담(총평)  |            |               |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11월 4일 오후 5시, 경찰은 인권운동가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체포하고, 인권운동사랑방과 서준식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정부가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고 공언한 시점에 일어난 이러한 반인권적인 폭력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기 인권영화제를 열었다는 것이, 그 인권영화제가 사문화되어야 할 사전심의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이런 호들갑의 이유인가? 제주 4.3항쟁을 다룬 <레드 헌트>의 이적성 시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은 아무 문제없고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에 분노를 넘어서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우리는 이미 서울과 인천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인권영화제를 중단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는 이에 꺾이지 않고 본격적인 지방 순회 상영을 예정하고 있었다. 다음 상영지인 수원 상영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영화제의 계속을 가로막으려는 당국의 치졸한 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이미 위험결정이 난 사전심의 폭력을 통해서라도 유지하려는 보안기관의 간악함이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괄심의를 거쳐 상영된 <레드 헌트>를 인권영화제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이중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처사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의성이나 형평성의 상실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태생적인 반인권성을 또 한번 증명하였다.

정부는 또한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멀리 볼 것 없이 국민들은 인권운동가인 서준식 대표의 체포를 보면서 양심수를 발견할 것이다.

대전정국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안몰이는 인권가해자로서의 정부의 얼굴을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에 여지없이 드러낼 것이다.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인권과 그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우리에게 이번 폭거를 자행한 이들이 결코 갖지 못할 인간의 법이 있다. 지방영화제의 모든 일정은 계속될 것이며, 서준식 대표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를 맞아 계획된 대로 기념행사를 치를 것이다. 지령 1천호에 담긴 인권의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날선 칼이 되어 인권억압의 현장을 내리칠 것이다. 인권에 대한 공권력의 도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인권의 실현을 염원하는 모든 '인간'과 더불어 우리는 증명해 내어야 할 것이다.

1997년 11월 5일  
인권운동사랑방

전해투 보금자리 마련 집들이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오는 7일 오후 6시 투쟁의 현장에서 만났던 동지들을 초대한다. 위치는 지하철 4호선 미아3거리역. 농성장 연락처: 912-5845, 913-3355

6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9차 공판

지난 10월23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사회의 이해』 제10차 공판이 오는 6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형사 제2부(제판장 안영를 부장판사) 심리로 1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문의: 0591-751-5770, 5749

..... 주요 공판 안내

- ▶ 11월 5일 (수) 윤석진 (국보법 찬양·고무 등, PC통신) 오전10시, 425호, 합의5부, 선고
- ▶ 11월 7일 (목) 강순정 (국보법 간첩 등, 범민련)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속행이교관 외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525호, 10단독, 속행
- 신승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PC통신) 오후3시, 418호, 합의1부, 속행
- 이지용 (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전10시, 319호, 합의22부, 속행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기념

‘인권의 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령 1천호를 맞아 <인권하루소식> 애독자 여러분과 인권피해자들, 인권의 이정표 하나하나를 세웠던 승리자, <인권하루소식>에 따라 지혜, 박수를 보내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조촐한 기념식과 함께 '인권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 때: 11월 5일(수) 오후 6시
-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

1. 배경

문민정부의 개혁을 비행기 태우며 온 나라의 언론이 스스로 취했고, 국민은 현기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들려와야 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요란한 개혁 깃발의 행렬을 구경하며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들에게 억압적인 법제의 개혁을 알리는 전령도 달려오지 않았고, 과거청산의 투쟁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인권문제에 대해선 만사해결되었다는 근거없는 청산주의가 판을 쳤다. 인권문제를 입에 올리면 한물간 흥행사 취급을 받게 되다니..

2. 발단

사무실 책상 위에서 잠자던 한 인권운동가가 사라졌다. 장기수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과거에 걸려 남영동으로 끌려간 것이다. 남영동의 철문을 바라보다 돌아선 그의 동료들, 손 견어불이고 하루에 몇 차례씩 사건 속보를 만들어 알만한 모든 곳에 팩스를 날렸다.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와 안기부로 날아드는 세계 곳곳의 항의서한, 꼬리물고 정황을 물어오는 사람들, 그러기를 며칠, 무릎을 탁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팩스, 좋아 그거야!”  
“네? 팩스요?”  
“그래, 인권문제는 신속히 알려내야 하지, 관심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시켜야 하는 거잖아, '인권'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매일 내는 팩스신문이면 어때? 팩스라면 배달 문제는 간단하잖아.”  
“매일 만들만큼 뉴스가 있을라구요.”  
“왜 없어? 전통적인 인권문제는 건 여전하고, 인권의 영역이 좀 넓어, 그렇다면 건드려야 할 보따리는 충분하지. 정 뉴스가 없으면 오늘은 인권문제 없는 평화의 날이라고 하면 되잖아.”

3. 전개

몸에 꼭 끼는 책상과 컴퓨터 한 대, 꼬집꼬집한 팩스와 전화기 한 대, 타자를 갖 익히기 시작한 기자 한 명, 왕 천하 태평 편집인 한 명, 왕 잔소리 발행인이 신문이란 걸 만들기 시작했다. 24시간 사무실 감금을 각오한 이들의 작품-이름하여 <인권하루소식>-이 선을 보인 날, 고관 나으리들의 재산자랑(공개?)이 언론전하를 점령한 가운데 띄워달라니 자식을 내놓으라는 민가렴 어머니들의 농성이, 수배·해고된 노동자들의 90여 일의 농성이, 6공 정치수배자들의 수배 해제 요구가 허공을 때리고 있었다. 또한 한국판 로



드니킹 사건이라 불린 공무원의 장애인 무차별 구타사건, 정신대 문제를 일본 정부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포기 선언, 사상을 이유로 스물 아홉의 젊은 교수를 가둔 사회과학원 사건 등 언론에선 외면받고 문민에게 배신당한 속쓰림이 가득찬 이 모든 사건들이 <인권하루소식>이 탄생과 함께 주워담은 특종이었다.

4. 절정

짖은 이사와 사무실 화재로 인한 누장발송을 제외하곤 천일을 문제없이 달려온 <인권하루소식>은 아직 인권문제가 없는 '평화의 날'을 맞지 못했다. 그 대신 바빠 돌아가는 전국의 사회단체와 아침마다 배달 안왔다고 불평하는 행사독자, 글자 크기가 작다고 호

소하는 노년층, 컴퓨터 통신을 통해 거져보는 젊은 통신인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영문판을 만나는 해외독자, 하루소식을 인권분야의 최대취재원으로 삼는 일선 기자 등을 주 5일 변함없이 만나고 있다. 팩스로 시작된 배달체계는 우편배달이나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병행하게 되었다. 현재 8권까지 발간된 <인권하루소식> 합본호는 그 자체가 우리 인권의 역사책이며, 그때 그 사건을 즉각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색인으로 인권활동의 쓸모있는 손발이 되어준다. 한편, 이어지는 제보와 각 지방의 통신원, 인권

시평에 함께하는 논객, 만화사랑방을 열어준 만평작가 등이 뿌려주는 단비는 달기만 하다. 기계가 견여주는 것조차 신기한 제작 환경 속에서 몸살도 맘대로 못맞고 버티는 편집진에겐 작은 신문 큰 소식, '신문에 안나는 것 신는 별난 신문', '우리 시대 인권상황판' 등 <인권하루소식>에 붙여지는 이름들이 피로회복제였다. 96년, 전국인문노동조합연맹이 수여하는 제6회 민주언론

5. 결말

오늘은 <인권하루소식>이 1천호를 맞은 날이다. 한 달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우려 속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4년을 넘어섰다. 천일야화를 엮을 만큼 많았던 얘기와 주인공들, 아직 결말을 맺지 못한 사건들은 너무도 많다. 그 실마리를 이어가며 <인권하루소식>이 누빌 인권현장에는 '진실'과 '끝장을 보는 근성'과 '작은 승리'와 '큰 폭의 변화'가 넘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하루소식 1천호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가정에서 받아보는  
소식지가 되길

첫 호를 낸 후 지금까지 만 4년, 어려운 여건에서 고투하면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문민정부 하에서 악화되어만 가는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질타하며 줄기차게 독자들을 일깨워 온 사랑방 식구들의 열의와 노고에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그 동안 <인권하루소식>은 작은 지면을 통해서나마,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의 제도와 의식 전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그럼에도 늘 외면되고 은폐되며 그 실상이 왜곡 전달되고 있음을 낱알이 짙어 깨우쳐 주었다. 그 점에서 <인권하루소식>은 스스로 짙어진, 등대요 등불이며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 왔다. 이제 네자리 숫자의 지령을 기록하게 됨을 계기로, 외로운 호소로만 들리지 않도록 좀더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 호응의 기반을 넓히면서 인권운동의 시민적 네트워크 형성에 첨병 또는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감히 권하고 기대해 본다. <인권하루소식>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게 될 날은 언제일까. 아무쪼록 그날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시대 우리 나라 인권운동의 견인차가 되고 마침내는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받아보는 소식지가 되기를 기원한다.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종이학 천마리를 접는 마음

한번은 누군가에게 의미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어 종이학 천 마리를 접기로 하였습니다. 솜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무려 한 달 동안 하루에 꼬박 두, 세 시간씩을 할애하며 접어 갔는데 그렇게 접어도 맞춰 놓는 날까지 다 못 채울 것 같아 사촌 동생에게 같이 접자고 부탁했습니다. '네 생각 많이 하며 힘들게 접었다'고 선물받는 사람에게 보여준 생색내기보다, 사실은 내 정성

이 많이 부족했음을 아직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1천이란 숫자는 내게 그렇게 약간의 부담스런 숫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년하고도 반년 전에 저로서는 사랑방과 작지 않은 인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권하루소식이 5백호를 채워나가고 있었는데, 어느덧 1천호를 발간하게 되었다니 남의 일 같지 않게 기쁩니다. 보수언론의 왜곡된 사회인식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우리사회의 진실을 밝혀내는 참언론의 역할을 한

인권활동가에게 유용한  
인권정보지

국제엠네스티를 대표하여 훌륭한 인권소식을 만들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에 축하글을 보냅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인권하루소식>은 지속성 있고 신뢰성 있는 최신의 인권정보를 실어왔습니다. 또 이 정보는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폭넓은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우리는 <인권하루소식>이 인권활동가들과 인권조사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훌륭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인권운동사랑방>과의 연대가 강화되고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로리 몽고번 (Rory Mungoven) 국제엠네스티 아시아지역 프로그램 국장

'인권하루소식' 1천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주. 낙엽은 지고 사람들이 웃음을 새삼 여미고 있지만, 우리 민중의 기본 권리를 지켜내는 핏물로 이 때를 녹이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하루소식>의 씩씩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홍석만(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간사)

축구팀과 박찬호보다 소중한...

한국엔 양심수가 없다는 말과 함께 보란 듯이 대표적인 비양심수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인권하루소식'은 포항제철보다도 축구 국가대표팀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인간이 만든 제도가, 인간들의 조직이 인간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24시간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한 인권운동사랑방은 분명 박찬호보다도 자랑스런 존재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인권운동감시 초소의 역할을 시작하지 4년이 지났군요. 팩스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개발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창의력을 발휘한 것은 인권운동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여준 적극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노희찬(매일노동뉴스 발행인)

진보운동의 소중한 자산

인권하루소식 발간 1천호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희망과 우리 시대의 건강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거짓과 위선의 이 시대에 억눌린 사람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를 넘어, 우리 시대의 희망을 서로 확인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남한사회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하루소식>지는 실천을 통해 진보운동의 소중한 자산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 시대의 양식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내일에 대한 약속을 하는 <인권하루소식>의 지령 1천호를 거듭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인간 해방의 길을 함께 걸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창수(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조선일보> 보다 위대한 까닭

86년 12월, 어느 신문 구석자리에 초라하게 낳던 몇 줄짜리 기사를 기억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었다'는. 그 때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초라한 기사 한 줄이 바위가 되고, 산이 되고, 파도가 되어, 마침내 '6월항쟁'이라는 커다란 물줄기를 이룰 줄은...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대중들이 바뀌었다고, 최소한의 절차민주주의는 보장되지 않았느냐고, 아직도 '운동을 하느냐고.'

97년 10월, 인권하루소식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기부, 다시 물고문'.

10년이 지난 오늘, 안기부는 여전히 물고문을 합니다. 그것도 절순이 다 된 노인에게.

그 노인을 잡아 가둔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서술 퍼렇습니다. 장기수는 세계 신기록을 깨며 오늘도 수행생활을 하고 있고, 감옥은 양심수와 정치범으로 넘쳐납니다.

10년전 저항의 물결을 만든 사람들이 '아직도 운동을 하느냐고 물을 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물을 때, 여전히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을 대신해 그들의 당당함을 부끄럽게 할 '근거'로 <인권하루소식>을 모아둡니다.

물론 그 근거가 목적이 아닙니다. 모두가 외면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인권하루소식>은 언제나 씩씩하게 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바위산을 만들 한 조각 돌맹이, 그 돌맹이가 되려는 힘겨운 몸짓을 <인권하루소식>이 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마침내 이 힘겨운 몸짓이 커다란 물줄기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므로...

세상에는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겨우 2쪽 짜리 <인권하루소식>이 46쪽 짜리 <조선일보>보다 훨씬 위대하고 소중한 까닭입니다. <인권하루소식>에 '인권탄압사례'가 더 이상 실리지 않을 그날, 마침내 정의가 감동처럼 흐를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건투하세요.

(이선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의가 감동처럼 흐를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건투하세요.

(이선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인권의 꽃씨를 뿌리는 사람들

'생각하는 인권지기, 행동하는 하루소식, 뒤돌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사랑방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3년 겨울, 어스름 저녁 용산역 앞 4층 건물 꼭대기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 어두컴컴한 계단을 오르며 '반인권의 세상'에 '인권의 꽃씨'를 뿌리려는 사람들의 여러지만 강단진 모습만이 안타까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감히,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울러 굶은 매듭처럼 모아지는 하루소식 합본호가 누구에게나 명실상부한 인권백서가 되길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령 1천호를 받아보는 독자로써 뿌듯한 마음만큼 감동도 있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신문은 사실보도만이 아니라, 흑여 반복된다 하더라도 세세한 분야에 걸친 인간의 기본권리와 인권상식에 대한 심층분석 및 기획기사 또는 칼럼 등을 통해 전반적 인권상황을 환기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쉽게 하는 말이 사랑방에는, 어려운 재정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궁창에서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 아닌가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항상 1호를 만들던 마음으로 오늘의 '인권'을 생각해주십시오. 인권운동사랑방의 건투를 빕니다. 전선희(인권하루소식 독자)

깨어있는 소식을 기대하며

인권하루소식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몇몇 사람들은 인권하루소식이 얼

마나 같까 하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운동사랑방 식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권하루소식>이 벌써 1천호를 발행하게 된 것에, 하루소식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하루소식을 만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덕분에 우리 사회의 인권의 현실을 늘 느끼고 필요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올바른 관점과 해설로 언제나 깨어있는 <인권하루소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준숙, 서울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억압과 고통당하는 곳에

억압받고 고통당함이 있는 곳에 항상 빛과 소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국통일 그날까지...

(구기일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위원장)

투쟁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옥중의 절규가 잔잔한 울림을 얻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그 희망을 깨우치게 합니다. 인권유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노래가 그 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잘못된 현실과 정직하게 싸워나가는 투쟁의 모습들은 아름답습니다.

팩스신문이라는 민중언론의 새로운 전법을 제시한 <인권하루소식>이 천살의 나이를 맞았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아무 것도 담을 것이 없는, 하여 스스로 폐간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 <인권하루소식>은 더 처절하게 스스로를 불태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손석춘, 한겨레신문 노동조합위원장)

<1천호 축하글은 지면관계상 2회에 나눠 실립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5일(수)

호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 5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안동 대공분실 식당에서 서준식 대표 면회 결과

11월 4일 오후 5시 명륜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체포된 직후부터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5일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벌였다(유치장소는 마포경찰서이나 장안동에서 하룻밤을 잠).

조사결과 경찰측은 은평구 응암동 자택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압수해간 물품 중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창작과 비평사 펴냄) 『해방전후사의 인식 2』(한길사 펴냄)과 94년 10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가진 ‘북한인권문제 내부 비공개 토론회 자료집’ 및 내부 세미나 자료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등 4권이 국보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다.

이날 면회 직전까지 2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사과정에서 서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도 기재되었듯이) 압수수색이 ‘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레드 헌트〉와 관련된 국보법 위반 부분 조사에서는 경찰측은 영화제 자료집 필름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4·3항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가족의 증언을 담은 것이라 생각하며 다른 부분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한 보안관찰법, 형법상 현주건조물침입죄, 공연법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현사회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상 전향을 안한 이유가 뭐냐”는 등의 질문을 했는데, 이에 서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없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국보법과 관련해선 “국보법 법조문이 애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3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인권운동사랑방 등에서 압수해 간 서준식 대표의 관련 물품(30종) 등을 중심으로 국보법 부분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 대해 서 대표는 “기본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준식 대표 연행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중이며, 5일 오후 이석태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벌였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6일(목)

제 10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미제로

### 검찰, 정황조사 외면한 채 수사종결

대기업이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96년 청주 박민주(29·가명) 씨 성폭행 사건이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일 사건담당인 청주지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검증 결과만은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는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신탄진 공장의 노동운동단압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청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한국타이어 노동운동가 박 아무개(수배자) 씨를 돕던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과한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단순 성폭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시 정황은 피해자의 의혹을 상당부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시 △범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성폭행을 했고 △현금 등 물품피해가 없었으며 △수배자 박 씨의 소재를 몰았던 점 △특히 신탄진에 있어야 할 한국타이어 구사대원들이 사건 전후 청주에 자주 등장했다는 정황 등이 그러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수사가 시작된 뒤 올 3월 수사가 종결됐다가, 지난 8월 여성·노동단체 등의 잇따른 진정에 따라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 었다. 그러나 10월말 검찰이 수사를 종결함에 따라 1년만에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수사종결조치에 대해 피해자 박 씨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황 조사부터 벌였다면 범인의 단서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씨가 검찰의 조

사를 요청한 참고인은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원 관리자와 6-7명의 구사대, 한국타이어 해고자들의 전 아무개, 김 아무개 씨 등이지만, 단 한 사람도 검찰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도 입증하지 못할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는가? 박 씨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 씨는 “참고인 요청대상인 김 아무개 씨의 경우, 노조 총무부장으로서 회사쪽 기밀이나 구사대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며, “구사대와의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록도 있지만, 검찰조사가 성의껏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씨에 따르면, 이 녹취록에는 당시 수배자를 잡기 위해 청주에 구사대가 상주하거나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껏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해 온 박 씨는 “이젠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지 막막하다”며 허탈해 할 뿐이었다.

### 〈현장스케치〉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 ‘인권의 밤’ ‘인권운동가의 기쁨이다’

“1천호가 나오는 밤을 여기서(장안동 대공분실) 지낸다는 것 자체가 드라마틱하다. 양심수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있는 후 연행된 것도 뜻깊은 것이라 생각한다. 잡혀가더라도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인권운동가의 기쁨이다.”

5일 저녁 6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기념행사는 장안동 대공분실에 구금중인 서준식 발행인의 인사말이 전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독교회관측이 2층 대강당 대관을 불허하는 통에 행사장소는 부라부라 2층 식당으로 옮겨졌고, 급기야 시간에 쫓긴 사회자가 발행인 인사말을 소개하지 못하는 실수와 함께 행사는 시작됐다.

하지만, 행사장의 열기는 단연 뜨거웠다. 바로 전날 서준식 씨의 체포소식이 알려진 탓인지 인권피해자를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 3백여 명이 참석해 발디달뜰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간첩 김동식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었던 박충렬 씨,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한국타이어 수배노동자, LG 해고자로 싸워온 이동렬 씨,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치고 씨,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삼석·김은주 씨, 이문옥 전 감사관, 방양균 씨, 행당동 철거민 등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알려진 그때 그사건의 인권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경찰폭력 희생자인 이철용 씨는 목에 기브스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당초 인권하루소식 1천호 역사를 돌아보며 문민정권의 인권현실을 되짚어 보려던 것이 이날 자리의 취지였지만, 참석자들의 발언은 서준식 씨의 구속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주조를 이뤘다.

유일한 국외 참석자 로스 대니얼스(국제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인권담당자) 씨도 “국제엠네스티는 서준식 씨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전세계적인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바람이 이뤄져 기쁩니다

94년 2월 <인권하루소식> 1백호 합본 발행 때, 제가 격려사를 쓰면서 '5천호 또는 1천호 발행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빈다'라고 적었던 바람이 이렇게 이뤄졌음을 기뻐합니다.

1백호 발행 격려사를 쓸 당시엔 '과연 5백호 또는 1천호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고백합니다. 이제, 1천호 발행 소식을 접하고, 인권운동사랑방 가족 여러분의 집념과 열정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고한 가치를 향한 집념과 열정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습니다. 김창국(변호사)

내 도리부터 다한다면...

<인권하루소식>을 접하면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가슴 벅차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의 투쟁,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처절한 철거민들의 몸부림을 떠올리며 이 사회에 꺼져가는 양심불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불사르는 정의의 사실들, 그분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만 가득 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마찬가지이지만 이 시대인은 거창한 정의운동이 아닌 나의 생활 속에서부터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의를 행하며 산다면 인권유린, 착취, 소외당함과 갖가지 불의의 어둠이 사라지리라 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훈훈함이 멀리 멀리 천리향처럼 퍼지길 안현숙(수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아침마다 <하루소식> 쟁탈전을

<인권하루소식>이 벌써 지령 1천호를 맞는다니 세월이 빠르긴 빠르다.

처음엔 <인권하루소식>이 민족민주진영의 모든 사건을 전달하는 매체처럼 보이더니 이제는 인권분야의 전문적인

관심사를 넓히라

1천호를 맞는다라는 것이 놀랍다. 양심수가 뭇지 잘 모르는 정부 밑에서 말이다. 창간 초기에는 마치 일부 노동운동, 학생운동 구속자 소식지 같았다. 그럴 통로도 없던 당시로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깊었다.

그러나 세계인권대회를 전후해서 "인권"에 대해 모두가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이는 인권하루소식의 지면에도 반영되었다. 동성애자의 "인권"이 좋은 예이다.

지난 번 포르노 논쟁 때에도, 서준식 발행인이 포르노 그 자체가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시각을 제 공한 것도, 찬반을 떠나 매우 인상 깊었다. 단지 관심의 폭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인권논의를 앞장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좁은 지면만으로도.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한국사회의 인권논의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 적어도 중국, 일본, 동남아, 북한 등의 인권문제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때에는 국내소식처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특히 북한의 국군포로 등은 남한 내 장기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별 진지한 노력이 없어 보인다. 설사 "인권" 자체에는 별로 관심 없는 보수우익의 정략적 문제제기라 할 지라도, 그 도전을 받아 안을 때 인권이란 나무는 더욱 뿌리가 깊고 튼튼해 질 것이다. 그곳에 인권을 침해당하는 이들이 있는 한.

박준영(아시아가톨릭연합통신 한국지국장)

식견과 내용을 담아내는 인권전문지로써의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새로

운 영역과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있는 <인권하루소식>을 보면 매체를 만들어내는 같은 입장에서 경의감이 앞선다.

아무튼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며, 정통을 세워나가고 있는 <인권하루소식>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인권하루소식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사무실에서 벌어지길 바란다. 김성희(전국연합 교육선전국장)

운동본부의 역사가 이곳에

제가 일하고 있는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발족식 소식이 93년 10월 27일 <인권하루소식> 제33호에 처음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인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군기지 앞에서 처음 치른 미군범죄 희생자 장례식, 1백회를 맞이했던 금요집회,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때 등 운동본부의 중요한 순간순간의 역사가 <인권하루소식>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인권하루소식>이 이런 소식을 보도할 필요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동심(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2천호에는...

마감날 밤을 셀 때 새벽5시쯤 울리는 팩스 소리.

'야! 인권하루소식이구나!' 하고 새벽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인권관련 소식들. 우리 사회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느끼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묻혀있는 소식들 전하는 <인권하루소식>에 감사하게 됩니다. 2천호에는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만 담게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희연(이대학보사 편집국장)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7일(금)

제 10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 당국, 보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최근 서울대 교수 출신의 한 사회학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시종엔 이 교수가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가고 있다.

사건 당사자는 9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고영복(70) 씨. 그는 지난 2일부터 한 병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장소가 병원인 것은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보도통제로 인해 고 씨의 정확한 혐의와 사건 개요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정보를 모아보면 고 씨에 대한 수사가 지난달 27일 검거된 울산 '부부간첩'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부부간첩' 사건에서 발단 <시사저널> 420호(11월 13일자)에 공개된 울산 부부간첩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10월 2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울산연합으로 정대연(36) 집행위원장을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인근 다방에서 정 씨를 만난 두 남녀는 '북에서 왔다. 공화국에 같이 가자'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정 씨는 이들과 헤어질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10월 27일 정 씨는 그들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이들은 약속장소에 나왔다가 잠복중인 안기부·경찰 합동팀에 의해 검거됐다."

정 씨는 그들과의 만남 직후인 22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전국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언론에는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안기부가 엠바고(보도통제)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정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두 사람이 2개월 전 서해안을 통해 배를 타고 들어왔고, 이들에게서 서울대 교수, 노동자를 포함한 10여 명의 이름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제2 이선실, 김동식 사건 우려

정 씨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고영복 교수는 울산에서 검거된 간첩혐의자의 진술에 근거해 수사대상에 올랐고 구속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선의 한 기자는 "울산 간첩의 입에서 '고첩(고정간첩)을 데리러 왔다. 그가 고영복이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고 씨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에선 쉬쉬하는 속에서 온갖 입

소문과 의혹들이 번져나가고 있다. 정대연 씨는 다음의 사실 등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조작가능성까지도 제기한다. 우선, 간첩혐의자들이 너무 쉽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며 접근한 점, 둘째, 기자회견이 열렸고 울산지역에 김문기 강화된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이 최소한의 보안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셋째, 검거된후 3-4시간만에 총을 쏜 장소를 말하고 만난 사람들의 명단 10여 명을 털어 놓은 점 등이 공작원으로서 너무나 허술한 처신이었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고 교수의 89년 행적부터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자칫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에선 92년 대통령선거 전의 이선실 사건, 96년 4·11 총선 전의 김동식 사건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다시 선거용 공안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시비를 없애기 위해 서라도 관계기관의 투명한 수사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히 요청된다.

## 서준식 씨 수사, 방향선회

### 북한인권 토론토론회·해외체류 문제삼아

서준식 씨에 대한 수사가 당초 <레드헌트>의 이적성 부분에서 다른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묻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6일 마포경찰서 면회 과정에서 서 씨는 "수사가 영화제와 관련된 것보다는 좌익사범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서 씨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가, 95년 미국생활, 올해 독일교포 단체의 초청으로 독일과 영국을 방문한 데 대해 집중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경 보안수사2대 소속 수사관들은 "해외에서 누굴 만났다, 외국에서 범민련 북측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나" 등의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서 씨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문제제되고 있는 부분은 94년말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문제 토론회'의 자료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일 오전 서준식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 다. <관련기사 2면>

# 지뢰피해 한국 예외 아니다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국내에서도 민간단체들에 의한 대인지뢰반대운동이 시작됐다.

교회여성연합,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통일맞이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지뢰회의)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공동대표로 문정현 신부, 조미라 목사, 이장희 교수 등이 선출됐으며, 특히 대인지뢰 피해자 농민 두 명이 참석·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 국제적십자위원회 회장 코르넬리오 소마루가, 세계교회협의회 대인지뢰담당 드웨인 엡스 목사 등이 연대사를 보내왔다.

지뢰회의는 이날 한국정부의 대인지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며, 남북한 대인지뢰금지를 위한 여론화와 대안제시를 주요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행동 조직 △오타와 회의에서 한반도 특별결의안 추진 △조디 윌리엄스 등 국제적인 대인지뢰금지 운동 전문가 초청 캠페인 등을 꼽았다. 또, 대인지뢰 피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구제사업도 병행기로 했다.

지뢰회의는 우선 대인지뢰금지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오는 19일 '한반도 대인지뢰금지운동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 대인지뢰 피해자 증언

피해자로 참석한 이석준(69·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2리 거주) 씨등 주민 2명은 "소 먹일 풀을 베다 폭풍지뢰(일명 발목지뢰)를 밟아 부상당했고, 단 한번 대한적십자사에서 의족을 해준 것 외에는 어떤 피해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파주·연천·철원 등 민통선 인근 지역의 주민들 중에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다수며, 한 마을에 서너명씩은 부상을 입고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주민들의 피해는 과거 민통선이 었다가 해제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민통선 지역에서도 군부대에 다 치더라도 사고 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출입허가증이 나온다면, 이들은 "차라리 위험이 있는 곳이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 61년 쿠바사태 당시 미군들이 집중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며, "처음에는 지뢰위험지역이란 표지를 해놓아도 그후에는 표지의 글씨도 없어지고 해서 주민들이 위험을 모른 채 지뢰매설지역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79년 9월 지뢰사고로 오른발 무릎 아래가 절단되었고, 왼쪽 발목 부위를 다쳤다.

지뢰회의는 '대인지뢰 금지, 현실과 과제'란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유료배포(책값 2천원) 중에 있으며, 이후 가입단체를 확대키로 했다. (문의 참여연대 이대훈 전화: 723-4250)

### 서 씨 구속 대선용 탄압

####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서준식 씨의 체포 소식에 5일 민변·참여연대 등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민주노총·경실련·전교조·민가협 등이 또다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민가협은 "법무부, 검찰 등이 이땅 양심수 존제의 여전함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준식 씨를 구속했다"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은 전세기가 경악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레드헌트>를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은 "<레드헌트> 문제는 국보법이 이중기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현재 헌법 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연법, 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 등을 추가 적용한 것은 소중한 인권과 양심을 유린한데 대한 공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레드 헌트> 제외하고 수원 인권영화제 개막

6일 오후 4시 대한성공회 교동성당에는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인권영화제가 개막됐다.

수원 영화제는 지난달 인천 인권영화제가 경찰의 탄압에 밀려 조기폐막된 이후 지방에서는 두번째로 열린 것이다.

당초 수원 주최측은 논란중인 <레드헌트>도 상영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이 작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인천과 마찬가지로 수원 주최측엔 경찰과 구청, 도경 보안과 등의 압력이 내려왔으며 개막식 행사장 주변에서 경찰의 불심검문도 진행됐다.

한편 7일엔 안양 인권영화제도 개막되며 <레드 헌트>의 상영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행사와 동정

#### ■ 양심수 문제 관련 긴급토론회

- 때: 11월 7일(금) 오후 4-7시
- 곳: 성공회대성당(시청앞)
- 주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민가협, 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주제발제: 양심수의 본질과 현황 (박원순 변호사)
- 토론자: 한인섭(서울대 교수)/김훈(시사저널 편집인)/강금실(변호사)/손석춘(한겨레신문사 노조위원장)/신기남(국민회의 의원)/최규업(국민승리21 정책위원장)

#### ■ 김현철 석방 규탄 시민토론회와 풍자 퍼포먼스

- "양심수는 있다/없다" 토론회
- 때: 11월 7일(금) 낮 12시
- 곳: 명동 삼업은행 앞 4거리
- 주최: 국민승리21 선거대책본부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7일(금)

호외 2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서준식 대표 수사속보 2>

### 인권운동사랑방 관련 집중수사

#### 구속적부심 8일 오전 11시 서부지원 313호

서준식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시경 보안수사2대는 7일(금) 오전 7시경 마포경찰서에 유치중인 서 대표를 다시 장안동 대공분실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 및 인권영화제의 조직과 활동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낮 12시 15분부터 30분 가량 부인과 면회한 서준식 대표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창립과정, 규약, 활동내용, 구성원과 직제, 운영위원회, 재정 사항 및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명단과 역할 및 규약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이 되기 직전 수사관은 89년 평양축전 당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제작한 기념 엽서 10여 장을 압수물품으로 제시함으로써, 오후 수사에서는 또다시 '북한 관련'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 대표는 "경찰이 이번 수사의 명분 부족 때문에 좌익사범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며 "표면상의 구속사유와 실제 수사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을 지적하며 "별건압수는 불법행위가 아닌가"고 문제제기했다.

이날 면회엔 인권운동사랑방 상근자 1명도 참석하려 했으나, 대공분실측은 가족의 접견만을 허용했다. 서 대표는 "조사 도중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수사관이 주는 담배를 거절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8일 오전 11시 서부지원(주심 배현태판사) 313호 심문실에서 서준식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전.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8일(토)

제 10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양심수는 누구인가?

###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 “공산주의자와 폭력행위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과연 그러한가?

최근 김대중 총재의 발언과 서준식 씨의 구속 등으로 불거진 이러한 논란과 관련, 7일 대한성공회 대강당에서는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민가협 공동주최로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초청자 가운데 국회의원을 제외한 각 정당 및 법무부 관계자가 불참해 다소 감빠진 토론회가 되긴 했지만,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양심수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역시 “양심수란 누구인가”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이상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양심수에 대한 국제 엠네스티의 정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양심수에 대해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언어·국적·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금실 변호사의 주장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엠네스티 기준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못한 우리나라에선 폭력을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심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승리21 정책위원장인 최규업 씨

도 “역사적 조건에 따라 폭력이 정의의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며 “폭력을 사용한 사람도 넓은 범주의 사상범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서울대) 교수는 “정치적 신념의 표현만으로 죄가 될 수 없고, 폭력성은 그 행위를 중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학생운동의 폭력과 달리 한총련의 폭력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양심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수언론 질타

토론자로 참석한 언론인들은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타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손석춘(한겨레 노조위원장) 기자는 “언론의 반공 컴플렉스 공세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한계있는 의식’ 조차도 왜곡시켰다”며 수구언론에 공세를 퍼부었고, 동시에 “양심수 문제를 외면해 오던 보수언론들이 최근 양심수 관련 보도를 내보냈지만, 그나마 공안당국의 입장을 소개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훈 시사저널 편집국장도 “마광수, 장정일 씨가 구속됐을 때 대서특필하던 언론이 서준식 씨의 구속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며 “이는 양심수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정신병리 현상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당인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한 신기남(국민회의) 의원은 재야 및 시민운동단체의 비난을 의식한 듯 “선거를 앞둔 시기이니 이해하고 집권후를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민회의의 당론이 ‘용서 차원에서 사면’임을 거듭 밝히며, “집권하면 양심수를 전향적으로 석방하고 근원적으로 비민주적 약법을 개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모란공원 열사추모비 건립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상임의장 박정기)는 8일 오후 2시 마석모란민주묘역 입구에서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추모비 건립식’을 갖는다. 열사추모비는 전국유가족에서 제작하였으며, 비명은 신영복(성공회대) 교수, 비문의 글씨는 박용길 장로, 설계 및 조각은 화가 홍성담 씨가 참여했다.

### 삼특 사태 국제 관심사로

캐나다노조, 포철에 항의서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노동자 44명이 22일째 집단단식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강 사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 이창수)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표적 공공노조인 캐나다통신노조(TWU)는 포항제철 김만제 회장과 청와대, 노동부 앞으로 삼미특수강 사태를 비판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왔다.

### 국민승리21, 양심수 석방 촉구

국민승리 21은 8일 낮 12시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등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 대형사고의 응당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첫날 현장에서 8명을 구조하는 등 한 달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강아무개(36)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삼풍사고후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끔찍했던 참상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며 “사체들이 나타나고 집이 무너지는 환상과 악몽에 시달린 끝에 고통을 털어보려고 히로뽀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6년 1월 6일자 참조)

사망 5백3명, 부상 7백18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건국이래 최대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다되어 간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상처는 아물지를 모르고, 그 상처를 비웃는 듯 사회 곳곳에서 부실시공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흡한 위기대처능력은 일이 다친 직후에나 여론의 폭격을 받을 뿐이고, 각종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영원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97년 8월 6일 새벽, 대한항공 801편 관 추락사고로 2백26명이 허망하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또 우왕좌왕이었다. 세계 10위권의 항공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항공사고는 세계평균에 비해 50%나 높다고 하는데 말이다.

#### 개발독재의 결과들

“개발독재의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는 ‘대형사고’는 문민정부들어 연달아 터졌다. 지나치게 높은 사고발생의 빈도와 그 엄청난 규모에 국민들은 하늘도 땅도 물도 믿지 못하고 그저 입을 벌릴 뿐이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뉴스를 장식한 대형참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에 있다.

97년 4월 11일 열린 연세대 보건대학원 개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94년 한해동안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

은 모두 2만6천6백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를 당하는 사람은 주당 5백11명 꼴로 삼풍백화점 사망자수(5백3명 사망) 보다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1주일에 한번꼴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꼴이다.

#### 무시받는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생명’



일부 계층의 것일 뿐이며 다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단순히 개인이나 조직의 부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부주의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하느냐의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안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 대형참사 사상자 수 및 주요 책임자 선고형량 >

- 93년 구포 무궁화호 열차전복사고: 대법원 남정우 외 16명(업무상 과실치사 등), 최고 남정우 징역 1년 집유 2년
- 93년 위도 ‘서해웨리호’ 침몰사고(사망 289명 실종 3명): 대법원 박성일의 7명(허위공문서작성) 2심 박성일, 양기성 징역 8월 집유 1년 선고(95년 9월 현재 3심 진행중)
-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사망 42명):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덕) 신동현(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박효수(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생산부장)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 2년의 실행 선고, 여용원(당시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씨에 금고 1년 6월 실행 선고(97년 6월)
- 94년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사망 12명 부상 2백여명)
- 95년 4월 28일 대구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사망 101명 부상 2백여 명):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석 판사) 배정길(표준개발 대표) 씨에게 무죄선고된 원심 계고 유죄인정(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
-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사망 503명 부상 718명):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 삼풍 회장 이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등을 적용, 징역 7년 6월 선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8일(토)

호외 3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서준식 대표 구속 관련 속보 3>

###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4·3 항쟁을 소재로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너영상)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서준식(48·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부지원(주심 배현태 판사) 304호 법정에서 4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열렸다. 이날 재판정에는 공동변호인단 중 조광희·이석태·최병모·윤기원·임종인·이덕우·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석해 변론을 맡았다.

이날 구속적부 심사에서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①<레드헌트>를 상영하는 등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②보안관찰법 위반(집회 및 해외여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 ③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한겨레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 기부금 조성) ④현주건조물침입법(흥익대측의 불허통보를 받고도 무단침입해 인권영화제 개최) 등과 관련한 부분이 신문되었다.

검찰(김용호 검사) 측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식의 질문을 이어갔고, 서준식 대표의 일부사항에 대한 묵비권 행사를 시비걸기도 했다. 서준식 대표는 광범위하게 진행된 압수수색 시 '진흙속에 진주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형사의 말을 들어 그 흙을 털어 혐의를 만들려는 구속사유와 상관없는 사항에 대해 답변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다는 데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레드헌트>의 이적성에 관한 변호인 의견에서 제주에서 올라온 최병모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최 변호사는 지난 10월 제주 4·3연구소 사무처장 김동만 씨를 제주도 4·3항쟁을 다룬 비디오 영상물 <잠들지 않는 함성, 4·3항쟁>을 문제삼아 긴급체포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던 사실을 지적하였다. <잠들지 않는 함성>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4·3 항쟁을 본 것으로 다소 편향적이라면 <레드헌트>는 객관적 입장을 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산 국제영화제에 상영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서 씨가 출소 뒤에도 또다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을 위반했으며, 대학의 요청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했다. 또한 교묘한 진술회피로 진술을 거부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서준식 씨는 "인권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사전심의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처벌받을 각오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보안관찰법 역시(잘못된 법으로) 처벌받을 각오로 무시했다. 하지만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해 무엇을 숨기거나 하지는 않았다. 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과 관련해 2차 회의가 11월 10일 오전 8시 민예총 회의실(문의 743-5873)에서 열린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1 일(화)

제 10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노동운동, 미디어를 활용하라”

###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노동자들은 정보·통신 등의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주제로 서울 국제 노동 미디어(Labor Media) '97(조직위원장 김진균, 레이버미디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연세대학교 신상경관에서 진행되며 노동정책연구소, 참세상 등 국내 통신·노동운동단체와 노조뿐만 아니라 일본의 민중미디어 네트워크(대표 아키라 마츠히라), 워킹 TV(대표 줄리아스 피셔) 등 국제 노동운동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지구화, 정보화,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씨는 "지금 자본과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는 노동자들에게도 국제연대의 좋은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 이외의 효과를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터 워터만(네덜란드 사회학자) 교수는 인터넷을 통해 성공적인 파업을 진행했던 리버풀 부두노동자와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노동 미디어 행사를 예로 제시했다. 또한 크리스 베일리(영국, 레이버넷 대표) 씨는 "국제적인 노동단체에서도 등한시한 리버풀 부두노동자들의 파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동력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의 진보적인 단체와 개인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며 "정보통신을 노동운동에 이용한다면 운동내부의 관료주의와 반민주적인 행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중(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미디어 통제수단이 먼저 발달한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미디어 활용과 더불어 정보기술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를 없애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미디어 행사는 11일 김수달(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부소장) 씨의 발제로 '정보화와 노동현장의 변화 그리고, 노동운동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지며, 미디어와 노동운동, 노동운동과 정보화, 네트워크를 통한 노동자 국제연대와 레이버넷 운동 등에 관한 워크숍이 계속된다.

또한 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는 행사 기간동안 9개국 18편의 작품이 상영되는 국제노동영화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 한국 작품으로는 노동자뉴스제작단(회장 김명준)이 제작한 <총파업 속보>와 <해고자> <파업전야>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행사장 로비에서는 한국의 노동조합 시유지(CUG, 전용통신망)와 홈페이지, 한국의 독립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전시대를 설치해 많은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 855-1913).

###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 · 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각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이인제, 이회창 씨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시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이 단순한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해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인터넷 서명운동 서준식 씨 석방촉구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http://www.interpia.net/~rights>)에서는 지난 5일 구속된 서준식(50)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적은 수이지만 통신인들이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한 통신인의 발언을 소개한다.

"모든 이들의 소박한 꿈들이 터무니 없이 짓눌리지 않는 세상,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며... 서준식 씨의 빠른 석방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보안관련법들은 즉각 철폐되거나 대폭 수정·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김민수(mskim@chiak.kaist.ac.kr)

###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다. 당초 '사전심의' 거부를 빌미로 몰아친 영화제에 대한 탄압은 이제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하늬영상 제작)에 대한 지적성 시비로 옮겨갔다.

오는 20일부터 상영을 앞둔 제주 지역 역시 안기부와 경찰측의 압력으로 <레드헌트> 상영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제2회 인권영화제 제주집행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 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상영예정지인 '에이아트홀' 관계자로부터 불허통보를 받았다. 6일자 <제주일보> <제민일보> 등은 일제히 "경찰측은 <레드헌트>가 불법제작된 비디오물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지적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화상영을 중단하고 관계자를 전원 사법처리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8일 제주경찰서 보안2계는 제주집행위원회측에 "〈레드헌트〉를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지적표현물로 판명받았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화상영을 원천봉쇄하기로 하고 영화제 후원회원 계좌추적에도 들어갔음"을 알렸다. 압수수색 영장은 "제주연합 사무실, 제주대총학생회 사무실, 제주대 2층 시청각실, 에이아트홀, YMCA 강당(제1회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에서부터 "이외의 상영장소"까지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김상근 목사, 이영웅(제주대 국어국문 3년)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일 것임을 통보했다. 이영웅 씨가 대표로 있는 제주대 참여자치 학생연대는 11, 12일 제주대 교내에서 '제1회 참여자치 인권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이 행사에서 역시 <레드헌트> 상영할 예정이었다.

결국 수사당국의 탄압에 따라 제주집행위원회는 10일 "제주도에서 조차 <레드헌트>를 상영하지 못하는 것이 어렵지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볼 때 상영에서 제외키로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참여자치 학생연대측 또한 <레드헌트>를 상영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인천을 비롯한 10여 개 지역영화제에서는 모두 <레드헌트>를 상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준식 씨의 구속 등으로 당국의 압력이 현실화됨에 따라 각 지역 인권영화제 주최측은 <레드헌트> 상영을 강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광주·전주 등 남은 지역에서의 <레드헌트> 상영 여부 및 서준식 씨의 구속과 함께 법정으로 옮겨진 <레드헌트>의 지적성 시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오늘의 주요 공판

- ▶ 이천재/이종린(국보법, 범민련)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령
- ▶ 정영훈(국보법) 오전 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 주간/인권/호름 (97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 ◆ 3일(월)
 

이인제 전 경기지사, '문민정부 이후 양심수 존재' 부인/군에 갓 입대한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잦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럭 운전사들 1년만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돌입
- ◆ 4일(화)
 

고건 국무총리, 기존 국적법 개정해 부모의 한쪽만 한국인이면 자녀에게 한국국적 부여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100인 이상 사업장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을 지난해보다 3.0%포인트 낮은 5.8% 수준/덕성여대 총학생회, 관선이사 파견등을 요구하며 국문학과등 9개 학생회장 단식농성 돌입/96년 전체 국민의료비 16조4827억원으로 작년 대비 17.2% 증가
- ◆ 5일(수)
 

인권하루소식 1천호 발행/서울경찰청 보안수사2대, 서준식 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독일 법원, 전후 처음으로 수용소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인정
- ◆ 6일(목)
 

한국은행 발표,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변동률 1분기 -2.9%, 2분기 -4.4%, 3분기 -5.3%로 감소를 확대/인천지방환경관리청, 악취예고제 시행예정/35개 시민·환경단체, '무분별한 담건설 저지 및 담 피해대책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발족/16개 시민·사회단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공식 출범
- ◆ 7일(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안전문화추진 서울지역본부 표본조사 결과, 서울 시내 지하철의 노약자·장애인 보호석과 시각장애이용 보행 유도로가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배치돼 이용 불편/노동부 발표, 올 3/4분기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정리해고로 이직자 1만197명 발생/노동부 관계위원회, 금융·보험업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예정
- ◆ 8일(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문을 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쪽 크게 반발/미국 중앙정보국(CIA)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고위 외교관의 집 도청하다 발각
- ◆ 9일(일)
 

민주노총, 여의도에서 노동자·시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97전국노동자대회' 개최/국방부, 올해말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 도입을 뼈대라한 군사법원법과 군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대법원, 국회가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것과 관련, 10일 국회에 반대 의견 전달키로/국제노동기구 연례노동보고서, 10년동안 우리나라 노조 가입자수 60.8% 늘어 노조원 증가율면에서 세계 6위 차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2 일(수)

제 10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용납할 수 없는 퇴보”

###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국민인권신장을 위한 혁명으로부터 평가받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퇴보위기에 몰렸다.

올 1월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라는 원칙 하에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인권보장에 일대진전을 이룬 조치였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못마땅함을 드러내던 검찰측이 급기야 영장실질심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원이 이에 집단반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이 논란의 핵심은 '인권보호'나 '수사효율'이나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원과 검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인양 본질을 흐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언론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일부 언론, '밥그릇 싸움' 호도

8개 중앙 일간지 가운데 '인권보호' 입장에서 사실을 재계한 언론은 <한겨레>와 <동아일보> 뿐이며, <경향신문>은 오히려 사태의 초점을 흐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겨레>는 11일자 사실에서 "영장실질심사제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고, <동아일보> 10일자 사실 역시 "정권 말기 어지러운 분위기에 편승해 중요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법률이 졸속처리되는 안된다"며 '인권보호'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검찰측의 '수사난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검찰이 주장하는

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법원의 집단행동은 검찰에 대한 극도의 악감정 때문"(10일자 사실)이라며, 오히려 법원의 집단행동을 비난하는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법부마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적을 높이면서, 결국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관료화와 검찰의 독선화가 빚어낸 권한싸움"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은 양측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 외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삼가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5일자 기사수첩(김홍진 기사)을 빌려 "어느 쪽이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좋은 방향인지 합리적 해결점을 찾으라"며, 양비론의 시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3 일(목)

제 10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권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도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판사 대면권(심문청구권)은 판사의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필요한 심문은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은 궤변이자 함정이라는 것이 법원과 인권옹호자들의 반박이다.

법원측은 “개정안은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심문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정신과 국제인권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판사대면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생기고 안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실제 검찰의 관심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노현 교수(방송대)는 “검찰의 내심은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피의자 심문청구권 행사가 20~30%로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데 있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절대적 권리인 심문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 흥정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원 등은 현행 영장실질심사가 여전히 국제인권조약보다 미흡하며, 따라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현재 판사 앞에서의 변명권을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가 20%에 달한다”며 “이는 현행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재판청구권, 평등권 위반 등 위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권노현 교수는 “이들 20%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중범죄 사건, 정치적 사건, 공안사건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달라진 점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은 수사초기

경찰의 고문과 가혹수사가 대폭 사라진 점이 꼽히고 있다. 권노현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는 적은 비용으로 획기적인 인권신장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를 검찰과 법원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 B규약 9조 3항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

11월 13일(목) 오전 11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각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요건을 심사하고, 보석석방이나 예방구금(Detention)이냐를 결정한다.

◇ 독일: 긴급한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체포된 피의자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판사에게 필요적으로 인치되어 심문을 받고 구속명령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명령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도 다음날까지 필요적으로 판사에게 인치되고 판사가 심문하여 구속명령의 유지 결정, 집행정지결정 또는 구속명령 취소 결정을 내린다.

◇ 프랑스: 수사판사는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소환영장, 구인영장, 구금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필요적 대신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명령의 형식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체포된 피의자는 예심판사가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예심판사는 지체없이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심문하여야 한다. 그 다음 예심판사는 다른 대체수단을 적용하여 석방하든지 혹은 구속명령을 하든지를 결정한다.

##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검찰 “오히려 피의자 인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하고 구속은 판사의 사면심사로만 결정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구속적부심제도를 현행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력,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출, 장기간의 호송 및 심문대기로 범죄진압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있다. 구속영장청구시 법원의 공개된 피의자 심문으로 수사진행 상황이 누설돼 공범 및 피의자의 여죄수사가 매우 곤란하고 피의자, 공범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체포적부심, 구속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기소전 보석 등은 피의자 구속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규정으로 사실상 수사 불가능을 초래한다.

3. 법원의 구인장발부로 인한 인권침해 수사기록상 충분한 판단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기준없이 무차별적 구인·심문하고 심문자체도 형식적 사항에 그쳐 피의자심문을 통한 피의자 인권보장은 허구이며, 실제 수사기관, 피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가 원하지 않은 강제심문을 위한 구인과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단지 심문만을 위한 구인장 발부는 법원에 의한 심대한 인권침해이다.

4. 법원의 형식적·불성실한 심문이 오히려 인권침해 수사기관의 피의자심문 방지를 위한 강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수사기관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주장이다. 현재 법원의 형식적·불성실한 심문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의자의 요청에 의해 심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할 때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필요한 심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5. 법원의 법규정 취지 망각 조속한 시정 불가피 법원의 법규정 취지를 망각한 자의적인 운영으로 제도취지가 퇴색하고, 오히려 문제점만 노출하여 조속한 시정 불가피하다. 법원의 자기권한 강화 내지는 확충을 위한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기관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 법원 “가혹행위 근절 효과”

1. 세계적 추세 역행, 국제인권조약 위배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모두 필요적 심문이고, 우리의 현행 임의적 심문제도는 과도기적 타협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필요적 심문’으로 법을 개정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2. 피의자 호송체계 정비 시급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특히 경찰의 피의자 호송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수사인력을 빼앗긴다는 부작용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호송인력을 전문화하고 호송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현재보다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선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수사담당자가 직접 피의자를 호송하는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수사공백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3. 헌법상 기본적 인권 침해 우려 영장실질심사제는 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주의의 구체화 ▲피의자의 법적 청문권·재판청구권 및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방지하고 신체의 자유의 박탈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헌법 제10조, 제11조 1항, 제12조, 제27조 1항,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72조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정신에도 위반된다.

4. 수사기관의 피의자 심문 방지를 위한 강요 가능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심문 요청을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약용의 소지가 있고, 심문 불요청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올해 들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에서의 정확성을 상당 정도 담보할 수 있고, 피의자심문을 통해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구속자 중 10%만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고 있다는 실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개정안대로 하면 피의자심문율은 10-20%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며, 결국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5. 시행 1년에 불과한 법개정은 시기 상조 9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도입되었다. 시행 1년도 안되어 형사소송법의 조문 하나만 개정하는 것은 95년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형사소송법 전반을 총괄적으로 검토·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4 일(금)

제 10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의 발미가 되었던 제주 4·3항쟁 소재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전국 동시다발 상영에 들어가게 된다.

13일 민변·민교협·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27개 사회단체는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동대표 김승훈 등)를 발족하고 전국의 대학교·교회 등지에서 <레드헌트>를 동시 상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푸른영상 대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활동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킬 것이라 믿는다"며 "구속을 각오하고 상영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대위는 공안당국의 <레드헌트> 이적성 규정에 맞서 영화과 교수, 현대사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레드헌트>에 대한 의견개선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오는 28일 <레드헌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 씨 석방운동 국내의 확산 이날 공대위 발족식을 시점으로 서준식 씨 석방운동과 각종 인권문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소속 회원 84명(13일 현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이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음비법, 공연법, 보안관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서준식 씨의 구속은 서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들이 국제인권조약에 비추어 합당

하지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철저히 양심에 따라 행동해 온 서 씨의 활동이 법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국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항의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각 나라 영화단체나 각지 동포들의 항의도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서준식 씨 구속과 관련 한국정부에 항의의사를 전달하거나, 석방운동에 나선 국제 단체들은 국제엠네스티, 세계고문방지기구, 아시아인권정보센터, 아시아인권위원회, 대만인권연합 등이며,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홍콩 등지의 동포들이 동참하고 있다.

한편, 수원·안양·제주에 이어 전주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상임공동대표 문규현)도 "정부의 탄압 앞에서 인권영화제를 지켜내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레드헌트> 상영을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 조직위원회측은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오는 15일 전주 서학동 성당(문규현 신부)에서 <레드헌트>를 공개상영하겠다"고 밝혔다.

### 부부간첩사건 공개수사 요구

불교 6개 단체, 서준식 씨 석방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국불교운동연합 등 6개 불교단체는 13일 서준식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여러 악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울산 부부간첩사건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 알쏭달쏭 이적단체 고려대 '청년' 유죄

13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대 구속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강령을 보면 이적단체로 보기 어려우나 구성원과 단체의 활동을 보면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청년"이 광장사업이외에 특별히 대중을 상대로한 이적활동을 한 것이 없고, 유 씨가 학생이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전자주민카드, 형소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통과됐다.

### 오늘의 행사

- 민가협 "양심 장례식"
  - 때: 14일(금) 오전 10시
  - 곳: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
- 표현의 자유 2차 토론회
  - 때: 14일(금) 오후 2시
  - 곳: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 주최: 민예총 등 14개 사회단체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 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혁'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쪽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동인권정책은 '고통분담론'으로 출발한 뒤 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그 절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반노동·친자본 성격이었던 문민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허리조르기에서 목자르기로

경제적 압박과 생존의 위협은 노동자들이 겪는 최악의 고통이다. 이러한 고통은 문민정권 초기 '허리띠 조르기'로부터 후기 '목 자르기'에 이르기까지 문민정부를 관통하며 이어져 왔다. 문민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고통분담론'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전가로 귀결되었다. 매년 정부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억제 정책을 펼쳤으며, 노사자를 원칙에 위배되는 임금기대 라인마저 95년 다시 등장했다.

차라리 임금의 동결은 건넬만했다. 96년 이래 몰아닥친 'মেয়ে퇴직'과 '정리해고'의 열풍은 고개숙인 아버지를 양산함과 동시에, 사회전반에 '실업의 공포'를 확산시켰다. 정권초기 2% 수준이던 실업률은 97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무려 3% 선까지 증가했다. 또한 외주하청과 파견근로자 등 용역계약이 증가하고, 임시·축박·시간제 취업 등 비정규 고용형태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한층 가중됐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자살 및 가정파괴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는 오로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만이 '국제화'에 발맞

추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급기야 노동법에 정리해고를 명문화하는 '96 날치기 처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격분을 초래하기도 했다. 물론, 95년 고용보험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업·취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현 정부의 공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되기엔 턱없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가당착인 '국제화' 논리



경제적 생존권 못지 않게 소중한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권리이다.

이 가운데 그 나라 노동인권의 수준을 재는 척도는 특히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부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문민정부는 반인권적인 종전 군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답고 있다. 93년 현대 계열사의 공동임투, 94년 철도와 지하철 파업, 95년 현대자동차와 영남대의료원 파업 등 각종 노동쟁의에서 문민정부는 사전개입 또는 적극적인 공권

력 투입으로 일관했다. 특히 정부는 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이를 '국가전복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조계사와 명동성당에까지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후진적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또한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국제화' 논리에 비추어봐도 자기당착적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각종 국제기구들은 △복수노조 허용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3자개입금지조항 철회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누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일례로 95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그해 11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를 3자개입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권고를 민망케했다. 심지어 96년 OECD 가입후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내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마저 초래했다. 문민정부의 금과옥조인 국제화 논리도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적용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권 개선'이라는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중잣대였던 것이다.

'파업권' 대폭 제한

97년 3월 개정된 노동법은 현 정부의 노동권 이해수준을 재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개정 노동법은 △무노동무임금의 명문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현저히 축소, 제한하는 조항들을 곳곳에 삽입하고 있으며,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배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문민'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김영삼 정부 5년은 보여주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5 일(토)

제 10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된데 이어 같은날 내무위에서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 등 주요 인권사안 법률이 줄속적으로 처리된데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13일 민변·민가협 등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어 14일에는 국민승리21·전국연합·「전자주민카드 공추전남지역 공대위」 등이 규탄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천주교인권위원회·민변·참여연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잠기신용은행 앞에서 또한차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단체, 잇따른 규탄 집회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3일 오전 내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의 유선호·이기문 의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부쳐졌으며, 같은날 오후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5표로 처리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규정(민주당) 의원, 박종우·이재오·김태호·김기재·김영진(신한국당) 의원, 김고성·이상만(자민련) 의원, 김충조·박상천·김옥두·유선호(국민회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때 추미애 의원등 국회의 의원 전원만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생활의 편

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화 처리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카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병역사항·사진·지문·발급기관 등 9개 항목 수록된다. 수록항목이 당초 35개 항목에서 대폭 수정된 셈인데, 주민카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생활 침해 부분이다.

개정목적은 '국민 편의증진'

개정안에는 주민카드 자료의 안전성 확보(제18조의4)와 관련해 "주민카드 자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10월 중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안기

부등 행정기관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확인해진 상황이다. 이에 공대위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사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누차에 걸쳐 요구해왔다. 추미애 의원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앞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구(추미애 의원) 비서관은 "전자주민카드의 실질적 위험은 컴퓨터 칩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번 법률개정은 주민카드마련의 근거법률일뿐 주민카드의 형태를 접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새 신분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은 14일 오후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7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양심수가 없는 나라"

#### 민가협, 양심 장례식 치러

민가협이 주최하는 '양심장례식'이 14일 오전 10시경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열린다. 민가협 어머니들과 성직자·대학생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검은 만장과 검은 영정을 든 채 머리에는 검은 머릿수건을 두르고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렀다.

이기욱 변호사는 "신한국당 대표인 이회창 씨는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고 하고, 김대중 씨의 양심수 발언에 보수 언론이 일제히 흥분하고 나온지 얼마 안 돼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가 구속되었다"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작품을 서 씨가 상영했다고 해서 잡아가두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신한국당은 그래도 양심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례식 행렬은 신한국당에서 국민신당으로 이어졌으며, 장례대열에는 양심수들의 가족인 김지영(서준식 씨 부인) 씨, 조순순(장기수 강용주 씨 어머니) 씨와 감옥에 갇힌 손병선 씨의 외손자 임동선(7) 군이 참석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형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도입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기타 선량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가 범죄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당연히 앞서는 가치이다. 실질심사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처를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다."(검찰)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증거의 수집, 보전과 피고인의 출석 및 형집행의 확보를 기하려는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으로써 그 외의 다른 목적, 예컨대 구속을 통한 범죄증정 또는 구속에 의한 일반예방적 효과 등을 달성하려는 것은 판결확정 이전의 절차적 수단에 불과한 구속으로써 형벌을 대체하려는 셈이 된다. 동시에 위와 같은 발상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 "죄 지은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검찰) 그것은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된 후

이제까지 오랜 동안의 잘못된 인신구속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 형성된 국민의 법의식, 법감정에 영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공허하게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인신구속제도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규정에 맞게 개편, 운용함으로써 종래의 잘못된 법의식, 법감정을 고쳐 나갈 수 있다.

▶ "구속은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이다. 구속의 필요성을 가장 잘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마음대로 기각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검찰) 검사에게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판단과 구속영장의 집행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판사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즉, 구속에 관하여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고,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다.

##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심문' 세미나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법조계 내에서의 논의·검토·합의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급격한 논의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법원의 견해에 동조했다.

반면, 검찰측 주제발표자로 나온 박영관(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검사는 다소 격양된 자세에서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권한을 판사가 갖게 됐다"며 "법원이 인권보장을 앞세워 사법독재국가를 만들려 한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오영근(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권이 비대화한다는 지적은 사돈이 남 말하는 얘기"라며, "오히려 검찰권의 비대화가 더 문제"라고 검찰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검사는 과격하고 흥분된 어조로 일관했는데, "왜 갑자기 중세암흑시대나 있던 시대착오적 인권보장론이 튀어나오는가" "우리나라의 인권보장제도는 산철첩 물철첩이다(보장이 잘 되어 있다)" "묵비권은 테러리스트들이나 사용하는 것이다. 묵비권을 고지하는 것은 수사에 불리한 초래한다." "범죄자를 구속했을 때 느끼는 국민의 감동은 불구속제도를 통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가 안된다." "미란다 룰은 신성불가침의 천부인권권이 아니다." "국제인권조약은 미국식 사법의 표현일 뿐이며, 기소된 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 시종 비상식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를 감추지 못했다.

▶ "민생치안 확보와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기관의 인력이 피의자 심문을 위한 호송 등에 빼앗기고 있다."(검찰) 호송전담부서의 신설, 기타 인력과 장비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 자체를 포기할 사유는 될 수 없다.

▶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기각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보다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사자측과 협의하여 구속사유 관련 소명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는 등 노력하는 것에 기인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당연하다. 문제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대수가 의혹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문계규(안동대 교수·형법)

피의자의 인권회복에 획기적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달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질심사로 후퇴시키는 형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현행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다'로 하자는 것이다.

이번의 개정시도가 다분히 기습적이고 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논평의 대상으로 삼기조차 꺼려진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개정안이 법원칙에 더욱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피의자의 관사면접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피의자 심문여부는 피의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원칙에 더 맞고, 또 현행제도도 관사면접에 대한 피의자의 결정권이 무시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은 피의자의 의사를 따르자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검찰의 이러한 강변이 갖는 허구성은 드러나고 만다.

'임의적 실질심사'가 '형식심사'로

개정안이 과연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더욱 철저한가. 개정안에 의하면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심문여부가 결정되므로 현행제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피의자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현행의 임의적 실질심사가 형식심사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어떻게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말인가. 형식심사에서 실질심사로, 다시

실질심사는 임의적 실질심사에서 필요적 실질심사로 이행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신장의 정도라는 원론을 부정하려는 것인가.

만약 현행의 규정예다가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면, 부분적으로 필요적 실질심사를 도입하려는 것이므로, 분명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피의자의 결정에 따르게 하자는 등의 표현을 통하여 마치 피의자를 위

## 인신구속의 집행은 검찰에, 그 필요성의 판단은 법원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한 인신구속 방지'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한 개정인 것처럼 현혹하려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권리는 권리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원칙에 더욱 부합하다는 논거도 파상적인 접근이 빠지기 쉬운 '원리의 왜곡'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권리라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본질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권리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상 더 타당한 권리도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법관면접권은 그렇지 않다. 피의자 심문의 본질은 부당한 인신구속의 방지에 있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로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인신구속의 집행은 검찰에, 그 필요성의 판단은 법원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러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피의자심문은 본질상 피의자의 처분에 맡길 성질이 아니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목표이다. 본질이 이러하다면, 피의자 외에

가족·변호인도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검찰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굳이 권리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피의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영장주의에 의하지는 개정안도 나을 법하다. 웃지못한 원리의 왜곡을 본다. 법의 기교는 그것이 원리에 도전하는 형상이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구체성과 특수성을 위해서 원리에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자기 한계를 지킬 때, 그것은 비로소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장심사제도에 대한 검찰의 일관된 입장의 집요함을 보면, 검찰과 경찰의 차별성에 회의를 갖게 된다. 처벌지향적인 경찰에 대해서 검찰은 법의 적정한 실현을 지향하는 법의 감시자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 영장청구권 및 소추권의 독점, 이 모든 것은 이러한 차별성에서 정당화되었던 게 아닌가.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다.

### 행사와 동정

□ 유가협 창립 12돌 기념 및 12차 정기총회

· 때: 15일(토) 오후4시  
·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 서준식 선생님을 면회하고자 하는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 바랍니다. (741-5363)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3444번 서준식(152-081)

■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상영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5일(토)

호의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속보>

#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기습시위

## 공대위 대표단, 신한국당 총재 면담 요청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3, 14일 국회 내무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진균) 소속 회원 2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저지를 위한 기습시위를 개최했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곧 시위는 저지됐으며, 참석자들은 신한국당사 앞에서 경찰의 봉쇄 속에 남아 있다.

또한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기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오창익(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씨 등 대표단 3명은 오전 10시 15분 신한국당 총재실을 방문, 이회창 총재와의 면담을 요구중이다.

그러나, 오전 11시 현재까지 신한국당측은 대표단과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단은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당사에 계속 머물 계획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8 일(화)

제 10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의원 1백53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백1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초 이날 표결에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법안 통과가 어려웠으나, 신한국당은 서둘러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여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공대위)는 이날 낮 12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보 낙선운동과 위헌법률 신청을 비롯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의 전개,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 운동을 포함하는 모든 법적, 물리적 대응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컴퓨터통신 상에서는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통신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17일 현재까지 총 4백81명이 서명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준식 대표 연락처**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청소수감번호 3444 (152-081)  
연락을 원하는 분은 사립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 "서 씨 구속은 정치적 의도"

시 사무부총장, 김대통령에 서한

국제엠네스티 사무부총장 데릭 에반스 씨는 지난 14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에반스 씨는 "서 씨가 정치적 견해의 표현과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반면, 유사한 행동을 한 다른 사람들은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며 "서 씨에 대한 구속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반스 씨는 또 "표현 및 결사의 자

유를 억압하면서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바라며, 보안관찰법에 의해 과거 양심수들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서준식 씨는 면회과정에서 "김찰도 인권영화제보다는 내 집필활동과 인권운동 활동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표적·보복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의 38 공판

- 민경우(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형
- 나창순(국보법 찬양·교무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형
- 김해련외3(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취재수첩>

####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국회의 졸속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지지하려는 전투경찰의 행렬로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경 한국은행 소속 노동자들이 금융개혁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진출을 시도한 데 이어, 낮 12시부터는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소속 조합원들이 신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선 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이 모여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형사소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위를 갖기도 했다. 정권교체를 틈타 각종 인권관련 악법이 무더기로 처리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몸짓이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전투경찰 십여 개 중대를 투입해 국회정문에서부터 3중4중의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응했으며, 심지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일반인들의 출입마저도 통제해 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당국의 물리적인 차단이 아니라, 이미 국회 스스로가 국민에게서 떠나버렸다는 점이다.

국민인권을 좌지우지하는 전자주민카드와 형사소송법을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리해버릴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들은 이미 민의의 대표자라는 허울을 벗어버린지 오래였다. 국민소환 및 탄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우리 현실을 심분 비웃듯 이날 국회는 또 하나의 죄악을 저질렀다. 시위대가 떠난 뒤 불과 수시간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보란 듯이 통과시킨 것이다.

## 주간/인권/흐름

(97년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 10일(월)

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삼성동 소재 장애인 특수학교인 '지에학교' 설립 촉구/국제엠네스티, 일본내 외국인 재소자들이 폭력과 인종적 차별, 성적인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일본관리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무시하려 하고 있다고 전해

◆ 11일(화)

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의 배후조종해은 혐의(국보법 위반)로 원용수(28·서울대 공법학과 4년 재적) 씨 등 11명 구속/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 소속 장애인과 회원 30여 명,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 열리는 KBS 1층 로비에서 수화 및 자막방송 실시 요구하며 항의시위/유럽사법재판소, 남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남성보다 여성에게 승진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유럽연합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유네스코, '인간 계승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 공식 채택

◆ 12일(수)

통계청 발표, 지난 1년동안 실업자 7만9천명 증가(20.2%)해 총 47만명으로 집계/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대해 30일간 형집행정지

◆ 13일(목)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3당 총무 간담회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해 추가신청할 수 있도록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합의/28개 사회단체, 가톨릭회관에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정부,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소파(SOFA) 개정협상 다음달 재개할 것을 미국 쪽에 촉구기로

◆ 14일(금)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고성호 판사, 죄없는 시민을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보내놓고도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황용하(64·행정서사), 김경복(54·부천 중부경찰서 형사주임) 씨 등 전·현직 경찰관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과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국회 법사위,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보험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 통과/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처음으로 위반행위 39건에 모두 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 물려/국회 환경노동위, 기업부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 우선 변제기간을 대폭 축소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동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 16일(일)

한국은행과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원 등 2천여 명, 종묘공원에서 금융감독기구 강제통합저지를 위한 켈기대회/한양대병원 노조 조합원 3백여명 해고된 전노조위원장 차수련 씨의 복직 약속 이행요구하며 2일째 파업/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웨이징성(47) 씨 석방

## "서준식 석방, 전자주민카드 도입철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참가자 결의문 채택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연세대에서 열린 '97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국내외 참가자 일동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대표의 석방과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2일 발표된 이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 인권상황 개선에 앞장서 온 서 대표의 구속은 한국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필요한 상영물도 당국의 지속적인 간섭에 시달렸다면 서 "이는 한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망에 의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심각한 수준에 치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에 △국가보안법 철폐 △표현과 사상의 자유 완전 보장 △모든 검열과 통제를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0여명 긴급체포

국보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

부천민주노동청년회 회장 박재현 씨를 비롯한 11명의 회원이 17일 오전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부천민주노동청년회는 현재 대선과 관련해 '97대선 노동청년 사업단(대노단)을 구성, 지역과 전국차원에서 대선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박재현 씨는 대노단 대표를 맡고 있다. 연행된 이들 중 양희순(박재현 씨 부인) 사무장은 현재 입심 6개월이며, 이들 부부의 연행과정을 지켜본 양희순 씨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진 상태이다. 또한 회원 이은영 씨와 양승철 씨는 12월7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현재 연행자들은 흥재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행자 명단: 박재현, 양희순, 오장열(교육부장), 이옥선, 장경희, 배동관, 천옥남, 이은영, 양승철, 신익선(이상 회원) 등

## 유가협 회장 배은심 씨 선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5일 오후 4시부터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제12차 총회를 갖고 회장에 배은심(이한열 열사 어머니), 부회장에 김해수(강민호 열사 어머니)·임분이(의문사 당한 정연관 씨 어머니) 씨를 선출했다.

#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이 석 태(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하루소식 1천호가 발간되는 날 오후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접견했다. 구금 상태에 있는 그를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 징역을 꼬박 살고 난 후 다시 사회안전법의 보안처분을 받아 10년을 더 청구보안감호소에 있었는데 88년 석방된 후 불과 3년 뒤인 91년 6월 다시 성동구 치소에 구금되었다. 겹으로 그에게 적용된 법률은 보안관찰법 위반들이었으나 실상은 당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에서 그가 수사기관에 맞서 끝까지 감기훈 씨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겹겹이 경찰병력으로 둘러싸인 병동성당에 감 씨와 남아 검찰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감 씨가 분신자 삼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그의 자살을 사주하였다고 잘못 믿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들을 상대로 감 씨의 무고함을 대변해 왔다. 결국 감 씨는 자진 출두하여 구속되었고 그 또한 같은 날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던 것이다.

그해 여름에 시작하여 쌀쌀한 늦가을까지 계속된 그와의 접견에서 우리는 주로 김기설 씨가 남긴 필적 자료를 같이 검토하는 등으로 재판 준비를 하였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가 그무렵 같은 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여러 재소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자주 언급하던 것이 기억난다. 장장 2천4백여쪽에 3권으로 출판된 「유서사건 총자료집」은 그가 성동구치소에서 출감된 이후 집념을 가지고 펴낸 것이다(요즘 잘 팔리는 책과는 달리 인쇄비를 아끼기 위하여 여백을 없애고 한 면을 반으로 나는 뒤 읽는데도 눈이 아프도록 작은 활자를 촘촘히 배열되어 있다). 거기에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비롯하여 각종 신문, 잡지 기

사, 필적 감정에 관한 관련 문헌 및 인권단체들의 성명서 등 유서사건에 관한 모든 국내외의 자료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처음 펴낸 제대로 된 사건 기록이다. 지금도 그 책을 열면 거기엔 그의 비타협적이고 치열한 진실에의 열정이 두꺼운 책 냄새와 함께 다가온다.

장안동 대공분실 면회실에서 우리는 그가 조사받은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인권하루소식> 1천호가 나오는 날 여기서 지내며 자축하게 되었으니 이걸 행운이라고 해야 할까



요 허허... 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몇해 전 <인권하루소식>이 발간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무렵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였던 일이 생각났다. 당시 미국무부는 연례적으로 작성하는 한국관련 인권보고서에 참고로 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공안사건의 변론에 관여한 한국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미국대사관의 담당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렵의 중요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죽 말해 주었는데 그의 파악이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함을 알고 놀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책상위에 놓여 있던 <인권하루소식>을 들어 보였다.

요즘 검찰이 주도하여 법원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봉쇄를 목적으로 국회에

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금년 초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한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적극 시행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인권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번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은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서대표의 경우 이와 같은 영장실질심사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변호인들의 기대와 달리 법원은 서대표에 대한 심문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1월 8일 오전 11시 20분 서부지원에서 그 심리가 있었다. 재판은 1시간 남짓 후에 끝났다. 서대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증거가 인멸될 여지가 없고, 도망가기는 커녕 사랑방의 대표로서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진술하였으나, 석방청구는 기각되었다.

서대표가 언제 석방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법원이 석방을 거부하였으니 만큼 그의 구금상태는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그는 이인제 대통령후보의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이다. 남달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꿈많은 제일교포 유학생으로 열아홉살 때 한국에 건너와 이후보처럼 "조국에서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그는 일찍이 "종3(종로3가)의 매춘부들의 슬픔"과 "껌팔이, 신문팔이, 구두닦이 어린이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못한 탓에 고시공부를 시작하지 못했다. 그의 거둔된 구금은 양심에 따라 살고 속임수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법인으로서의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로운 하늘의 상찬일지 모른다. 그의 건강을 기원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19 일(수)

제 10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레드헌트> 상영을 문제삼아 지난 5일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가 구속된 이후 지방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레드헌트> 상영 중단협박에서 시작된 당국의 압력은 인권영화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별다른 마찰없이 상영이 끝난 수원, 안양지역에서 관찰구청 및 경찰측이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고발조치등을 취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 지역은 <레드헌트>를 상영하지 않았다.

공연법·음비법 위반 고발조치 수원시 권선구청장은 13일 권용택(수원 인권영화제 추진위원장) 씨 앞으로 "지난 6일부터 3일간 대한성공회 수원 교동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상영한 것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이라며 법집행전 절차로 청문통보서를 보내왔다. 이 일로 18일 구청에 다녀온 송원찬(다산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씨에 따르면, 구청측은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인 카톨릭 안양근로자회관 측에 공연법 위반혐의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안양경찰서 측은 13일자로 이금연(카톨릭안양근로자회관 관장) 씨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에서는 <레드헌트> 상영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741-2407)

발부한 상태이다. 이러한 당국의 탄압은 서울을 비롯해 지역 인권영화제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서울·인천지역의 조기중단, 제주·마산·광주·전주지역에서 <레드헌트> 상영 포기는 그 결과이다.

전주 성당, <레드헌트> 항의상영 한편 인권영화제와 관련한 탄압에 맞서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는 <레드헌트> 동시다발 상영등을 통한 국보법 어기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전주 서학동 성당(문규현 신부)에서 성당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발부등 경찰당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2백여 명이 관람한 속에 <레드헌트>를 상영했다. 또 20-21일 군산 오룡동 성당에서 열리는 군산 인권영화제에서도 <레드헌트>를 상영할 예정이다.

##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촉구 공대위,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2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주민등록제도 시행 29주년을 맞아 18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 차원에서 전개할 것"이며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일방적으로 실시될 경우 주민등록제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만화 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95. 1. 9 명동성당 농성) 쇠사슬을 목에 걸고 절규를 토해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모습은 문민정부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안이었다.

#### 노동의 댓가 모멸과 착취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s)는 국내 인력난 해소와 값싼 노동력 공급을 위해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해 96년말에 이르러 21만명 선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과 영세기업 등에 고용되면서 어느덧 국내 노동시장의 주요 구성원 역할을 맡게 됐지만,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인간 이하의 모멸과 착취였다.

"매일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밖에서 열쇠가 채워진 공장 안에서 일을 했고 일이 끝난 후에도 갇힌 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잦은 구타와 폭행을 당하면서 일을 했지만 사장은 몇 달씩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이 손가락이 몇 개씩 잘리고 팔이 심하게 부러지고도 보상은 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94.1.13 경실련 강당 농성장에서)

#### 합법을 가장한 노동력 착취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식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연수생에 대한 낮은 임금은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취업 전선으로 내몰았고,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적 약점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국제사회 '인권탄압국' 지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으로 낙인찍히는 수모마저 겪고 있다. 95년 필리핀 마닐라의 한국대사관 앞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졌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놈 개새끼'라는 책이 불타나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종교·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지속되는 등, 문민정부는 국내외의 압력에 직면했지만, 결국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재계 등의 로비와 입김에 밀려 인권보장책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97년 초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 막판에 철회한 것은 자본 편향의 정부에게서 충분히 예상되는 선택이었다.

####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96년 8월 남태평양의 원양어선에서는 끔찍한 선상반란 행위가 벌어졌다. <페스카마호> 한국인 선원들에 의해 고깃배만도 못한 처우와 학대를 당하던 조선족 동포 선원들이 11명의 목숨을 살해한 것이다. 반란주모자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38) 씨는 이렇게 전했다. "매일 육과 몽둥이, 쇠파이프 등으로 맞아 진저리가 났고, 하루에 21시간씩 작업을 하며 흐리멍덩한 정신상태로 지냈습니다. 나는 개라 불렀고, 아내는 암개라 불렀습니다."

<페스카마호>의 비극은 '반차별 및 강제노동 종식'이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을 도외시한 결과였다.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은 원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국내 노동자들과의 근거없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

터 풀어가야 한다.

대선 이후 새롭게 등장할 차기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또한번 무시한다면, <페스카마호>의 비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지 못하리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91.11.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 94년

1.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노동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2.13 노동부, 고용허가제 마련 예정

9.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96년

4.26 국내 종교·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6.13 천안전방 탈출 산업연수생 폭로 "한달임금 4만원, 공휴일노동 16시간"

7월 여야 3당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약속

10.8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서 국회제출(5만6천2백12명 서명)

▷ 97년

5.22 경제장관 간담회, 고용허가제 도입 합의

7.13 명동성당 단식농성(6일간)

8.26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에도 퇴직금 지급" 판결

9.9 경제장관 간담회의, 고용허가제 포기,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골격 유지키로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20 일(목)

제 10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이번엔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19일 경찰청이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 회장 박재현(33) 씨를 포함한 관계자 11명을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한데 대해 '부민노청 점탈 공대위'측은 이적단체 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박재현 씨등을 면회한 이들에 따르면 경찰측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장 김봉태, 진보민청)의 강령과 그 산하 단체인 부민노청의 규약을 문제삼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희순(29·임신 6개월, 박재현 씨 부인, 불구속입건) 씨를 제외한 연행자 대부분이 17일 오전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연행된 뒤부터 18일 오후 경찰서로 이감되기까지 거의 잠을 못자 자신이 진술한 내용도 기억

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 잠만재우기 수사

부민노청 공대위측은 "규약에는 부민노청이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있을뿐"이라며 "이적성 시비는 결국 모든 민주단체들의 존립 자체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보민청의 한 관계자도 "진보민청 강령은 청년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민중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진보민청은 물론 부민노청의 강령 및 규약등이 이적성을 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승리21 부천시지부는 "이번 구속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민주단체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특히 박재현 씨가 대노단(97대선 노동청년사업단) 대표까지 맡는 등 부민노청이 대선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시점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아 국민승리21의 대선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 <레드헌트> 상영신청 받습니다.

■ 당국은 <레드헌트>의 이적성을 문제삼아 서준식 씨를 구속하고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레드헌트>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묻기 위해 <레드헌트>의 전국동시다발 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회, 학교, 생산현장 등 어느 곳에서나 상영을 원하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문의 741-2407)

11명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2차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관련해 가족 및 대책위는 20일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이석범·한정화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 <레드헌트> 테이프 압수 방침

군산 오룡동성당 경찰 검문 강화

<레드헌트> 상영을 포함해 20, 21일 이틀간 인권영화제 행사를 갖는 군산 영화제조직위는 19일 군산 인권영화제 탄압준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영화제조직위에 따르면 경찰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9일 오전부터 상영장인 군산 오룡동성당 입구와 주변을 에워싸고 사복경찰을 배치해 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레드헌트> 테이프와 영화상영에 관련된 기자재를 압수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조직위는 성명을 통해 △오룡동성당 입구의 주변에 대한 검문중단과 경찰병력 철수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무죄석방 △표현의 자유보장과 검열제도 철폐 등을 요구했다.

#### 인권영화제 민족예술상 수상

"표현의 자유 신장 기여"

제2회 인권영화제가 민족예술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구중서)은 지난 15일 목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권영화제는 △지역문화역량의 연대에 기여 △영상매체를 통해 인권문제를 홍보함으로써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 △표현의 자유 증진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1천5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45년 미군의 진주이후 50여 년간 끊임 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미군범죄가 본격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93년 발족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의 활동이 기여한 바가 크다.

**미군범죄 하루평균 2건 발생**

지난 10월 운동본부가 펴낸 주한미군범죄백서에 따르면, 45년 이후 발생한 미군범죄는 무려 10만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93년 이후 96년 6월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2천2백93건으로 하루평균 1.8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군범죄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무수한 미군범죄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음에 따라 범죄가 계속 양산된다는 사실에 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앞서 언급한 2천2백93건의 미군범죄 가운데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고작 2%에 불과하다(일본의 경우 95년도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율은 30% 수준).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 한미행정협정(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SOFA)에 의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2조 형사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미군군속이나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1항) '한국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2항)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군도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7항)며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내 땅 아닌 내 땅 미군공여지**  
 미군에 의한 인권피해는 단순 폭행이나 강력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96년 동두천 쇠목마을 투쟁을 통해 부각된 미군공여지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하나의 현안이었다. 공여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용권이 보장된 땅으로서, 여기엔 미군기지 뿐 아니라,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까지 광범위한 국토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과 땅이 어느날 자신도 모르게 미군공여지로 지정되어 버리고, 미군이 "나기라"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또한 용산·동두천을 비롯해 전국 44 곳에 달하는 미군기지에 대해서 미군은 한푼의 사용료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반환여부는 전적으로 미군의 의사에 달려 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정부는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67년 발효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미군범죄 근절 방안으로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

관의 설치 △미군 수감시설의 확충 및 재조정 △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청구 확대 △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양국간의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는 일이다.

**오만한 가해자, 조아리는 피해자**

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에 의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미국은 '주일미군 반성의 날'을 선포하고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국민들에게 사과를 표시했다.

반면, 95년 미군의 총무로 난동사건 당시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국민들은 미군범죄가 견줄 수 없게 된 것처럼 유도되고 있으며, 문제는 미군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무책임한 언론이 격양된 국민들에게 특유의 선정적인 방식으로 이를 묘사하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데 있다."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면서도 한껏 조아리지만 하는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미군범죄의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미군범죄 주요사건**

- 존 병장의 김국해(53) 씨 성폭행 사건(93. 5. 29) - 존 병장, 95년 1월 형 확정으로 천안교도소 수감됐으나, 95년 8·15특사로 석방
-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 씨 택시 강도 사건(93. 12. 16)
- 용산 미군헌병 4명의 정양환 씨 강제연행 사건(94. 1. 28)
- 미군속 대니엘의 윤현아 씨 성폭행 사건(94. 4.-95. 1. 9)
- 용산 미군헌병대의 세 모녀 감금폭행 사건(94. 10. 25)
- 동두천 미군 5명의 이영직 씨 집단폭행 사건(94. 10. 17)
- 서울 총무로 지하철역 난동 사건(95. 5. 19)
- 실행 선고받은 미군속 케이리, 감시소홀 틈다 미국으로 도주(95. 6. 9)
- 벤넷 이병의 천금숙 씨 강간치상 사건(95. 11. 29)
- 미군속 헨리의 강운경 씨 살해 사건(96. 1. 18)
- 윌리엄스 일병의 에바다눔아원생 성추행 사건(96. 6. 10)
- 뮌히 이병의 이기순 씨 살해 사건(96. 9. 7)
- 홍익대생 조중필 씨 살해 사건(97. 4. 3)
- 차니 병사의 이현주 어린이 성추행 사건(97. 5. 3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21 일(금)  
 제 10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북풍,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예상하던 북풍이 불어왔다.

안기부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부부간첩단' 사건과 '고청간첩 고영복, 심정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기부는 두 가지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부부간첩'의 국내활동과 관련해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발표와 일부 진보적 색채의 언론에 대한 경고성 비난 발언이다.

이청신 안기부 대공담담투보는 "일부 특정신문과 잡지가 북한의 대남공작기 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정신문은 양심수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을 광고로 게재하는 등 국민의 건전한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고, 무분별한 대북 동정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잇따라 진보언론에 시위를 겨누었다. 안기부가 지목한 언론은 <한겨레신문> 월간 <말> <길> 등과 전국연합, 민족회의, 한청협 등 재야사회단체의 기관지들이다. 또한 '부부간첩' 사건에 대한 엠바고(보도통제)를 깨뜨린 <시사저널>을 겨냥한 듯 "일부 언론이 간첩검거 사실을 미리 보도함으로써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안기부는 또 "광범위한 좌익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주장 아래 "1천5백명

의 국내 인사가 포섭명단에 들어 있으며, 납과간첩과 국내고첩망에 대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관련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해 잠고인 조사 및 동향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기부는 수사발표에 앞서 진보적 지식인이나 재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공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안기부의 발언은 진보적인 언론 및 활동가들에 대한 공개경고장 또는 향후 공안탄압의 신호탄이라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안기부의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안기부가 이번 사건을 공안정국조성의 계기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사법부가 국가기밀누설(간첩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 점에 불만을 표시하며, "간첩에 대한 법해석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향후 공안수사의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안기부는 "부부간첩을 신고한 정대연(울산연합 집행위원장)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등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 씨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검토했음을 드러냈다. 안기부는 또 "정 씨의 신고는 그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발언해 전국연합과 울산연합측의 강한 비난을 받았다. 전국연합 등은 "정 씨의 기자회견을 매도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만화사랑방**



**서준식 대표 면회·편지**  
**가능합니다.**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동포구치소 수감번호 3444(152-081)  
 · 면회를 원하는 분은 사랑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임기내에 실천했다.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보다는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온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여성·사회단체의 노력이 끌어낸 결과였다. 특별법과 처벌법의 제·개정을 통해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결국 문민정부 아래서의 여성들의 승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여성 인권운동의 승리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말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갖지 못했다. 강간, 아동성학대, 아내구타, 성희롱 등은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인숙 씨, 서울대 조교 우희정 씨의 폭로 등을 거치면서 성폭력 문제는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여성운동단체 등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점, 전통적으로 단단했던 가족구조가 변화를 겪고 있는 점과 개인의 문제들을 사회구조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확산된 것 등에 힘입은 바도 크다.

### 80년 대 이후 사회문제로 인식

93년 제정된 특별법에는 ▲전족관계에 의한 강간 ▲업무상의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져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 성폭력에 대한 시민, 사법부 및 검찰 등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96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최병하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며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3월 28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권성 부장판사)가 강간을 모면하려고 가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홍 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

반면, 교수에 의한 성희롱이라는 전대미문의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대 우희정 씨 사건이 95년 7월 25일 항소심에서 우조교의 패소로 판결된 것은 성폭력방지운동을 벌이던 각계에 충격과 실망, 분노를 안겨주었다. 또한 피해자 고소율이 제정 이전 17.0%에서 제정 이후 17.7%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등 특별법의 많은 미비점들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제정과 동시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표 참조)

### 미완으로 출발한 특별법

결국 여성단체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은 올해의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특별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과 친고죄 폐지 ▲전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전족까지 포함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가능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피해자

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해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되기보다는 정조의 관점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문제로 가두게 된 점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 인식전환 등 숙제로

한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각계의 요구도 커다란 성과를 얻어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처벌법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피해자가 요구할 때 경찰관 등이 긴급출동을 해야 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형사처벌이 가능도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사회봉사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계의 요구를 1백% 가까이 수용한 선진적인 것이었다.

### 선진적인 가정폭력 처벌법 마련

여성을 비롯한 각계의 노력이 특별법과 처벌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다.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실효성있는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처벌법 또한 입법 정신에 걸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 각계의 감시와 감독도 더욱 요청된다.

### 피해유형별 전체 상담 중 고소한 비율

성폭력특별법 제정 전	피해유형	성폭력특별법 제정 후
15.1%	강간	19.5%
52.8%	윤간	23.5%
53.3%	강간미수	26.2%
13.6%	일반성추행	14.5%
4.8%	언어 추행	6.5%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22 일(토)

제 10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국제펜클럽 서준식씨 석방촉구 베를린영화제 등 <레드헌트> 상영 타진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인권단체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국제펜클럽 구속문인위원회는 긴급행동문을 통해 "서준식 씨를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정부에 대해 "서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그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지부도 서준식 씨 구속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하며, <레드헌트>의 구입을 문의해 오기도 했다.

서 씨가 체포된 지난 4일 이후 국제 엠네스티, 대만인권협회, 세계고문반대모임 등은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재일한국인 정치범지원회, 아시아인권위원회, 재독양심수후원회, 재유럽민주시민모임 등도 서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인권단체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영화제와 베를린영화제 등은 <레드헌트>의 구입·상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군산 <레드헌트> 3백명 관람

또한 당국의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군산에서

**11월 구독료 납부하셨나요?**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구독료만으로 운영됩니다. 자료공지를 받지 못하는 분은 은행에 비치된 자료공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로번호: 7618848**

성황리에 상영됐다. 군산 인권영화제 주최측은 20일 오흥동성당(주임신부 문정현)에서 인권영화제 개막식을 갖고 예정대로 <레드헌트>를 상영했다.

문정현 신부는 영화상영에 앞서 "서준식 씨의 구속 소식을 듣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다"며 "<레드헌트>의 상영이 제 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대리인 박정환 감독은 "국민들이 직접 영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순회상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화제엔 어린 학생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예상보다 많은 3백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상영장 밖에선 서준식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

행됐다.

한편, 경찰은 성당 진입로에 전투경찰을 배치하고 사복형사 30여 명을 동원했으나, 별다른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 언론노련 민주언론상 특별상 날치기법 철폐 위한 통신지원단

올해로 7회를 맞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민주언론상 대상이 <한겨레신문> 김현철 씨 비리 취재팀과 노동약법 철폐를 위한 방송총과업을 이끈 방송사노조위원장에게 돌아갔다. 또한 특별상은 총과업당시 공정한 보도에 힘쓴 마산 MBC 라디오광장 임혜숙 PD와 통신공간에서 뛰어나다며 속보를 전한 '노동약법, 안기부법 전면철폐'를 위한 통신지원단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통신지원단 단장 홍석만(27·지식인연대 간사) 씨는 "국내 통신공간에서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연대 차원에서 국내문제를 정확·신속하게 알리려 했던 것을 높게 평가한 듯 싶다"며 기쁨을 표시했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층 국제회의장.

###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폐 1만인 서명운동

지난 17일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를 위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낮 12시 종로2가 YMCA 앞에서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 20여 명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폐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서명 및 홍보작업을 벌였다. 서명작업은 이날부터 12월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폐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과 함께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후진적인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불필요하게 등초본을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안기부, 경찰청 등 공안망의 정보과 일 공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 >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20일, 안기부는 울산부부간첩사건과 서울대 교영복 고정간첩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첩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안기부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계속되는 간첩수사로 인해 또 다시 매카시 선풍이 일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안기부의 발표 속에 2백여 명 내사, 1천 5백명의 명단 등이 그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진보-천북이라는 등식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매카시즘은 50년대 미국 정계를 강타했던 초보수주의다. 매카시즘의 특징은 도그마한 이데올로기로 공포정치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성이나 비판과 토론이 들어설 자리를 잃는다. 한국 현대사는 바로 매카시즘의 극대화를 통한 독재권력의 안정화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갱이'이란 말에는 어떤 검증도 필요없었다. 국가보안법은 이 '빨갱이'를 권력과 공안기관의 의도대로 손쉽게 제조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왔다.

'주사파'라는 가공할 상징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매카시즘은 일단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다. 93년 3월에 단행된 출소 장기수 이인모씨의 복송은 그야말로 '문민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통한 지배를 종식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기대를 갖게 했다. 그해 12월에는 안기부법이 개정되어 그런 기대는 헛된 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은 인지했을 것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91년 구속 양심수는 1천3백

56명, 92년에는 1천1백45명이었던 것에 비해 93년에는 총 1백95명으로 거의 1/6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94년부터 이런 기대는 쉽게 허물어졌다. 권력의 뒷켠으로 물러나 있던 보수세력은 북한 발목공 사건, 한총련의 정권 타도선언, 전기협 노동자들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그 터전을 닦더니 김일성 주석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매카시즘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 신부는 "일부 야당, 종교계, 언론계에 주사파가 7백50명 가량 압약" 등의 발언을 해대었고, 정부는 곧 주사파의 발본색원을 위한 강경대책을 마련했다. 이제 주사파라는 상징이 빨갱이라는 상징을 대체하면서 급기야 경상대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북한 장하금 교수 사건' 등으로 그 광기의 절정을 보여준다.

94년부터 전개된 신공안정국 95년 안기부는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으로 전국연합 박총렬 씨를 20일간 고문수사를 벌였지만, 1심에서 무죄선고가 판결이 내려졌다. 96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의 연행자를 낸 연세대 사태와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사회분위기를 초보수화로 이끌더니 급기야는 그해 말 노동법과 함께 계약된 안기부법을 날치기해 버리게 된다. 97년에 들어와 4월에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가 대검 공안부에 의해 발족하고, 이후 한총련 출범식을 빌미로 대대적인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검거작전으로 이어진다.

이런 일련의 신매카시즘의 과정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의해 선도되고 뒷받침되었다.

"서울 도심에 속대밭으로 만든 난동배들은 본질에 있어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조선노동당' 재남 행동대원들이자 김정일의 충실한 하수인들이지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다." (조선일보, 96년 8월 16일자 사설)

위와 같은 논조는 이미 비판을 허용

하지 않는 도그마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신매카시즘의 정체를 잘 보여준다.

이런 극단적인 논리에 대한 비판은 주사파를 두둔하는 것으로 매도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포와 점목의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런 신매카시즘의 등장과 발전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공안세력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따라서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더니 급기야 96년에는 이전의 정권 때보다도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검찰 공안부가 주도된 장악 두 번째의 특징은 이전의 정권에서는 안기부가 공안세력의 중심을 자처해왔으나, 이제는 검찰(대검 공안부)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검찰 독재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점이다.

셋째, 신매카시즘은 언론에 의해 다분히 주도되고 있는 점이다. 과거에는 공안기관의 주문(보도지침)에 따라 수동적인 보도로 일관했다면, 현재정권에서는 독자적인 자신의 논리를 갖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몰아가면서 신매카시즘의 선봉에 언론이 서왔다. 매시마다 <조선일보>등의 선동으로 매카시즘의 분위기는 조성되기 마련이었다.

넷째, 과거의 활동을 문제삼아 구속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종종 무죄판결도 나오게 되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본질적으로 갖는 냉전적 흑백논리를 해체하지 못하는 한, 신매카시즘은 언제나 부활할 수 있음을 현 정권에서 보았다. 40년 전 미국에서 종언을 고한 매카시즘은 아직도 "누구의 편이냐"는 물음에 움츠러드는 이 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가뭇두고 있다.

**서준식 대표 면회·편지 가능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동포구치소 수감번호 3444(152-081)  
 면회를 원하는 분은 사랑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1997년 11월 25 일(화)  
 제 10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도 축소에 앞장서 피의자 인권을 후퇴시키더니, 이번엔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새벽 연행된 서울대 정병도(총학생회장 당선자) 씨와 배병화(부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김도형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경 관악경찰서를 방문, 연행된 서울대생과의 접견을 요구했지만, 경찰서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요구하며 접견을 불허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피의자 면접권을 설명하며 재차 접견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다.

의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이 임의로 침해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 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접수할 수 있다" (제34조)는 규정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법원 역시 피의자 접견권을 보장하는 관례를 남기고 있다. 96년 6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95년 12월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와 96년 2월 서울지법 정해창 판사는 각각 박총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접견불허 처분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막은 한층 얇아졌으며, 이에 따라 수사초기 단계의 변호인 접견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거부행위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각성이 요구된다.

### .....오늘의 주요 인권

- 민경우/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부 311호 속행
- 이종린/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부 311호 속행

☞ 2면으로 계속

##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 판결요지: 변호인의 피의자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당사자: 원고- 김한주, 피고- 대한민국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2백만원 및 이에 대한 1991년 4월 30일부터 1991년 9월 19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단: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변호인의 접견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써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 형법 제62조,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바... (종략)... 피고는 공무원인 위 박정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사 이재철

**서준식 대표 연락처**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동포구치소 수감번호 3444 (152-081)  
 면회를 원하는 분은 사랑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1월 29 일(토)

제 10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28일 기소됐다.

현재 정확한 공소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초 서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형법(현주건조물침입죄)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각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법적용의 임의성 및 부당성 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서 씨에게 적용된 법률 가운데 음비법은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포 등)을 적용시킨 것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같은 영화가 상영됐다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 시비와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영화의 내용 자체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27일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광희 변호

사는 "서준식 씨가 보안관찰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담당경찰관을 통해 늘 동태가 파악·보고되고 있었다"며 서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준식 씨는 지난 4일 체포 당시 사무실과 자택에서 실시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현행 압수수색 관행의 위법성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 또한 관심거리다. 서준식 씨는 체포된 이후, 본건(〈레드헌트〉 상영 혐의)과 관련없는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벌여

진 사실과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 왔다. 따라서 법정에서 옮겨진 〈레드헌트〉 공방과 각종 반인권 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김영삼정부 인권상황평가 대한변협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함정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에서 제49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행사로 김영삼정부 5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차병직(대한변협 공보위원) 변호사가 주제발제를 하며, 경찰폭력의 피해자 이철용 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새책소개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83년 창립이후 아내구타와 성폭력 등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꾸준히 도전해 온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연구총서 첫번째로 「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하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를 내놓았다.

이 책은 여성의 전화가 지난 87년 구타당해도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방 한 칸 짜리 쉼터를 마련한지 10년만의 결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목표하고 있는 바람직한 쉼터의 방향과 대안은 그동안 쉼터를 이용했던 여성들과 그들과 함께한 상담원, 사회복지사 등 많은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인숙, 김혜선, 신은주, 세 명의 연구진은 97년 현재 민간과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13개소에 지나지 않는 쉼터의 열악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에게 주어져야 할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보는 아내구타 문제는 "결혼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라는 남성의 '자기' 여자에 대한 통제전략이 주요 동기이고, 주도적인 가해자는 남편이며, 그 폭력의 수위는 여성이 굴복할 때까지 상승·심화된다. 또한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유지된다는 면에서 '가부장적 테러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다양하나 그중 아내구타 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위급할 때 긴급히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여성 자신이 길들여진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책은 쉼터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을 통해 쉼터의 방향과 대안을 찾고 있다. (김인숙·김혜선·신은주 지음/나남펴냄/7천원)

#### 서준식 대표 연락처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앞 등포구차수 수감번호 3444 (152-081)  
·연락을 원하는 분은 사랑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 <인권하루소식> 97년 11월분 총목차 (998-1018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998	11/1	1	삼미특수강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한국후포주 노조 재정사업/대한변협 노조 창립
		2-3	10월 총목차(976-997호)
999	11/4	1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주요 공판
		2	〈성명서〉 진흙탕싸움을 견어치워라(인권운동사랑방)/주간인권호름(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3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장호순 교수)
1000	11/5	1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체포, "양심수는 있다"/기획소개-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2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전혜루 보금자리 마련 집들이/주요공판 안내/[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9차 공판 예정
		3	〈인권하루소식 1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
		4-5	〈인권하루소식 1천호 특집〉 독자가 바라본 인권하루소식①
호외	11/5	1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1001	11/6	1	한국타이어 성폭행 사건 미제로- 검찰, 정황조사 외면한 채 수사종결/〈현장스케치〉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 '인권의 밤'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①삶의 질
		3-4	〈인권하루소식 1천호 특집〉 독자가 바라본 인권하루소식②
1002	11/7	1	서울대교수 고정간첩 혐의, 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서준식 씨 수사 방향선화, 북한인권 토론회 자료·해의체류 문제삼아
		2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민주노총·경실련, "서준식 씨 구속은 대선용 탄압"/ 수원 인권영화제 〈레드헌트〉 제외한 채 개막
호외2	11/7	1	〈서준식 대표 수사속보 2〉 인권운동사랑방 활동, 규약, 조직 등 집중수사
호외3	11/8	1	〈서준식 대표 수사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1003	11/8	1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모란공원 열사추모비 건립/ 삼미특수강사태 국제 관심사로, 캐나다노조 포철에 항의서한/ 국민승리21, 양심수 석방 촉구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②대형참사
1004	11/11	1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민변·참여연대,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인터넷 서명운동, 서준식 씨 석방촉구
		2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주요공판/ 주간인권호름(11월 3일부터 9일까지)
1005	11/12	1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사랑방 만평(영장실질심사)
		2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출판·사상 탄압 대응 대책기구 발족
		3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③후퇴하는 주거권
1006	11/13	1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2	영장실질심사제 개정에 대한 검찰·법원 입장 비교
1007	11/14	1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전자주민카드·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불교 6개단체, 부부간첩 사건 공개수사 및 서준식 씨 석방 촉구/ 고려대 '청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유죄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④노동권

### <인권하루소식> 97년 11월분 총목차 (998-1018호)

호	월/일	번	기 사 제 목
1008	11/15	1	인권후퇴법을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 공대위 규탄집회/ 민가협, 양심장례식 치러
		2	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3	<영장실질심사 관련 특별기고>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문체규 안동대 교수)
호외	11/15	1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기습시위, 신한국당 총재 면담 요청
1009	11/18	1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을 신청 등 정면대응"/ AI 사무부총장, 서 씨 구속은 정치적 의도/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2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참가자 결의문 채택, "서준식 석방, 전자주민카드 도입 철회"/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0여명 긴급제포, 국보법상 이적단체 혐의/ 유가협 회장 배은심 씨 선출/ 주간인권흐름(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3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이석태 변호사)
1010	11/19	1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사랑방 만평(전자주민카드)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⑤외국인노동자
1011	11/20	1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레드헌트> 테이프 압수 방침, 군산오룡동성당 경찰 검문 강화/ 인권영화제 민족예술상 수상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⑥미군범죄
1012	11/21	1	북풍,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사랑방 만평(간첩사건)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⑦성폭력, 가정폭력
1013	11/22	1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촉구, 베를린영화제 등 <레드헌트> 상영타진/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날치기법 철회 통신지원단, 민주인문상 특별상 수상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⑧신매카시즘
1014	11/25	1	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관례>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주요 공판
		2	<박노해 문화제를 다녀와서> 경찰 방해공작 불구 '희망' 확인/ 주간인권흐름(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3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⑨통신, 표현의 자유
1015	11/26	1	인하대, <레드헌트> 전국순회상영 첫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사랑방 만평(대인지뢰)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⑩사법개혁
1016	11/27	1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위협...경기교육청 방관/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2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정권 인권정책 평가> ⑪국제인권조약
1017	11/28	1	헌재,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서울지법, "불법적 불심검문에 국가배상" 판결
		2	경찰, 문규현 신부 출석요구...<레드헌트> 성균관대 상영, 서울대는 무산/ "공안물이 중단하라" 민변, 이장희 교수 영장기각 환영/ 케네디인권센터, "서준식 석방, 국보법 폐지" 촉구/ 서준식 석방 촉구 목요집회, <레드헌트> 조성봉 감독 참가/ 사회과학서점 2명 구속기소
1018	11/29	1	서준식 씨 기소/ <책소개> 『여성운동과 사회복지』/대한변협, 김영삼정부 인권상황 평가토론회
		2	11월분 총목차(998-1018호)

# 인권하루소식

## 97년 12월

### (제1019호 - 제1035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2 일(화)

제 10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레드헌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로는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날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주최로 〈레드헌트〉가 상영될 예정이던 인하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레드헌트〉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했지만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미 다른 곳(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작품이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내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린 결정이었으며, 법리에 맞게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시 인하대 총학생회측에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상영취소 압력을 넣었으며, 부총학생회장인 박정용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흘리기도 했다. 박 씨는 “영화 상영 이후 지금까지 영장발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분히 ‘협박용’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천지법의 결정은 공안당국의 〈레드헌트〉 이적성 시비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관

심을 끌고 있다.

##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도시빈민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려는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창립을 준비해온 도시빈민여성연합(위원장 현호월, 빈여연)이 1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3백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현호월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빈여연 회원들은 지역단위 지회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을 극복하고 지역 정치 실현을 통해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빈여연은 △빈민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 △순환식 개발을 원칙으로한 주거권, 생존권 실현 △생활협동사업을 통해 모범마을 만들기 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영세상인 영업권 인정 △강제 철거반대와 인간안보 우선 등을 사업 목표로 삼고 있다.

## 여학생 성추행 사건 항고 기각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지은희 등 공동대표)은 지난 11월28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권력에 의한 96년 연세대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항고를 기각한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성명을 통해 “세계는 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범죄를 막아내기는 커녕 스스로 성폭행을 자행하기까지 하는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6년 11월 21일 여연과 피해여학생 7명 공동으로 당시 연세대사태 현장 진압경찰과 시위책임자, 박일룡 당시 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으며, 검찰은 올해 3월 20일 이를 기각한데 이어 항고마저 기각한 것이다.

## .....주요 공판 안내

- ▶ 2일(화)
  -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최예경(고대 청년, 국보법)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권오혁(한총련 및 선거사건, 국보법) 오후3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 이영두(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 ▶ 3일(수)
  - 김태운(서래스님, 국보법 금품수수 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신건
  - 최인기/오경민(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신건
  - 함운경(국보법 불고지죄) 오후3시 합의7부 423호 신건
- ▶ 4일(목)
  - 김영복/박기동(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서울고법 형사국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3 일(수)

제 10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난민

### 안기부, 사지 내물고 언론 입막음

북한식량난민 13명이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오히려 이들을 베트남정부에 인계하여 사지로 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현재 지뢰밭으로 피신한 난민 가운데 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북한난민들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한국대사관)으로 주선한 것이 안기부이며, 외무부와 안기부 등의 요청으로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마저 봉쇄된 상황이다.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통일강남이보내기도모임(강남이모임)은 2일 오전 10시30분 가톨릭센터 7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주중국대사, 안기부에 의해 사지로 내몰린 북한식량난민 13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식량난민과 함께 베트남 국경을 넘어 10월 20일 한국대사관으로 인도되기까지 생사교락을 같이한 김재오 전도사가 증언했다.

김재오 전도사에 따르면 흥 아무개(35·여, 무산역에서 굶어죽기 직전 인신매매단에 팔려 중국으로 옴) 씨 등 13명은 4월 초기 식량난으로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현지에서 생명의 위협과 현지인들의 비인간적 위협에 견디다 못해 한국 망명을 결심하게 된다.

베트남 주재 한국한국대사관으로 이들이 중국 연변에서 북한 식량원조 활동을 벌이던 강남이모임을 만난 것은 4, 5월경이다. 그 뒤 7월 28일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 집단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주중국대사관 박종호 서기관은 "그들은 동포지 대한국민 국민은 아니다. 그들은 범법자이기 때문

에 도와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들은 대사관 공개난 입을 결심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안기부가 신원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베트남을 주선하게 된다.

9월 16-26일 북한난민과 강남이모임 회원등 18명은 베트남 국경폭포를 넘는 등 목숨을 건 7천Km의 대장정을 하게 된다. 드디어 10월 20일 한국대사관에 이들을 인도한 뒤, 21일 김재오 전도사 일행은 한국으로 귀국한다.

#### 강제추방, 7명 생사 불명

그러나 강남이모임 회원들은 11월 중순 중월 국경지대인 중국 남방에서 흥 씨가 구조요청을 해왔다는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된다. 흥 씨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대사관측이 이들을 베트남 정부측에 인도했고, 다시 베트남 정부는 이들을 인접국으로 강제추방을 했다. 하지만 중국 군대 역시 난민들을 다시 베트남쪽으로 내몰았고, 이들 전원은 베트남 군대에 체포되어 수감되어 풀려나왔다. 베트남 내무성 책임자로부터 "한국정부가 받지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중국 공간에 넘겨 북송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중국쪽으로 내몰린 난민들은 체포를 피해 지뢰밭으로 달아난 것이다.

현재 13명 중 강 아무개 씨 가족등 5명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보호하고

있으며, 구조요청을 해온 흥 아무개 씨는 강남이모임이 보호하고 있으나, 지뢰밭으로 들어간 나머지 7명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한국정부를 믿었다"

김재오 전도사는 "정부에 공개적으로 망명신청을 했더니 환영을 데려올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비공개적으로 진행하자고 말해 이 말을 믿었다. 하지만 국경의 지뢰밭을 피해 국경폭포를 지나 죽음을 감수하면서 베트남으로 넘어왔을 때 대사관측이 한말은 '국경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안기부 직원은 '이들을 한국에 데려올 것이다. 텔레비전만 봐달라'고 말해 이를 믿었다"고 말했다. 흥 씨가 위급한 상황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미뤄온 것은 안기부측이 이 사실을 공개하면 북한난민 13명을 데려올 수 없다는 협박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도사는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절차를 밟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한국정부가 이들을 송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는 지난 11월 27일, 29일 베트남과 중국 현지 조사작업을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외무부등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기부는 강남이모임 등에 보도자제를 요청한 것 외에도, 지금까지 언론사측에 보도봉제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보도기자는 "외무부와 안기부는 보도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 토론회: <레드헌트> 이적표현물인가

때·4일(목) 오후3시/ 장소·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서준식무죄선방공대위

##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김영삼 정부하의 인권상황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에게 낙제점수를 주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즉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 △경찰·안기부·검찰·법원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반인권적 법령 및 관행 △일반 시민과 법집행관리의 인권의식 함양 등 모든 과제들이 실패 또는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그나마 개선된 부분도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요구에 의해 얻어진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 무정책, 무개념, 무의지

김영삼 정부의 인권정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선 참석자 모두 "정부의 무정책, 무개념, 무의지"를 질타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선(방송대 법학) 교수는 "정부가 소수자보호라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권의 진전이 실패로 끝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종철 한겨레 논설위원은 "인권을 이해못한 김영삼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환상이었다"고 말했다. 유선영 변호사도 "토끼몰이와 마녀사냥식 정국운영에만 매달리면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등 인권탄압기구를 온존시키는 등, 김영삼 정부는 인권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었던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인권개선이 실패한 데는 인권운동이 자기 몫을 못한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그는 "90년대 인권운동도 여전히 사건을 뒤쫓아가기 바쁜 모습이었으며, 여러 인권단체들의 각개약진을 전체 인권문제에 대한 연대의 틀로 묶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기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들도 제출됐다.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의 인권

문제가 여전히 차기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인권을 독립된 정책대상으로 실질화하기 위해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정비할 것 △인권개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의 내용을 확정하고 실현방법을 강구할 것 △인권교육 전문가의 양성과 각급 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제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차기정권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명분 때문에 사회권이 특히 소홀히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사회권의 확대와 신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후포구 노동자 일본 원정 현지 사장, 노동성 방문 예정

한국후포구 노동자들이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윤동만 노조위원장 등 후포구 노동조합 대표단 3명은 2일 일본으로 출국, 앞으로 2주일간 일본원정투쟁을 벌이게 됐다.

대표단은 일본후포구 사장인 가와모또 씨와의 면담 및 노동성 방문, 일본노동단체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단은 가와모또 씨와의 면담을 통해 "교섭 제게, 노조 인정, 용역강제철폐"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가와모또 씨와의 담판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좀 더 강력한 규탄투쟁도 시도할 계획이다.

### 전자주민카드 예산 삭감 촉구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 보류 요청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대책위)는 2일 "IMR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총 2천7백여 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앞으로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데다,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대통령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동수.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은둔된 과거

문민정부의 첫번째 인권과제는 과거 청산이었다. "과거에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스스로 '문민정부'를 자처하며 등장한 현 정권의 인권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우리 나라의 현대사는 불처벌(impunity)로 점철된 역사였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다시 권력의 중심부에 등장하였고, 그들은 과거의 행적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제주 4·3 다큐멘터리 <잠들지 않는 함성-제주 4·3>에 대한 뒤늦은 입건이나 <레드 헌트>를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으로 서준식 씨를 구속시킨 사례는 아직도 이 나라에는 과거청산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현 정권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체계화된 인권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듯이 과거청산에 대해서도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손을 대지 못했다.

###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

그 첫 번째 반응은 의외로 일찍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5월 13일 광주도청 순회를 하면서 광주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선언했다. 사실 이 선언은 그 자체보다 과거청산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솔직한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검찰은 신군부세력에 대한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을 내렸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급기야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한 순간에 뒤집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창하게 되고, 95년 12월 5·18특별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제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부세력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사

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들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 과거청산 위한 노력 부진

이처럼 과거청산을 추진하는 세력은 5·18 특별법 제정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다. 96년 12월 17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5·18국민위원회를 계승하여 출범하였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해 왔다. 반면, 과거청산은



반대하는 세력은 다시 권력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과거청산에 어떠한 노력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집요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런 과거청산 반대세력은 매우 광범하게 우리 사회의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95년 신규명 씨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바람에 좌절되었다. 제2의 광주학살로 불리는 삼

청교육대도 사법부가 공소시효를 문제 삼아 기각하는 바람에 청산될 기회를 잃었다. 이로써 행정부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법부마저 과거청산에 대한 집요한 방해세력임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과거청산은 현 정권에서는 무망하게 되었다.

현 정권에서 과거청산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것이 있다면, 매우 제한된 일부 양심수에 대한 사면, 복권과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 정도였다. 그밖에 제주 4·3의 문제도, 전쟁 시기 저질러진 양민학살도, 고문피해의 문제, 의문사,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독재 시대에 만들어져서 군사독재 통치에 활용되었던 수많은 법과 제도도 그대로 은둔되고 있다.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필수과제 이로써 '역사 바로 세우기'란 구호가 무색하게 현 정권에서 과거청산은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과거청산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오늘과 미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자칫 과거를 끄집어내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이 과거청산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이로부터 교훈을 삼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우선은 철저한 진실의 규명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인권 가해자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까지 인권탄압을 통해 승승장구 출세하는 부정의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국민들의 원한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제 과거청산은 문민 제2기인 다음 정권으로 인계되었다. 과거청산이 차기 정권에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악행과 인권유린이 다시 21세기에도 재현될 지도 모른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4 일(목)

제 10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여성 장애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사회의 차별'이며, 이와 관련 여성장애인들의 '일할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벌인 '여성장애우 전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은 사회의 차별(69.5점) 가족 나들이 차별(65.9점) 주위의 편견(54.2점) 취업 단계에서의 차별(51.6점) 급여·인사차별(4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70% 이상이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들은 성교육과 직업교육, 고용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약 두달간(8. 12-10. 10) 18세 이상의 여성장애인 7백19명을 대상으로 벌여졌으며, 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린 '여성장애인 전국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최은하(전주 한일신학대학) 교수는 "여성장애인들의 상당수가 가족이나 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육과 고용에서의 소외와 차별이 이들에게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의 정도를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장애인 고용을 위한 책임부서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장애인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집안사정이 어려워'(34.1%), '주위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어서'(27.6%) 등으로 조사됐고, 특히 '가족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응답도 6.5%나 차지했다. 여성장애인들은 '정부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질

문에 대해 37.1%가 전혀없다고 답하는 등 63.5%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의 집」 설치 △여성장애인 고용부처의 신설 △가사와 임신·육아를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 실시 △여성장애인 정책 결정시 이들의 참여를 위한 여성장애인 할당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 "한국위기, 노조와 협의해야"

국제노조기구, IMF에 권고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전문위원회(OECD-TUAC, 사무총장 존 에반스)와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사무총장 빌 조든, ICFTU)은 최근 한국의 위기상황과 IMF 구제금융 협상과정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국제노조기구는 "안정화 정책이 초래할 심각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F와의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IMF는 한국경제 안정화 논의에 한국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이뤄지는 대량해고와 감원조치는 대대적인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한국정부가 올해 초 총파업을 촉발했던 것과 같은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국제노조기구는 "올바른 구제정책은 금융자본의 관점에서만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일반 근로대중의 관점에서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TUAC는 29개 OECD 회원국의 51개 노총을 회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기구이며, ICFTU는 1백37개국 노총 조직이 가입·구성한 조직이다.

##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는 이적표현물인가?

-문화예술 검열철폐를 위한 토론회-

▶ 때: 12월4일(목) 오후3-6시 ▶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주최: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선방 공동대책위(741-5364)

▶ 발제 및 토론: <레드 헌트> 축약 상영(10분 이내)

1. 제주 4·3 사건을 통해서 본 현대사 인식

·발제: 양한권(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범국민위원회 사무차장)

·토론: 양정심(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2.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들: 다큐 <레드 헌트>를 중심으로

·발제: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 교수)

·토론: 조성봉(<레드 헌트> 연출가), 김해준(제2회 안경영화제 집행위원)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발제: 김순태(방송대 법학 교수) ·토론: 조광희(변호사)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3-1>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

사회: <인권하루소식>에서는 1천호를 맞아 문민정부 인권정책을 평가했는데, 이는 김영삼 정권의 전반적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획은 전체적 평가를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활동가들이 현장을 뛰다니며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김기식: 김영삼 정부가 인권정책이란 걸 한 적이 있었나 싶다. 적극적인 인권정책이라기 보다는 인권문제와 연관된 정책적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백승현: 김영삼 대통령 또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있어 인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정책수립이나 진행과정에서 고려 요소는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은 개혁이라든지, 세계화라든지, 경제살리길 등 여러 모토를 내걸었는데, 그 모토 결정에 있어 인권은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 간혹 고문방지조약을 가입하거나, 국민인권기구 세우겠다는 약속들을 했지만 그 시기의 다른 모토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았다. 오로지 김영삼 정권의 건수올리기, 행정관료들의 건수올리기, 대외과시용에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김영삼 정권의 여러 행위가 '인권이 어떻게 관계가 맺어졌느냐'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인권정책이 무엇이나'는 것은 우리도 정의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쪽도 정의내릴 바가 없다. 생각해 본 바가 없다는 것이다.

남규선: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결국 인권은 국가나 정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과 국가의 관계가 '언제나 지배적'이라고 이미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는 없다. 가장 단적인 예가 외국인노동자 문제이다. 그것은 꼭 국가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우리 사회는 '관용'이 대단히 부족한 사회가 아닌가 싶다.

김영삼 정부에서 인권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 상'을 받았을 때였던 것 같다. 그때 인권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된 것이 정부가 인권이란 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토론자>

- 백승현 (민변 사무국장)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남규선 (민가협 총무)

<사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정리>

김수경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때: 11월26일 오후 6시30분-8시
- 곳: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관용이 부족한 사회’

사회: 인권정책은 없다는 부분에 공감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넘어가 인권상황의 특징은 어떻게 지적될 수 있을까.

백: 과거의 인권침해라는 것이 워낙 사실적으로 침해되기도 했지만, 정부가 언론과 재벌 등을 장악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는 한가지 경로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도 있었지만 언론과 재벌이 전면에 서서 정부와 더불어 때로는 정부를 앞장서서 자유권, 사회권을 제압하기 했다는 측면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번 이장희 교수 사건은 실제로 이미 사법부에 의해 반론 보도 요청까지 받아들여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전체를 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노동법 개정문제라든지 지금의 노동권 축소 등 경제난국의 문제에 대해 여당내에서도 최소한 합리적 논 의미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제 인권상황은 정부에 의해 직접적이고 단선적으로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적이고 간접적이고 또한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점에서 김영삼 정부하에서 인권상황이 표면적으로는 후퇴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경향은 결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인권침해 전면적으로 진행

김: 김영삼 정부의 기본정책은 차별 정책이다. 노동자라든가, 진보적 인사라든가 빈민이라든가 소외계층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적 정책이 일관되는 반면에 다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고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 약화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사람은 여전히 인권을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전 정치적 자유 정도는 다 해결된 것이 아니냐고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화 정책

사회: 인권상황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자유권 분야에 있어 인권상황은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는지 평가해 보자.

→ 3면으로 이어짐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3-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남: 이인모 선생을 복숭할 때 당시엔 통일정책 하에 보낸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다. 그런데 얼마전 어느 한 교수 말에 의하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즉흥적인 것이었다는 것이다. 5·18특별법이나 전·노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독불장군식이고 즉흥적인 경향은 문민정부하에서 많이 드러났다.

양심수 문제를 보면 문민정부 초기 그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93년 초반의 현상일 뿐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93년 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과거 30년간 군사체제에 의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사기구들, 고문기관들의 청산문제로 연결된다. 문민정부 들어 사전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이 보안기구들을 정리해 내지 못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전·노 정권과 차이가 없었다.

대신 박종철, 권인숙 사건 이후 당시 이뤄졌던 고문 등 가혹행위가 현재는 많이 줄었다. 더불어 지금도 안기부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등 가혹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현재저 줄어들었다. 얼마전 범민련 관계자 나창순 씨가 안기부에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어디에도 이를 관심있게 보거나 보도하거나 하 다못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정부당국에 항의를 한다거나, 노력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는 정부보다는 먼저 활동가들의 무관심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또한 공공연한 폭력이 아주 심각하게 행사되고 있음에도 이 역시 묵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96년

한총련 사태 당시 국민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을 보았다. 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은 매우 부족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의 노력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후평가와

대책마련 역시 없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임은 자명하다.

김: 최근에 나타난 양상을 보면서 정치적 반대자나 소외계층의 문제는 서구사회에서 얘기하는 소수자의 인권문제처럼 될 것 같다.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도 소수자의 문제로 인식되고 취급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문제,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문제 등은 소수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번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선거활동에 대한 자유를 요구했던 것을 끝까지 봉쇄했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 자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자>

- 백승현 (민변 사무국장)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남규선 (민가협 총무)

<사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참정권 침해 심각

사회: 일부 희석된 측면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실 권위주의가 청산된 것은 없다. 권위적 속성이나 본질적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과거와 같이 이슈화되지는 못한다. 간첩사건이 터진데도 예전같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김: 시민권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문제만으로 좁게 보아서는 안된다. 이제 공권력에 의한 억압만 아니라 사회적 억압, 특히 언론에 의한 사회적 억압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권력구조안에서 한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국제경쟁력 강화 앞에 노동권 후퇴 심각

사회: 사회권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다.

김: 사회권 범주에서 보면 일정하게 제도적 수준에서의 전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별다른 개선이 없었고 경향적으로 굉장히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친재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권의 핵심이 노동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노동권의 후퇴, 사회권의 후퇴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제도적 범주에서 보면, 95년 고용보험의 실시라든가 몇 가지 진전이 있지만 이는 사실 사회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서라기 보다는 이미 그 이전 성과의 축적으로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반영될 것 일 뿐, 김영삼 정부가 의지적으로 한 측면은 별로 없다.

김영삼 정부하에서 사회권 문제를 이해하려면 소위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와 '세계화 논리'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 또한 WTO 체제하에서 다국적 자본주의 하에 진행되는 국제질서적인 자본질서의 재편문제와 연관지어 파악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양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실업사태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사회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번 노동법 파동이다. 지금 사회권 부분에 있어 아주 심각한 후퇴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 내일자에 계속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5 일(금)

제 10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레드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 “4·3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있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구속 한달째를 맞는 4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인가?'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제3차 토론회가 열렸다.

영화인, 대학생,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레드헌트가 다른 제주 4·3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규정은 타당한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4·3은 미국의 학살극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관권(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사무차장) 씨는 "레드헌트의 이적성 시비는 결국 제주 4·3항쟁에 대한 검찰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경은 기본적으로 4·3을 폭동으로, 주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에 신고된 1만5천여 명의 희생자 가운데 80% 이상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도 주민들은 친일잔재의 청산과 통일정부의 수립, 미군정의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것이며, 4·3은 이에 대한 미국의 학살극"이라고 규정했다.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규정과 관련해 김순태(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

#### 서준식 대표 연락처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 치소 수감번호3444(152-081)

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레드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했다'고 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하급심 관례 등에 비춰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엔 이적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레드헌트는 4·3사건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학살당한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그들과 그 후손들이 입고 있는 '빨갱이 폭도'라는 누명을 벗기는 데 기여했다"며 "이는 죄를 이롭게 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민중을 이롭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레드헌트 이적성 시비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시키는 검찰의 행위야말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 투쟁, 저변 확산 관건 또한 조광희 변호사는 "이적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인류의 양심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언제나 자기만 옳다는 전제를 깔고있는 '이적성'이라는 잣대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 국가보안법은 법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현의 자유보장과 관련해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결코 정부를 설득해서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결국 세력확보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선 그 옹호자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진보적 개혁세력의 전유물도 아닐 뿐더러 진보적 개혁세력의 지지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는 없다"며 "보수중산층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범계층적인 연대, 뉴미디어의 활용, 교육제도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통일논의·학문연구 위축”

####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찬국등)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은 이장희 교수의 사전 구속영장 재청구 및 출국금지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검찰의 태도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통일논의와 학문연구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하며 "시대착오적인 공간몰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AI, 이장희 사건 우려 표시

국제앰네스티 에릭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2일 한국정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이장희 교수' 사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시했다.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한국 검찰이 이장희 교수 등을 구속한다면, 앰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며 "사회과학자집 주인 등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3-3>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채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

사회: 이제 김영삼정부 하에서 진행된 개혁조치등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을 살펴보자.

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차별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여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다는 것이다.

백: 앞으로 여성권, 아동권 부분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에는 조직적 저항이 없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색을 내면서 잃을 건 아무 것도 없다. 이것과 가정민주화나 여권신장과 연결성을 본다면 '이것만으로는 독립변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이해를 제한하면서 인권보장 측면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난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심사제라든지 금융실명제 등이 난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 김영삼 정권의 커다란 개혁정책의 하나로 93년말 안기부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물론 그것마저 2년이 무위로 돌아갔다.

변호인접견권은 노태우 정부 때보다 나아졌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한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된 측면이 강하다.

#### 일보전진 '변호인 접견권 보장'

백: 같은 생각이다. 아까 말했듯이 거시적 측면에서는 비판적이거나, 미시적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예를들어 최근 발표된 것 중 집행유예 석방자들이나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예정자에 한해 포승을 안뭍겠다는 것 등인데, 이것은 개개의 경우 인권정책의 진일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이라고 말하기에

는 부족하다. 남: 상급심에서 뒤집혀지긴 했지만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이나 시사저널 및 가루 사건 및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영장기각 등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소장판사들에 의해 일정정도 진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 김영삼 정부 초기와 중반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초기에 사회복지부에서 고용보험실시라든가 의료보험 통합등은 긍정적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등은 국민의 참정권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의 시행형태와 내용이 법정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수

#### <토론자>

백승헌(민변 사무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 <사회>

박래균(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자체로는 진전된 것이다.

백: 한계를 말하자면, 예컨대 주거권에 있어서 예전에도 법은 정비되지 않았고 대항해서 싸우면서 법률한계를 넘어 보장되어 나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이슈가 집중이 안되는 측면도 있지만 합법적인 것 자체가 봉쇄되어있는 면이 있다.

#### 사회단체 대응, 여전히 즉자적

사회: 인권상황이 갈수록 상충은 악화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의 영향력은 약화되어 가고 영향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의 대응 및 활동과 문제점을 평가를 해보자.

남: 문민정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이슈를 가진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고, 시민사회단체의 영향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변화 속에서 사회운동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야하는데 장기적 안목과 정책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 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즉자적인 대응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백: 김영삼정부는 소위 개혁정책을 집권초기의 쇠퇴분위기에 추진하려고 하려다 급격히 후퇴 반동의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이는 그 분위기를 제도화하거나 사회적 흐름으로 만드는 데 실패하거나 당초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회단체들은 '반걸음 앞장 선 노력', '견인의 노력'이 준비되어 있었는가하고 비판해 보아야 한다.

사회: 문제는 연대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데, 각계각층하면서 하나의 공통 사안들을 찾아 합의해내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남: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사회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세로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인권운동의 성과로는 '국제연대운동'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만해도 88, 89년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는데 그 이후에는 사그러들었다. 그러한 것은 국제연대운동 속에서 불을 지펴낸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국내 인권운동의 노력은 한국 인권현실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려내는 역할을 했다. 이 노력은 문민정부하에서 꾸준히 이어졌는데, 단지 이것이 '국내의 인권개선으로 이어지고 작은 긍정적 조치들을 이루어냈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 3면으로 이어짐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합법틀 속에 간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김: 단체의 활동이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그 활동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제는 변화된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전략, 방법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사업은 오히려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효과적이고 아주 힘있는 전형은 올해 초 노동법파동에 있어 범대위 같은 모습이었다. 정부나 기득권층의 차별화정책을 뚫고 소위 중산층과 기층민중이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했던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 성과들이 왜 가능했고 어떻게 발전했어야 했고,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어야 하는가라는 좀 발전된 사고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인권운동도 노령수당 소송을 낸 이기남 할아버지 사건 등처럼 하나의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고 '다른 단체는 왜 안 하나'고 물을 수는 없다. 그 이슈를 잡은 집단이 이를 계속 벌여나가고 거기에 일정한 계기적 요소가 있을 때 다른 단체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보장연대기구 결성 필요

사회: 차기정권의 인권정책은 어떠한가 논의해 보자.

남: 결국 정권교체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되면 적어도 자유권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백: 김영삼 정부 출범초기가 그랬듯이 새정부가 들어서면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부정적 조건이 오히려

많은 것이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총체적 경제파탄 상태인데, 경제파탄의 일차적 책임을 재벌 등 기득권층이 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공황이후에 파시즘이 들어섰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층을 희생양으로 하고, 기득권의 발언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추진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 세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 있는데, 경제살리기를 비롯해서 전·노사면 등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부정이다.

김: 사회권 부분은 누가되더라도 후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양태로 나타날것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실업상태를 피할 수 없다.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IMF에

- <토론자>
- 백승현 (민변 사무국장)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남규선 (민가협 총무)
- <사회>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서 분명히 건축제정을 요구할 텐데 결국은 사회권과 연결된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전경련에서 근로기준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사실 10년전부터 산업구조조정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껏 미뤄온 문제가 이제는 폭발적 형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사회보장연대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일 것이다.

남: 새정부 들어서도 과거청산이 당면과제가 될 텐데, 이와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50년 과거청산을 해 내지 못하고, 여전히 레드 콤플렉스와 분단이데올로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과거청산국민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것이 최소한 시도라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봄을 맞는 과제이다.

사회: 차기정권이 누가되던 간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초반에 전 정권과 같은 차별화전략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장한 부분도 상당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시민운동, 더 시민 속으로

백: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80년대 시기 큰 틀의 싸움에는 능했지만 전문화하거나 작은 권리 문제에 있어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90년대 들어 작은 권리 부분에 있어 맹아들이 생겨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사회전체 이슈화하는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 점에서 작은 권리, 전문성에 있어서는 권리를 찾아가는 반면에 큰 테두리에 있어서는 자기 주체(내재적 동의)를 형성해야 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우리는 대정부투쟁에는 익숙한데 이제 정부를 포섭해가는 과정뿐 아니라 사회를 포섭해가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시민운동이 더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남: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뤄낼 것인가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인적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인권 운동의 당면한 첫 과제이다.

<좌담을 끝으로 11월초부터 기획·연재된 '문민정부 인권정책 평가'를 마칩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6 일(토)

제 10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함세환·방양군 씨 사법처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목적으로한 보안관찰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준식(50) 씨가 구속기소된 외에 최근 방양군(43) 씨가 불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여기에 지난 9월 같은 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6) 씨까지 합치면 3명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거의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보안관찰대상 이유로 출국금지 방양군 씨는 89년 12월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96년 7월 만기출소했는데, 출근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안관찰법 대상자 신고를 거부해 왔다. 그는 지난해 8월 대만 앰네스티의 초청을 받아 출국하고자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받아 지금껏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광주지검(검사 김용철)은 지난 11월 25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주예정지 관할 광주 서부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보안관찰법 제27조(벌칙) 2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서준식을 읊아맨 법률 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대부분의 시국사범들에겐 일정한 형기를 마치고 동시에 또 하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유신·5공 시절엔 사회안전법이었고, 89년 이후엔 보안관찰법이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시킨 했지만, 여전히 개인생활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안관찰법 제18조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는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장소·내용 △여행에 관한 사항 △기타 관할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등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동시에 검찰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행동 및 환경 관찰 △보안관찰대상자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 금지 △신고사항 이행 지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서의 출입금지 등(동법 제19조)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법의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동시에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대상자의 전향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관찰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기소된 서준식 씨에겐 보안관찰법 제18조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 씨는 보안관찰법 폐지운동을 누구보다도 지속적으로 벌여온 사람이었다. 그는 91년 강기훈 유서사건과 관련, 최초의 보안관찰법 위반 구속자로 기록된 이래,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헌법소원 등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서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가 인권운동가의 뒷통수를 친 격이다.

<레드 헌트> 상영이유로 경찰조사 또한 11월15일 전주 서학동성당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한 것과 관련해 문규현 신부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데, 보안관찰대상자인 문 신부에게 보안관찰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 신부는 95년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1월27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 씨 등의 재판은 또다시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성명서> 제4회 서울단편영화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4회 서울단편영화제를 맞이하여 한국영화의 미래를 가늠하는 단편영화제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때서운 추위에 도 불구하고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영화제가 새로운 창작정신을 보장하는 창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작품자들이 영화에서 3회까지 받게되어 있는 엄연한 검열에서 벗어나 온전히 관객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제가 3회 이상 개최되었기 때문에 작품자들이 이곳에 한정하여 심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제 이후에 일반관객들에게 공개적인 상영을 할 때는 검열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더이상 상영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화법에서 등급심의조차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삭제에 의한 자기 검열로서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멀티미디어시대에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만큼, 영상문화와 단편영화의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 지원을 못해줄 망정 영화정책의 편협함으로 이런 식의 부조리한 현실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한, 한국영화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행보 대신 퇴보와 편법의 영화악법으로 단편영화를 비롯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권의 문화전반에 걸친 물이해가 낡은 영화정책의 문제점 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선을 얼마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추상적이고 애매한 기대심리에 불과하여도 대선 이후에 올바른 영화정책으로서 진정한 변화를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행정권에서 지켜지지 못한 심의의 폐지 내지는 민간 자율심의 등이 일종의 사탕발림식의 공약으로 그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한국영화진흥의 의지 등 영화정책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지난한 요구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 4·3사건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에 접근한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반포) 등으로 아직까지도 구속되어 있는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괄심의를 받고 공식상영했던 <레드헌트>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였기 때문에 구속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벗어나 대선을 앞둔 시기에 그동안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수사당국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부르짖었던 행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만큼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이 시대의 필요한 양심을 구속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수사당국의 <레드헌트> 이적성 시비를 규탄하며 부당한 탄압을 철회할 것과 서준식 집행위원장을 조속히 석방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양심적인 영화인들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제4회 서울단편영화제: 집행위원 김홍준, 정성일/ 심사위원: 김동원, 김소영, 왕가위, 정지우

씨네마떼끄상 심사위원: 문화학교 서울(서울), 씨네마떼끄 1/24, 영화로 세상보기(광주), 은고를 영화터(전주), 제7예술(대구), 씨네마떼끄 컬트(대전), 강릉 씨네마떼끄(강릉), 씨네 오딧세이(경주), 영화만세(제주), 씨네하우스(대구), 씨네마떼끄 시선(성남), 일팔구오(대전)

본선경쟁 진출작 출품작: 김지현, 김지훈, 김정구, 김태용, 민규동, 박유경, 박한준, 박은경, 송의현, 송일곤, 오점균, 이민정, 우범준, 윤종찬, 조은령, 정윤철, 최두호, 최진호, 황서용

세미나 발제 및 토론자: 김지석(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김태일(푸른영상) 변영주(기록영화제작소 '보임') 심현우(영화제작소 '청년') 이지영(노동자뉴스제작단) 최진아(독립영화협회의) 홍형숙(서울영상집단)

1997년 12월 5일

제4회 서울단편영화제의 폐막식에서

'97 인권주간 기념예배 및 인권상 시상식  
수상자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때: 12월 8일(월) 오후2시  
곳: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서준식 석방 및  
표현의 자유쟁취를 위한 명동농성

때: 12월 7일(일) ~10일(수)  
곳: 명동성당  
주최: 서준식무죄석방공동회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18조(신고사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19조(지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교도소 출소이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이른바 민기업 공동의장 겸 장기수감가족협의회 회장, 전 민선 인권위원장 및 유서대필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와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과연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2) 보안관찰처분은 본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보안관찰처분결정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권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이법 제18조 소정의 신고의무규정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법이 청구인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사상전향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보안관찰자의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2) 다음으로, 법 제2조, 제3조, 제4

조, 제5조,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보안관찰제도 일반에 대한 위헌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보안처분은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은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 법상의 보안관찰 처분 역시 그 본질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위 조항들이행의 집행 종료후 별도로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13조제1항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여부와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중략) 이 법은 법 제2조 소정의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에 그 입법목적에 있고(법 제1조), 현재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소위 남조선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첩등 공작원을 남파하여 적화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나, 또한 북한공산집단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략)

법 제12조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은자(“피보안관찰자”)는 인적·물적 환경,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사항 및 여행에 관한 사

항등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 신고의무외에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별다른 의무를 부과하거나, 신체의 자유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거의 가하지 아니하고 있다.(중략)

따라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조항들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에 비추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중략) 이러한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주장에 관하여 본다.

(중략) 위 조항들은 보안관찰제도의 정당한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된 뿐만 아니라,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997. 11. 27

재판관 김용준(재판장)·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종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주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10 일(수)

제 10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군 씨, “가혹행위 당해”

89년 6월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군(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방양군 씨는 89년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93년 11월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씨와 안종택 검사를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94년 6월 서울지검 박성득 검사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 결정에 대해 방 씨가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기각 사유로 △방 씨가 89년 8월 서울지검에서 변호인(박상천, 조승형, 강철선 변호사) 접견시, 안기부나 검찰에서 고문등 가

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질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방 씨가 안기부에서 야전 참대용 각목 및 손등으로 전신을 구타 당해 상처가 남아있으며 서울형사지법에 신체검증 및 감정의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이정빈(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조사기간동안 구타 등으로 신체손상을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접견시 검찰 등서

“보복 두려워 눈물만 흘렸을뿐”

반면 방양군 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다르다. 방 씨는 공소장에서 “89년 변호인들과의 접견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변호인접견시 안종택 검사가 바로 옆에 앉아 접견권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인이 “고문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안종택 검사가 얼른 “그런 질문은 곤란하다”고 변호사에게 항변하면서 방 씨의 대답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방 씨는 “고문받은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다시 수사실로 들어가 보복행위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눈물만 흘렸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은 조승형 변호사의 당시 사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도재형(덕수합동) 변호사들은 “(접견교통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설사 접견교통의 내용이 기록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제2형사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의 기재내용에만 의지한 채 선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신체감정결과도 왜곡

또한 변호인측은 “이정빈 교수의 신체감정결과는 오히려 원고의 부상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을 따름”이라며 제2형사부가 감정서 문언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박성득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제2형사부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자의적인 검찰권 또는 재판권의 행사로 이로 인해 원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식 및 공안탄압 규탄집회

- 때: 12월 10일 오후 6시30분
- 곳: 명동성당
- 내용: 서준식 선생 구속 항의 학문연구의 자유 탄압 규탄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규탄 등
- 특별공연: 노래를 찾는 사람들
- 사전행사: 레드헌트 상영(5시30분)

### 재정신청이란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고등법원의 심리절차를 통상 준기소절차라 한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수리한 재정신청서와 수사기록 등을 기초로 하여 구두변론없이 준기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소법 제262조 제1항)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있을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날을 세계는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바라보며 지난 50년간의 교훈을 되새기고 인권 보장을 새롭게 다짐하는 각종 실천프로그램이 착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사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보편적 인권을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폭정과 불의에 대한 투쟁이었다. 인권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다. 인권에 생명을 불어넣자.”

○...그러나, 인권의 날을 맞는 국내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지만 각 단체의 기념행사에서 지난 정권보다 나아진 인권 사안

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원)는 8일부터 14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8일 기념예배 및 '97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으며, '97 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인권상 수상자는 최근 구속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이며 그에게 적용된 법률은 인권단체가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온 국가보안법 등이었다. 또한 '97 인권선언문'에는 양심수 석방 등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임기란)는 2백회를 넘어서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일집회'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한다.

○...지난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간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등)는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식 및 공안탄압 규탄집회'를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명동성당 입구에서 가질 예정이며, 오후 5시30분부터 [레드헌트]를 공개상영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기념 성명을 통해 '98년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인권침해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면서 △고문 및 가혹행위 종식 △양심수 즉각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국민인권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국민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념식과 더불어 한해동안 세계평화와 인권신장 및 표현의 자유에 기여한 언론인을 선정해 오늘 7시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첫 수상자는 파키스탄 사형수의 억울한 사연을 취재하고, 아동성학대 등을 제작방송한 문화방송 PD 수첩 제작팀과 광주매일일보의 박현주, 임재식 기자이다.

○...한편, 법무부 인권과에서는 경제악화를 이유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기념행사를 철회하고 올해의 인권옹호 유공수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서 표창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권과에 따르면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하경철 변호사, 모란장에 고려대 심재우 교수, 동백장에 서울구치소 종교위원 노병설 씨 등 35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된다.

### '97 국정감사 자료집 드디어 나왔습니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통일위원회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 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 '97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주요 상임위원회의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97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자료집에 어떠한 목록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랑방 정보자료실로 연락주시시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 자료집의 분량은  
환경노동위(798쪽) 법제사법위(632쪽)  
내무위(785쪽) 교육·국방·통신과학기술위(77쪽) 보건복지위(243쪽) 외무통일위(159쪽)
- 문의 : 741-5363 (인권정보자료실)

# 만화상량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12 일(금)

제 10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재벌퇴진 · 토지공유제 확대

###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30대 재벌총수를 퇴진시키고 부정부패 제한 재벌총수의 재산을 환수하자” 국민승리21 대통령후보인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는 현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처방을 내놓았다.

권 후보는 11일 명동성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환수한 재벌총수의 재산으로 부실채권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도산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재벌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제도의 폐지 △상속·증여세의 강화 △노조의 경영 참여 △사외이사 사외감사제 도입 △소액주주제

의 강화를 역설했다.

또한 권 후보는 땅투기·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공유제를 확대 실시하고,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결행했다.

권 후보는 “IMF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제2의 을사조약’을 막아 내지 못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삭발을 결행한다”며 “이번 삭발투쟁은 보수정치권과 재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굳게 뭉쳐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자는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으로 △기업의 인수합병·구조조정시 정리해고 규 제완화 방침 철회 △근로자과거법 도입 계획 철회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자산인수방식의 탈법적 정리해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리해고 방지 등을 제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부조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등 보수3당의 고용대책과 관련해 권 후보는 “보수3당 후보들은 대선 직후 국회를 소집해 기업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상에 정리해고조항을 삽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오히려 은행대출금 상환유예를 주장하고 금융실명제 유보 또는 폐지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오로지 재벌편들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 장대협, 김호일의원 사과 요구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제)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이회창 호부 지지연설도중 있었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장대협은 김 의원이 13일까지 공식사과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이사진 전면 개편 요구” 에바다대책위 무기한 텐트농성

에바다 비리제단에 맞선 농아원생들의 농성이 10일 현재 3백76일째를 맞는 가운데, 에바다 비리제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에바다대책위)는 평택역 광장에서 무기한 텐트농성에 돌입했다. 텐트농성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되며, 농아학부모 및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학생, 지역 대책위에서 참가하고 있다.

이번 농성에서 에바다대책위의 요구사항은 단 한가지다. 국정감사에서 김선기 평택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평택시장은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 국감의 증인신문에서 평택시장은 11월말까지 정상화가 안 되면 관선이사장 파견과 현 이사진 전원승인 취소 후 전문적 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이사진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11월27일자 참조>

##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김동필 (참언론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시삽)

통신공간의 언론자유가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열과 폭력으로 인권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 지검 공안부는 이미 지난 10월, 11월에 걸쳐 네티즌 4명 구속 및 모두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공안기관은 게시판에 올린 약 1만여 건의 글에 대해 검열을 벌였으며, 통신인 중 50여 명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최근에도 필자를 비롯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린 수많은 통신인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벌이는 등 사상 유례 없는 ‘통신인론 탄압’을 벌이고 있다.

### 국민참정권 침해

통신인구가 3백만 명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통신언론자유’는 한층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벌이는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합선거법’(선거법)의 독소 조항으로 인해 통신인론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어떠한 정치관련 발언 및 표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것이 ‘과열선거운동방지’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독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선거사범구속자 4명 모두 통신인

각 통신회사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의 정치 관련 글들이 올려지고 있지만, 많은 통신인들은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글을 게재함에 있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처럼 국민의 공복자를 선택함에 있어 최소한의 비판적인 목소리마저도 현행 선거법의 독소 조항을 들어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온갖 유언비어와 인신비방의 근원지인 정치권은 ‘면죄부’라도 받은 듯 인신비방 및 흑색선전을 자행하고 있지만, 정작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4명은 모두 통신인이라는 사실이 많은 통신

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 통신회사도 공동책임

통신인들이 정치관련 글을 게재함에 있어 모든 사법적인 책임을 통신인들에게만 묻는다면 이는 통신회사의 ‘이용자 보호’라는 단어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관련 글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글을 게재한 당사자에게 있지만, 통신회사는 현재까지 자체 검열을 통해 이용자의 글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동등한 ‘삭제 권한’이 있다. 따라서 민·형사의 일정부분 책임을 통신회사도 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검열철폐’가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논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행 ‘선거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검열철폐는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PC통신 공간에 대한 검열 및 탄압은 수많은 네티즌들을 판단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꼴이며 전세계인의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치관련 글로 인해 인신구속 및 탄압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양심수’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쌍방향 언론인 자유로운 통신공간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감춰라 배나라’ 할 성격이 아닌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민의 입을 일방적 언론을 통해서 막아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현재 통신이용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비판 및 검증하는 쌍방향 언론인 통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정치인들과 국민의 공복자는 더더욱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 오만한 전자민주주의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아직은 멀지만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교환을 막고 있는 ‘통신검열’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선거법’ 독소 조항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

부분 통신인들이 국가기관의 검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당국은 명심하여 ‘정보통신검열’을 하루빨리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잡습니다.

12월11일자 1면 박지동 교수 관련기사중 박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아직 청구되지 않았습니니다.

「박지동 교수 석방과 학문의 자유수호를 위한 광주전남비상대책위」는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로 문제삼은 박 교수의 저서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에 대해 리영희·최장집 교수에게 감정서를 의뢰할 예정이며, 감정서가 제출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행사와 동정

□ 정세토론회: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IMF구제금융, 한국경제, 노동운동-

- 때: 14일(일) 오후 1-6시
- 곳: 농업기술진흥관(4호선 이촌역)
- 발제: 현시기 회환, 금융위기의 배경과 의미(채만수)/IMF 구제금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김상조)/현정세와 노동운동의 진로(박성인)
- 주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지식인연대(준)(문의:778-4001)

■ 전국연합 '98년 수첩 판매  
전국연합 수첩에는 한청협·전농·전교조·민주노총 등 민주단체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록하고 있다. 낱권 판매는 2천원이며, 대량구입은 별도로 주문하면 된다. (문의: 921-4090)

■ 연극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참여연대 열린사회를 위한 무대는 지난해 12월 김지숙 씨의 모노드라마 <로젤>을 공연한데 이어 두번째 연극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원작 홍세화, 연출 임진택, 극단 길라잡이)를 무대에 올린다. 재벌망명객 홍세화 씨의 베스트셀러 수필을 연극으로 재구성한 이 작품은 12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해화동 아리랑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문의: 723-425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13 일(토)

제 10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경찰과 시민이 서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최선정(인천 초등학교·27) 교사는 "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채유석(인천시경 보안수사대·36) 경사는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사건을 조작한 양 매도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배자 검거 명분, 차량 검문 최 교사는 30일 저녁 7시30분경 자신의 차량(푸른색 아벨라)을 타고 인천 교대에서 나와 진행하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당시 동승하고 있던 남 아무개(공익요원 근무) 씨에 따르면, 골목길을 빠져나와 교대앞 사거리 신호에 걸렸을 때, 경찰이 다가와 수배 중인 학생을 찾는다며 차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교사는 신분을 밝힐 것과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10여 분 후 경찰은 임진식(인천교대생) 씨의 이름이 적힌 긴급체포영장을 가져왔고, 이에 최 교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항의했다. 이후 정복경찰이

타나 트렁크를 열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한 뒤,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인근 계양파출소로 갔다.

검문 경찰, "뺑소니 당했다" 주장 사건은 이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채 유석 상하의를 입은 사람(채 경사)이 "검문을 하려는데 나를 치고 뺑소니를 쳤다"고 진술하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끌어왔고, 이로 인해 최 교사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채 경사는 인천 \*신경외과에서 척추골절에 의한 12주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최 교사는 12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최 교사는 "경찰이 최 교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불심검문의 무리함을 덮어 버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 "피해자인데 매도당하고 있다" 반면, 채 경사는 "당시 나흘간 잠복 근무를 하던 끝에 최 씨의 차량에 수배자가 탑승한 사실을 발견했고, 골목길에서 최 씨의 차량이 잠시 정지하게 됐을 때, 다가와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 씨가 이를 무시한 채 전진해 버렸고, 그 순간 백미러에 부딪히며 쓰러졌다"고 말했다. 채 경사는 "나를 치고 달아난 뒤, 어딘가에서 수배자를 내려주었을 것"이라며 "최 씨 등의 주장은 운동권 출신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진단서, 교통사고와 무관 드러나 그러나, 최 교사가 구속된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

으로 접어들고 있다. 채 경사가 제출한 전치12주 진단서가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인천 \*병원측은 지난 5일 부천 세종병원에서 실시된 R.L.bone scan 검사 결과, 채 씨의 척추골절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 \*병원측은 당초 채 씨에게 끌어왔던 12주 진단서를 전치3주 진단서(팔 부위 부상)로 바꿔 재발급했다.

인천지법 구속적부심, 최 교사 석방 12일 인천지법 제3형사부(이종립 판사)는 최 교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최 교사를 석방했다. 반면 채 경사는 척추통증을 호소하며 인천 중앙길병원에 입원중이다. 관한 주장 가운데 어느쪽이 진실로 판명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결혼퇴직제 철폐요구

여성노동자협, 청와대 회신 요청

12일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이사장 정지환)는 청와대의 기혼여성 결혼퇴직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공개요구서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지난 6일 문화일보를 통해 청와대가 기혼 여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정부는 평등한 여성고용정책 시행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한다"며 "관행적인 결혼퇴직제의 철폐와 함께 기혼여성들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서준식 선생에게 편지를**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구치소 수감번호 3444(152-081)  
·면회를 원하는 분은 사랑방으로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741-5363)

##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12월 4일 연례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언론서비스(IPS)의 보도를 통해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미국과 여타 강대국은 경제적 이득과 여타의 이권 추구로 97년에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외면했다." 연례보고서는 특히 빌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부를 지목하여 심각한 인권침해에는 관용적이면서 국제적 인권제도의 강화를 방해하는 데는 '오만'하게 굴었다고 지적했다. 65개국의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는 HRW보고서는 미국의 오만함의 증거로서, 제안된 국제형사법정(ICC)을 약화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대인지뢰금지협약에도 반대했다는 점을 들었다.

HRW는 1백여 개국이 넘는 국가가 지뢰금지협약에 서명하는 결과를 낳았고, 강대국에 기대지 않고도 국제인권 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와 중소 규모 국가들간의 새로운 협력에 주목했다. "민간단체와 중소 규모 국가들 간의 협력이 현재 워싱턴에서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거대 권력의 오만함을 능가할 수 있는 날까지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야만 한다." 아마도 이것은 클린턴의 인권정책에 대한 HRW의 가장 강력한 공격일 것이다.

오만한 클린턴 정부  
보고서는 또한 인권은 보편적이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와 중앙아프리카에서 97년 내내 끊이지 않았던 인권에 대한 공격을 부각시켰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일부 지도자들의 제기는 개인의 자유에 앞서 사회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런 주장은 지난 7월 모하메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이 세계인권선언의 공식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7월 이후 동남아시아를 휩쓴

경제·환경적 위기는 앞서 제기된 주장을 무색케 했다. 그 가운데 동남아시아는 정부 책임성의 부재에 노출되었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정부 집행력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서구의 지원자들에게 "군인 황태자"로 불려온 중앙아프리카의 새로운 지도자들도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적 해결"이라는 구호 아래 "아시아적 가치"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했다. 이것은 단지 "일당 국가의 재순환되는 변형판"일 뿐이다.

전쟁, 혼란과 집단학살에서 회복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개인의 자유에 앞서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97년, 이디오피아와 우간다의 결사의 자유 억압에서부터 콩고와 르완다의 수천만 명의 민간인 학살에 이르기까지 '억압'은 정당화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비판하지 않는 서구의 "도덕적 근시안"을 비난하였다.

"중앙아프리카에서의 엄청난 인권침해에 관대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특히 눈에 띈다"고 언급하면서, 보고서는 "남아프리카의 상당수가 인권에 대한 굳은 약속을 막 보여준 시점에서 중앙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묵인은 특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말라위, 잠비아에서의 강력한 인권 문화의 증진을 격찬했다.

제3세계 인권침해 묵인  
미국에 대해 특히 냉혹한 HRW 보고서는 워싱턴이 인권문제에 대해 "선택적인 관여"를 하고 국제인권제도 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이미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성문화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인권인데도 이를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과 여타 부유한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과의 교환을 위해 중국의 인권개선에 대해 "악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

아프리카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대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며 미국을 꼽았고, 콩고에서 저질러진 잔학행위에 대해 "침묵"한 대부분의 유럽 지도자들을 힐난했다.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반면에, "자국 군대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위험도 피하고자 하는 펜타곤(미 국방부)의 황포적인 선점"은 보스니아에서 전범의 체포를 가로막았고, 싸움으로 피해해진 이나라의 장기적 평화의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NGO와 정부 협력이 지도력 발휘 그러나, 세계 인권에 대한 조사가 전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체결로 인해, 민간단체와 중소 규모 정부 간의 "새로운 협력"은 "주류세력의 참여가 부족한 시기에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강력한 옹호를 주장함으로써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97 국정감사 자료집 드디어 나왔습니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 통일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 97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주요 상임위원회의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자료집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랑방 정보자료실로 연락주시시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 자료집의 분량은  
환경노동위(798쪽) 법제사법위(632쪽) 내무위(735쪽) 교육·국방·통신과학기술위(77쪽) 보건복지위(243쪽) 외무통일위(159쪽) 문의 : 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지난 2일부터 일본원정투쟁에 나섰던 한국후꼬꾸 노동자 대표단이 13일 동경시내 동경탑을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다 일본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윤동만 후꼬꾸 노조위원장과 한광수 사무장, 이시정 금속연맹경기남부지부 사무국장 등 원정투쟁단 3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동경탑에 올라가 "일본후꼬꾸(사장 가와모토)의 성실한 사태해결, 한국후꼬꾸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벌였다. 이시정 사무국장은 1시간 뒤 탑에서 내려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다 연행됐으며, 윤 위원장과 한 사무장도 오후 9시경 연행됐다.

이들은 15일 현재 일본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비자 만기일인 16일 전원 강제출국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후꼬꾸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원정단은 원정 나흘째인 지난 5일 아오게 시에 위치한 일본 후꼬꾸 공장을 방문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일본후꼬꾸측은 "한국후꼬꾸에는 용역장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섭은 한국후꼬꾸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면담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정투쟁단은 회사 정문앞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규탄 집회를 갖고 돌아오는 데 그쳤다. 또 이에 앞서 4일 일본노동성을 방문해 한국후꼬꾸 노조탄압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노동

성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일본기업의 노사문제는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명동성당 농성 1백50여 일째 한편, 국내에 남아 있는 한국후꼬꾸 노동자들도 지난 12일 명동성당 농성 1백50일째를 맞아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일본악질기업 일본후꼬꾸 규탄대회'를 갖는 등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또 13일 일본원정단이 연행된 소식을 듣고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했다가 참석자 13명이 전원 연행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날 후꼬꾸 농성단이 연행되자 전례투 소속 노동자와 대학생, 민중가수 최도는 씨 등 24명이 동대문 경찰서로 찾아갔으나 이들 역시 전원 연행돼, 즉시 또는 불구속 입건 등의 조치를 받고 15일 모두 석방됐다.

### .....주요 공판 안내

- ▶ 16일(화) 김영복, 박기동(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박종철, 임의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장원주, 오병기(국보법)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박진호(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김민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권오현(국보법, 한총련 및 선거사건)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유덕상의5(업무방해) 오후2시 3단독 423호 속행
- ▶ 17일(수) 김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이영무(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재개
- ▶ 18일(목) 이종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권혁진(집시법,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속행 안해숙(국보법)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선고
- ▶ 19일(금) 강순정(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속행 양경숙(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김해식(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최예경(국보법, 고대 청년사건)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이천재, 민경우, 이종린, 나장순(국보법, 범민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서울고법 형사국

## 경찰, 문정현 신부 출석요구 <레드 헌트> 상영 이유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상영과 관련,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인하대 부총학생회장 등이 지난 4일 경찰조사를 받은 데 이어 11일자로 문정현(군산 오통동성당) 신부 또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군산경찰서 보안2계는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1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에 문정현 신부는 출석을 거부했다. 문 신부는 지난 11월20일 오통동성당에서 표현의 자유보장과 검열제도 철폐, 서준식 씨 무죄석방 등을 요구하며, <레드 헌트>를 상영한 바 있다.

## "열사 명예회복 대선공약으로" 유가협, 국민회의 약속받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 회원 11명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대선공약화를 촉구하며, 지난 13일 한나라당 등 3당 당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27일, 12월 2일에 이어 세번째이다. 유가협측에 따르면, 국민회의 김충조 사무총장으로부터 대선공약화 요구를 받아냈을 뿐 한나라당에서는 내뿜김까지 당했다.

##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천리안의 한총련 ID(SCHCY)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폐 △안기부와 검찰의 통신검열 중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 '97 국정감사 자료집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문의 : 741-5363

## 주간/인/권/호/름 (97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 ◆ 8일(월) 내무부, 일선 자치단체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공문 보내 98년 예산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지원지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문병란 교수등 1백68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 제출명령 신청 받아들여/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보고, 97년 1월말 현재 파악된 난민은 총 2천2백72만명이며, 이중 1천3백여만명은 타국 전원
- ◆ 9일(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삼미종합특수강 노동자 2백1명이 창원종합특수강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과 관련해 '인수시 노동자 전원고용' 결론/경실련, 정부가 일부 관변단체 등에 추가로 예산지원한 데 대해 즉각 철회 촉구/IL0,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지구은난화 방지논의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협약 교도 전체회의, 선진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포함된 최종안 마련
- ◆ 10일(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NCC 인권상 수상/삼성, 기아, 한화에 이어 선경, 한진등 주요 그룹 임금삭감·동결등 감광경영 방침/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에바다 비리재단 퇴직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등, 평택역 광장에서 텐트농성 돌입/박지동교수 공대위, 학문의 자유 철폐·공안물이 비판하며 박 교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서준식 석방공대위,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식 및 공안탄압 규탄집회 명동성당에서 가저
- ◆ 11일(목) 권영길 국민승리21 후보, 명동성당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극복과 일자리지키기 비상기자회견' 연 뒤 사발식 가저/남양주시 행정사무감사자료, 올해 산림훼손 신청건수 1백92건으로 지난해 52% 증가/정부, 현재 21%인 장애아 교육수혜율을 오는 2002년까지 1백%로 올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 ◆ 14일(일) 서울지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민주노동, 종로공원서 조합원 2천여 명 참가한 가운데 집회 열어 △IMF와 재협상 △고용안정특별법 즉각 제정 등 요구/3당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이회창후보 도입에 긍정적 입장 보여/정부, 기업들이 인수합병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

인권  
시평

# 영화 <하이논>과 매카시즘

장 호 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달 KBS 명화극장은 할리우드 서부극의 고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하이논>을 방영했다. 1952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하이논>은 그해 아카데미 상 4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이었다. 개리 쿠퍼가 분한 정의의 보안관이 4명의 악당무리와 결투를 벌여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하이논>은 존 웨인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서부 영화처럼 폭력이 난무하다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상투적 서부영화가 아니다. <하이논>은 서부극의 형식을 빌어 매카시즘에 포로가 된 1950년대 미국사회를 고발한 "인권영화"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의 냉전체제가 굳어지자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좌익 숙청 작업을 벌였다. 한반도에서 분단체제가 굳어질 무렵 미국내에도 반공열풍이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반공화외리가 불어닥친 곳은 할리우드였다. 할리우드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우익정치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목표였다. 1930년대 이후 할리우드에서는 자본주의에 병든 미국사회를 비판하는 많은 영화가 제작되었다.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할리우드는 우익세력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반공의지를 미국인들에게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8년 할리우드에서 연방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20여 명의 배우, 작가, 감독 등이 소환되었다. 이중 10명의 영화인들은 공산당원을 색출한다는 핑계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것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에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했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할리우드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첫번째 대결장이었던 할리우드에서 기세를 올린 매카시즘은 종교계,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미국사회 전체를 휩쓸게 되었다. 결국 1950년대 초 미국사회는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한 동도의 왕국이 되고 말았다.

한편 한국전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공산주의 위협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카시즘의 병폐를 감지한 미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은 매카시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조차 "빨갱이"로 의심받는 분위기였다. 1951년에 제작된 <하이논>은 서부영화의 형식을 빌어 매카시즘에 대응하는 미국인들의 태도를 통렬히 고발했다. <하이논>의 기동줄거리는 전형적인 서부극에서 처



를 보안관과 악당의 대결이 아니라 보안관과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이다. 보안관을 돕기보다는 그를 몰아내고 악당과 타협하려는 영화속의 마을사람들은 매카시즘 공포에 사로잡힌 미국인들의 자화상이었다.

<하이논>은 보안관 케인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함께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마을을 떠나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과거 체포했던 악당 프랭크 밀러가 사면되어 다시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라며 보안관에게 마을을 떠날 것을 재촉한다. 그러나 보안관은 마을에 남아 악당들과 대결하기로 결정한다. 보안관 케인은 매카시즘으로부터 인권을 지키려는 양심적 인권운동세력을 상징한다.

보안관은 마을사람들이 단결한다면 굳이 총격전을 벌이지 않고서 악당들

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려 한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싸우겠다는 사람들은 없다. 보안관은 교회를 찾아가지만 목사와 신도 모두 의견만 무성할 뿐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마을의 치안관사마저 밀러일당은 "잔인하고 광폭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집을 쫓겨 마을을 떠난다. 법치주의와 기본권보호를 외쳐왔던 미국의 법조계마저 매카시즘 선풍이 불어닥치자 인권과 정의를 외면했음을 풍자한 것이다. 한편 공산주의자를 상징하는 마을의 창녀는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간다.

결국 보안관은 혼자 악당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보안관의 총습때 때문이 아니라 악당들의 무모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남편을 도운 아내의 덕택이었다. <하이논>은 보안관의 승리로 끝나지만 해피엔딩은 아니다. 결투가 끝나고 케인은 보안관 배지를 땅에 버리고 아내와 함께 씩씩한 분노를 삭이며 마을을 떠난다. 미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이나 양심 모두 매카시즘 선풍 앞에선 무력하게 휩쓸려 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표현이다.

영화 <하이논>에서 보안관과 악당들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매카시즘에 휩쓸린 미국인들의 반응, 바로 그것이다. 누구도 악당에 대해 정면 대결을 통해 싸우려고 들지 않는다. 법의 집행자인 치안관사도, 도덕적 지주인 교회 목사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할 뿐이다.

영화 <하이논>은 악의 근원은 악당들에서 비롯된다고 보다는 악과 대결을 거부하는 비굴한 마을 주민들에 있음을 보여준다. 매카시즘의 병폐는 매카시즘을 선동한 극우정치인들 보다는 매카시즘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한 미국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 <하이논>에 등장한 마을은 1950년대 미국사회인 동시에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17 일(수)  
제 10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3당 인권공약 빈곤

###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으로부터 꼭 두달 전인 10월16일 국제엠네스티는 한국 내 모든 대선후 보들에게 인권보호의 신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 AI, 인권정책 공약화 요구

당시 엠네스티는 대선후보들에게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심 △인권침해 진실규명, 국민인권기구 설립 등 인권 보호장치 증진 △고문종식, 구금장소의 환경개선, 전향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안기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사형제도 폐지 등 인권 관련 법률 개정 △ILO 협약 87, 98조 비준 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 각당 선거공약 인권정책 부족

그러나 인권증진을 위한 각 당의 선거공약은 여러모로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한나라당은 대서면 단행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공안사법, 파렴치범 등 국법질서와 국민정서상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민가협등 인권단체에서 요구하는 양심수 석방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여성의 산전후 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12주로 확대하며, "전국민의 사회보협회를 통해 모든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다른 당과 차별적인 내용은 아니다.

18일자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생략합니다.

## 만화 사랑방



△재정신체제도 전면 확대 △법관·검사 정원 및 변호사 수의 대폭증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미 김영삼 정부에서 약속한 바 있는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도 공약화되었다.

노동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청소년 교육 측면에서는 91년 정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조약 수준으로 청소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 인권단체 움직임 부족

3당의 인권정책 공약이 빈곤하다는 평가와 함께 인권정책 공약화를 위한 인권단체들의 노력 또한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면서 차기정권에 대한 인권과제와 정책을 제기하는 작업이 마땅히 진행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서울지방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의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이가 살피건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뿐 아니라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아직 피의자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이른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에서 위 접견교통권을 위와 달리 해석할 법령상

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와같은 접견교통권을 피고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가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6. 3.자 53보18 결정 참조). 제1항에서 본 피신청인 대리인의 진술과 같이 안기부장의 명령에 따라 위 김홍식이 안기부 청사내의 감찰부서에서 그간의 위 김홍식의 행위가 정계 또는 형사처벌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면 위 김홍식을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에 관한 이른바 피내사자임이 분명하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위 김홍식의 변호인인 신청인이 안기부 담당직원에게 위 김홍식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접견불허의 통보를 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함을 지닐 수 있다할 것이다.  
신청인의 위 접견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이유있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7  
판사 오천석

###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벌건구속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6개월)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벌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공소사실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 심리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우 씨는 19일이 구속만기일이며, 이천재·이종린 씨는 오는 29일, 나창순 씨는 1월 2일이 구속만기일이다. 민 씨 등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 모은 성금을 일본 조총련으로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멕시코 한영기업 노동자 투쟁 승리 참여연대, 항의운동 벌여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소장 채수일)는 19일 민주노조설립, 노조간부 해고 등과 관련해 싸워온 멕시코 한영기업의 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했다고 알려졌다.  
멕시코 자유무역지대인 티후아나에 위치한 한영기업(현대정공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그 지역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선거를 통해 민주노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한영기업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12명의 노조간부를 해고했고, 노조를 지지하는 노동자들도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데서 사태는 비롯됐다.  
이에 따라 11월20일부터 20여일간 민주노조 신입간부 3명이 단식농성을 벌였고, 결국 16일 한영 노동자들과 한영 경영진, 바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조를 인정하고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키며, 해고자들에게 해고된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불한다"고 합의했다.  
한영기업의 노동탄압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노동인권단체들이 국제적 항의운동을 벌였으며, 특히 미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참여연대가 중심이 돼 관련 정부기관장과 기업측에 항의공문을 보냈으며, 현대정공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12월 23 일(화)  
제 10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지난 13일 일본 동경탐에서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던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이 열흘째 일본 경찰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고 있다(본지 12월 16일자 참조).  
일본 경시청은 당시 시위를 벌인 운동단(한국후꼬꾸 노조위원장), 한광수(노조 사무장), 이시정(금속연맹 경기 남부지부 사무국장) 씨를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해 검찰로 송치했으며, 구속된 노동자들은 동경 시내 세 곳의 경찰서에 나눠 구금된 상황이다.  
아사히·마이니치·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들도 14일 "한국의 일본계 기업 노동자들이 해고철회 등을 주장하며 동경탐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며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했다.  
후꼬꾸 노동자들이 구속되자, 현재 일본에서는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본내 노동조합들은 전통일노조, 전국의료노조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속자들을 위해 일본인 변호인을 선임하고 모금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 시민당 소속 하마다 겐이찌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각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노조장은 일본 검찰이 허락하지 않아 구속자들을 면회하지는 못했다.  
한국정부 움직임 미온적  
이같은 한·일 노동계의 움직임에 비해 한국정부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인 상태다. 주일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본 검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다만 구속자들이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동경탐 시위가 벌어지자 한국후꼬꾸의 권순목 사장이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노동자들과 대화하겠다"는 팩스전문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노동자들과의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구속된 세 사람에게겐 조만간 20만엔 가량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노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사면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진정한 참회와 국민에 대한 사죄를 선행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징금의 자진납부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게 5·6공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와 그들에 의해 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과 더불어, 차제에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전노사면 규탄과 양심수 석방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회복 촉구대회

- 때: 오늘 낮 12시
- 곳: 광화문빌딩 앞(동아일보 사옥 맞은 편)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참석: 전국연합 회원, 유가협·민가협 어머님 등 5백여 명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때: 오늘 오후 7시30분
- 곳: 장충체육관
- 주최: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송년의 밤을 갖습니다.

때: 26일(금) 오후 6시30분부터  
곳: 성균관대 앞 태평소(742-7928)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인권하루소식>은 17일부터 23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작업을 벌여 97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문항) 중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편집자주>

#### 설문 응답자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42명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	54명
일반독자(학자, 종교인 포함)	56명
변호사	14명
언론종사자	18명

#### 새벽 날치기 잠재운 총파업 저항

87년 이후 최대의 국민저항

연초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투쟁'은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97년 최대의 인권뉴스다.

연인원 3백60만 명의 파업 돌입. 파업기간 총 24일. 종교인·교수 등 지식인 계층 및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연일 계속된 시위 등. 이번 총파업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의 국민저항으로 기록된다.

총파업의 직접적 계기는 노동법·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였다. 96년 12월 26일 새벽 미명을 틈타 기습적으로 진행된 날치기는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으며, 정리해고의 합법화에 따른 생존권 위협은 1천2백만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안기부법의 개정 역시 지식인 계층의 광범위한 저항을 초래한 원인이었다. 무엇보다도 총파업투쟁을 가능케 한 것은 80년대 이후 끊임없이 성장해온 노동운동의 잠재력이었다. 그리고, 노동운동계의 숙원으로서 95년 건설된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민적 저항의 실질적 지도 역할을 수행했다.

#### 설문대상별 10대 뉴스 반응도

- ① 노동법 날치기에 맞선 총파업투쟁 (90.1%)
- ②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구속 (77.4%)
- ③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68.3%)
- ④ 전자주민카드 관련법 국회 통과 (61.9%)
- ⑤ 북한동포돕기운동 범국민적 확산 (55.6%)
- ⑥ 경제파탄, 봉급생활자 생존권 위기 (40.8%)
- ⑦ 대법원, 전·노 유죄 확정 (39.4%)
- ⑧ 영장실질심사제 열 달만에 개악 (33.0%)
- ⑨ 헌법재판소, 동성동본 결혼금지 위헌 결정 (27.4%)
- ⑩ 현재 보안관할법 합헌 결정 (27.4%)

#### 12·12, 5·18사건 대법원 유죄확정

8개월만에 대통령 특별 사면 면죄부

지난 4월 17일,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며 유죄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두환·노태우 등이 학살과 내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억압과 분노의 세월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따른 5·18 특별법 제정, 재수사와 기소라는 우여곡절 끝에 결론이었다. 그러나, '유죄'라는 사법적 결론은 8개월만에 '사면'이라는 정치적 해결의 뒤통수를 맞게 되었다. 특별사면과 석방이라는 무대에 등장한 전·노는 참으로 담당하게 국민의 집중된 시선을 받아냈다.

전·노 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 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쿠데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정정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등을 포함한 완전한 과거청산을 촉구해왔다. 또한 전·노 사면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누우침 없이 담당하게 돌아온 그들을 보며 어떤 국민적 대통합을 이룰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전국을 덮힌 북한동포돕기 물결

정부의 외면과 방해로 얼룩

굶주림에 쉰 북한 어린이의 눈망울이 전국민의 눈시울을 붉히게 한 한해였다. 95년과 96년 연이은 대규모 흉수 예다 올해의 극심한 가뭄까지 합쳐 고갈된 북한의 굶주림은 실로 처참한 것이었다.

여기에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실천하려는 손길이 모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반쪽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 없는 그 당연한 노력은 실로 분단 50년만에 벌어진 민족 화해 운동이자 통일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이 물결 속에서 정부는 만발치에 있었고, 직선은 커녕 쪽박을 깬다는 지탄을 면치 못하였다. 즉각적인 북한 식량지원 촉구에 미지근한 태도를 취했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관계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돕기 문화공연을 검찰력으로 막은 일이나 민간의 모금활동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황정엽 씨 망명'의 대대적 선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 '베트남 지뢰밭 실종 북한 식량 난민'에 대한 외면은 민간의 동포돕기 노력을 무색케 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 남성혈통주의 벗어난 평등한 결혼

현재, 동성동본 결혼금지 위헌 결정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여만 명의 부부가 '혼인 외'의 굴레를 벗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재판은 95년 5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부부들이 낸 불복신청과 위헌법률 제청신청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2년여 동안 유럽의 격렬한 반발과 우생학적인 문제제기 등 갖가지 주장이 빚발치듯 오갔다.

이 속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재판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혼인의 범위를 남계 혈족에만 한정해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무엇보다도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논리를 풀어간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동성동본 결혼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할 과제를 남겼다.

#### 절정에 이른 한총련 죽이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탈퇴와 해체 선언

지난해 연세대 사태에 이어 발생한 '프라치 용의자 치사 사건'은 당국의 한총련 죽이기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당국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미달퇴 학생에 대한 전원 구속 방침이 선포됐고, 마구잡이 연행과 대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방해하기 위한 검문검색과 원천봉쇄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러한 무리한 연행이 김준배(한총련 투쟁국장) 학생의 죽음을 몰고 갔다.

한총련에 대한 국민 정서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시민·사회단체도 한총련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한총련의 허물을 정부의 위기탈출용으로 이용하며, 폭력적 대응으로 치달았던 정부에 대한 반감은 깊어갔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을 무시하며 마구잡이식 한총련 사냥에 나선 불법 사냥꾼일 뿐이다.

#### 벼랑으로 내몰린 봉급생활자

퇴직금지금 제한, 실업 양산 위기

97년 한국경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제벌체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본은 연초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부도사태 행진을 벌였으며, 이어 외환위기·금융위기 상황을 초래한 끝에, 급기야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 와중에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은 계속 벼랑으로 내몰렸

다. 정권초기 2% 수준이던 실업률이 97년 상반기 들어 3% 선까지 증가하는 등 고용불안은 확산됐으며, IMF의 개입과 정리해고제 도입 계획 등으로 인해 실업의 고통은 사회전반을 짓누르게 되었다.

한편, 8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기업의 파산시 퇴직금을 우선변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려 1천 2백만여 봉급생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임금과 더불어 봉급생활자의 주된 생활유지 수단인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떠밀리고 있다.

#### 전자주민카드 국회통과

전자감시시대 도래 하는가

지난 11월 17일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 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94년 2월 행정세신위원회의 기획과제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선정한 지 3년만에 근거법률을 마련한 셈인데, 2,735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집행했다는 데 비난이 쏟아졌다.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정보유출의 위험성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과 이에 따른 감시통제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전자주민카드 시행 여부는 안개에 싸여 있다. 12월 14일 대통령후보초청 합동토론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집권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나 내년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없이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검열의 칼, 재단에 오른 인권영화제

인권운동가 서준식 구속

지난 해 10월 24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강제하는 음비법 17조와 사실상 심의기구인 한국공연예술통합발전회의 탄생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은 중소 영화제들은 검열의 칼날 앞에 영화제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다.

올해만 해도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 시민영화제가 상영작품을 대거 취소했고, 독립영화제 인디포럼97은 파형을 겪었다. 또한 쿼터영화제는 무산되었고, 인권영화제는 당국의 상영장소 폐쇄와 관련자 구속에 맞서 항의연장상영에 이르는 기나긴 고난의 행군을 감내해야 했다.

급기야 검찰은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제주 '4·3 양민하

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반 혐의로 인권영 화제 집행위원장인 서준식 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 영장실질심사제 10개월만에 개악

피의자 인권보장 큰 폭 후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영장실질심사제)는 첫 시행으로 96년 인권뉴스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었다. 그러나, 10개월만의 중도하차라는 '치욕'으로 다시 97년 인권뉴스에 오르게 되었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의 정착이라는 평가를 받은 영장실질심사제는 수사초기 경찰의 고문과 가혹수사가 대폭 사라졌다는 구체적인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이전보다 구속자 수가 25%가 줄어 형사피의자 25%가 불필요한 구속을 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속영장 발부시 담당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 심문할 수 있다'는 임의적 실질심사가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다'는 형식심사로 바뀌게 되었다.

### 헌재,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서준식·함세환·방양균 사법처리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보안관찰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신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제한을 거의 가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최초로 구속되었고, 올 11월 또다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씨의 문제제기에 대한 응답이다. 서씨는 △전향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자신의 주거, 가족사항,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서씨 외에도 9월 함세환(출소 비전향 장기수) 씨가 각종 집회에서 자신의 북한송환 문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11월 방양균(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복역출소) 씨가 출소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 ■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

<인권기여자>

서준식/ 민가협/ 권영길/  
북녘동포돕기운동단체/ 김대중

설문에 응한 다수가 인권활동가 서준식 씨를 꼽았다. 또한 지난 9월 2백회를 돌파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이끌어온 민가협 어머니, 1월 총파업투쟁을 이끈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북녘동포돕기운동단체 가운데 13명의 북한난민과 생사를 함께 한 통일강냉이모임과 북녘동포시리즈를 기획보도한 <한겨레 신문>이 지목되었다. 또한 역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인권옹호자로 꼽은 점이 눈에 띈다.

<인권침해자>

김영삼/ 안기부/ 보수언론/ 헌법재판소

매해 인권침해자의 이름을 벗지 못한 김영삼 대통령이 올해에도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총책임자로 최다표를 받았다. 그리고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간몰이에 앞장선 '보수언론'이 인권침해자로 지목되었다. 특히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이 많이 거론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목된 것은 1천2백만 봉급자의 비난을 받은 퇴직금 우선변제헌법불합치 결정,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등을 내린 것이 주된 이유이다.

### 97년을 마감하며

97년 인권10대 뉴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올해 최대 인권뉴스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관련, 전국적 총파업 투쟁 전개'였다. 1월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42명 중 128명이 선택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구속'이 다음으로 많은 표(110표)를 얻었다.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난민이 한국대사관의 외면으로 베트남 지뢰지대에서 실종된 사건(12월),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 교수 구속영장 기각(11월), '청소년 보호' 빌미로 만화가 이현세 씨등 소환조사·만화인 대립기소(7월) 등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에 걸었던 기대도 잠깐, 사상 최악의 '국가부도' '실업대란'의 위기 속에 국민들은 타들여가는 가슴을 졸이며 긴 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길고 긴 공안터널을 지나고 나니, 벼랑 끝에 몰린 생존권 문제가 큰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 오늘날 인권의 현주소다.

# 인권하루소식

## 합본 9호 색인

### (제915호 - 제1035호)